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571-01



포용국가와 혁신 : 사회정책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영준·박일주·최혜진·유정민·윤성열·조원희·노혜상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원】

박일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최혜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정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윤성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조원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노혜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포용국가와 혁신 : 사회정책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영준·박일주·최혜진·유정민·윤성열·조원희·노혜상

제출문

교육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한 「포용국가와 혁신: 사회정책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충용

< 목 차 >

< 연구 요약 >	i
-----------------	---

제 1 장 혁신을 촉진하는 포용적 사회정책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하여

I. 서문	2
II. 맥락: 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가?	3
1. 생산성의 역설과 산업/노동시장의 이중화	3
2.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동시적 현상	5
3. 인적자본의 낮은 활용률 및 미스매치	6
4. 사회적 난제의 심화와 시민의 역할 부상	7
III. 한국 혁신에 대한 비판적 검토	8
1. 혁신 개념과 성과	8
2. 혁신의 문제점	11
IV.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2
1.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과 혁신으로	2
2. 혁신과 포용은 공존	23
3. 실패에 대한 포용	24
4.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례: 스웨덴	28
V.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3
1. 포용적 사회정책의 구성과 혁신과의 메커니즘	2
2.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과의 선순환 메커니즘	48
3.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37
VI. 결론: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	4

부록 1. 혁신지표의 성격에 대한 논쟁과 경제혁신의 유형	4
부록 2. 스웨덴의 휴가제도	49
부록 3. 포용에서 경제혁신으로의 경로	5
참고문헌	57

제 2 장 혁신을 촉진하는 포용적 사회정책 (PPT 발표자료)

I. 국문본 발표자료	66
II. 영문본 발표자료	86

제 3 장 포용국가는 창의성을 발현시키는가

I. 서론	108
II. 이론적 배경	109
1. 창의성의 중요성 및 발생요인	109
2. 복지국가와 창의성에 대한 논의	114
III. 연구방법	117
1. 연구 자료와 분석방법	117
2. 연구모델	118
IV. 분석결과	121
1. 기초통계	121
2. 다중회귀분석결과	123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27
참고문헌	128

제 4 장 포용국가는 혁신수용성을 높이는가

I. 서론	134
II. 선행연구 고찰	135
1. 기술혁명이 미치는 영향	135
2. 혁신에 대한 수용성	136
III. 이론적 논의	137
1.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성	137
2. 업무의 특성	140
IV. 분석 방법	141
1. 데이터 수집 및 변수측정	141
2. 순서형 로짓 분석	145
V. 연구 결과	145
1. 기초통계 분석	145
2.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	146
VI. 결론	148
참고문헌	150

제 5 장 포용국가는 사회혁신을 증진시키는가

I. 서론	156
II. 이론적 배경	158
1. 사회혁신의 개념	158
2. 사회혁신의 조건	159
3. 사회혁신에 대한 선행연구	161
III. 방법론	164
1. 자료와 변수	164

2. 분석모형	166
IV. 분석결과	168
1. 기술통계 분석	168
2. 다층모형 분석결과	172
V. 결론	174
참고문헌	175

연구 요약

대한민국은 기술혁명과 저출산고령화, 증가하는 탈세계화 경향과 무역마찰,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변환의 흐름 앞에 놓여있다. 거대한 변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은 다양한 난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혁신과 생산성의 끊임없는 압력에 놓여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불평등과 배제의 정치를 극복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슬로건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가장 일반적 인식은 서로 반비례 관계인 혁신과 포용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과 포용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혁신이 더욱 잘 일어나며, 혁신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높은 복지혜택과 이로 인한 조세부담은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혁신을 하는 국가들의 성과를 포용적 국가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과 실증적 증거들은 포용적인 제도들이 오히려 혁신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정책들은 개인들이 안정된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도와주며, 동시에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동기와 행동을 강화시켜 혁신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동시에 포용이 사회적 자본과 연대감을 높여서 참여와 자치를 강화시키고 사회혁신을 높이는 기제가 된다. OECD와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강조하고, 불평등의 감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유럽연합의 유럽 혁신순위(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보면 가장 높은 순위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순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혁신과 포용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처해있는 맥락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포용적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체제를 진단한다. 정부주도의 혁신지원이 꾸준히 확장되어 왔지만, 여전히 소수에 의한 혁신이 지배하고 있으며, 창의성이 부재하고, 청년들이 기업가정신을 추구하기보다는 과도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현재의 경향성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높은 생계형 창업과 혁신에 대한 낮은 수용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사회혁신을 추동하기에 신뢰라는 기반이 약하고, 결국 실제 사회혁신에 참여하는 이들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이동하기 위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가장 가까운 혁신적 포용국가 사례로서 스웨덴을 제시하였다. 혁신과 이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소수기업에만 집중되고 이중화를 가져오는 배제적 성장 방식에서 풀뿌리 혁신을 통해 생산성의 고른 성장이 전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포용적 성장 방식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포용적 사회정책과 포용적 혁신은 선순환 할 수 있는 관계임을 제시하고, 안정된 사회보장 속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혁신적 활동을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 때 대기업과 전통산업 위주였던 스웨덴이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창업혁신 국가로 변모한 사례에 주목하면서 경제혁신과 함께 안정된 사회보호 정책과 교육이나 가족친화정책과 같은 사회투자정책이 이러한 성공의 기반이 되었음을 제시하였다.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경제성장의 저하와 이로 인한 고용의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삶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혁신이 포용적 정책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미국과 같은 배제적 경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배제적 경로가 아닌 포용적 경로를 채택하는 것이 혁신의 지속가능성에도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요소인 포용과 혁신의 관계를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포용적 사회정책은 개인에게 자유와 안정을 주고, 위험감수성향과 인적자본의 증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동시에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진 이들이 많아질 때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혁신이 다시 고용과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지국가를 유지하게 하는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소수 기업의 생산성의 폭발적 증가가 국가의 생산성 증가라는 착시를 넘어서 모두가 과학기술 혁신과 함께 기업과 사회에서 수많은 작은 혁신을 만들어내면서 포용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은 선언만 가지고 가능하지는 않다. 포용적 사회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이 GDP 대비 10%인데 반해서 OECD 평균은 20%이며 프랑스나 핀란드와 같은 국가는 30%에 이른다. GDP 10%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약 180조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대대적인 투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며,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보건의 자동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더 많은 복지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직적이고 조건이 붙은 복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증진될 것이다. 시장적 자유주의가 아닌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실질적 자유가 증진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은 쉬운 길은 아닐 것이며, 끊임없는 실험과 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의 두 장에서는 혁신과 포용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창의성과 혁신의 수용성을 실증적으로 다루었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사회혁신에 미치는 포용의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포용국가는 창의성을 발현하는가?)

지식기반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의성은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그렇기에 창의성 연구는 그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거시적 사회환경인 제도와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가 부여하는 안정성이 창의성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단이라 가정하여, 복지국가의 안정성이 일상적 창의성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투자 국가와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어떠한 제도 요인들이 개인의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중 OECD 9개국 9,391케이스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별로 창의성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복지레짐별, 계층별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 지출 수준, 가족영역 사회지출 수준, 근로연령대 사회지출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평등 수준은 개인의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투자정책의 확대와 포용정책의 확대가 창의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즉,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 속에서 수많은 혁신을 촉진해야 하는 한국에 적합한 복지국가의 형태는 보편적 사회투자국가임을 시사하고 있다.

(포용국가는 혁신수용성을 높이는가?)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사회 및 개인의 삶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벌어진 인식의 격차가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로의존적인 공공정책과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정책 사이에 접점을 찾기 어려워 혼란을 유발할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가? 본 연구의 핵심은 개인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이 미래에 대한 예측, 더 나아가 변화에 대한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개인이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성을 경험했는지 여부가 미래에서의 삶, 그리고 직업에 대한 예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2018년 기준 19~69세의 한국인 1,047명에게 조사한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음의 두 가지 질문 “1) 나의 삶은 좋아질 것이다 2) 나의 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고, 응답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미래의 직업 변화 예측에 활용해 온 직무특성이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및 고용 불안정을 경험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안정성이 기술혁명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숙련도가 높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직업이 반복적인 것은 기술혁명 사회의 예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기술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삶에 대한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와 연관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포용국가는 사회혁신을 증진시키는가?)

최근 서구사회와 우리나라에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사회문제가 복잡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제도분석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조직의 크기에 집중하고 있어, 사회혁신 역량의 근원을 형성하는 혁신역량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과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활용하여 ‘사회혁신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개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조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거시 맥락적 변수가 사회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지출이 높고, 실업률이 낮으며 규제가 낮은 국가의 개인은 사회혁신활동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사회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주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혁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 수준의 혁신에 미치는 거시적 맥락적 요인을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제 1 장

혁신을 촉진하는 포용적 사회정책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하여

I. 서문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가장 일반적 인식은 서로 반비례 관계인 혁신과 포용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과 포용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혁신이 더욱 잘 일어나며, 혁신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일으킨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Acemoglu et al.(2012)는 자본주의를 ‘치열한 자본주의(cutthroat capitalism)’와 ‘따뜻한 자본주의(cuddly capitalism)’로 나누어 혁신과 포용과의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치열한 자본주의에서는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혁신을 창출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혁신을 무임승차하면서 이용하는 또 다른 자본주의가 있다는 것이다. 혁신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후자에서는 창출된 혁신의 이용자로서 ‘따뜻한’ 정책을 펼치며 더 큰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높은 복지혜택과 이로 인한 조세부담은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Henrekson & Rosenberg, 2001).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과 실증적 증거들은 포용적인 제도들이 오히려 혁신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정책들은 개인들이 안정된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도와주며, 동시에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동기와 행동을 강화시켜 혁신을 높인다는 것이다(Mkandawire, 2007; Filippetti & Guy, 2015; Bell et al., 2017). 동시에 포용이 사회적 자본과 연대감을 높여서 참여와 자치를 강화시키고 사회 혁신을 높이는 기제가 된다. OECD와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강조하고, 불평등의 감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임을 주장하고 있다(OECD, 2016; IMF, 2017). 또한, 2018년 유럽연합의 유럽혁신순위(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보면 가장 높은 순위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순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European Union, 2018). 이러한 증거들은 혁신과 포용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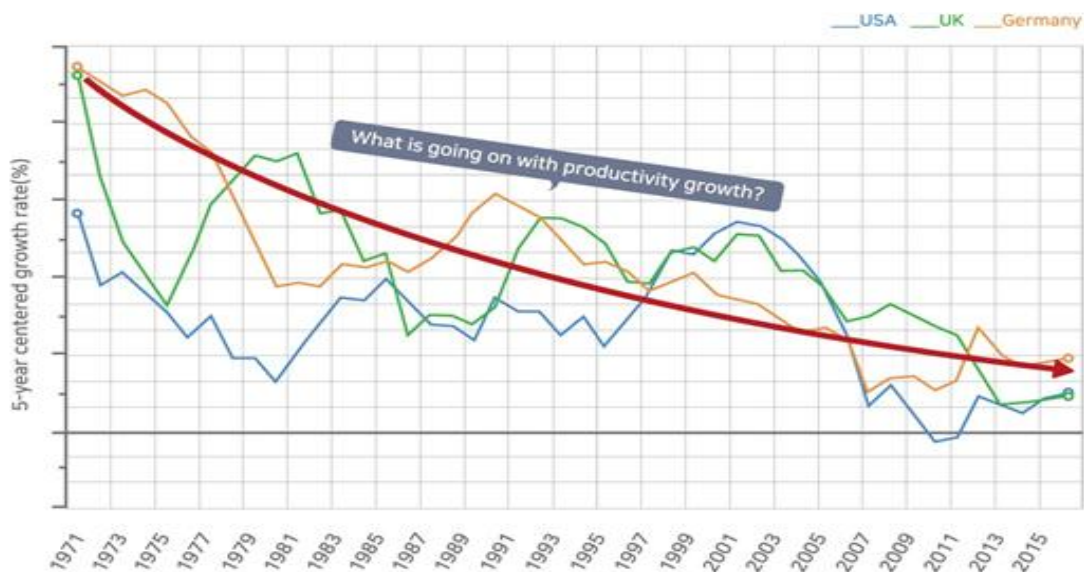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경제성장의 저하와 이로 인한 고용의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삶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혁신과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삶의 질과 복지를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삶의 안정과 함께 혁신이 가져올 불평등을 대처하기 위해서 포용의 아젠더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요소인 포용과 혁신의 관계를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맥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한국 사회경제체제에서 혁신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 현재의 잠재적 혁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맥락: 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가?

1. 생산성의 역설과 산업/노동시장의 이중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달과 확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생산성 지표의 추이는 생산성의 변화가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와 같이 주기적으로 생산성이 다시 증가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1970년대 이래로 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더욱 회자되고 있는 최근에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Gordon(2012)은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향후 최소 20년 동안은 20세기 중후반에 일어났던 놀라운 속도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하였다.

그림 1. 미국, 영국, 독일의 생산성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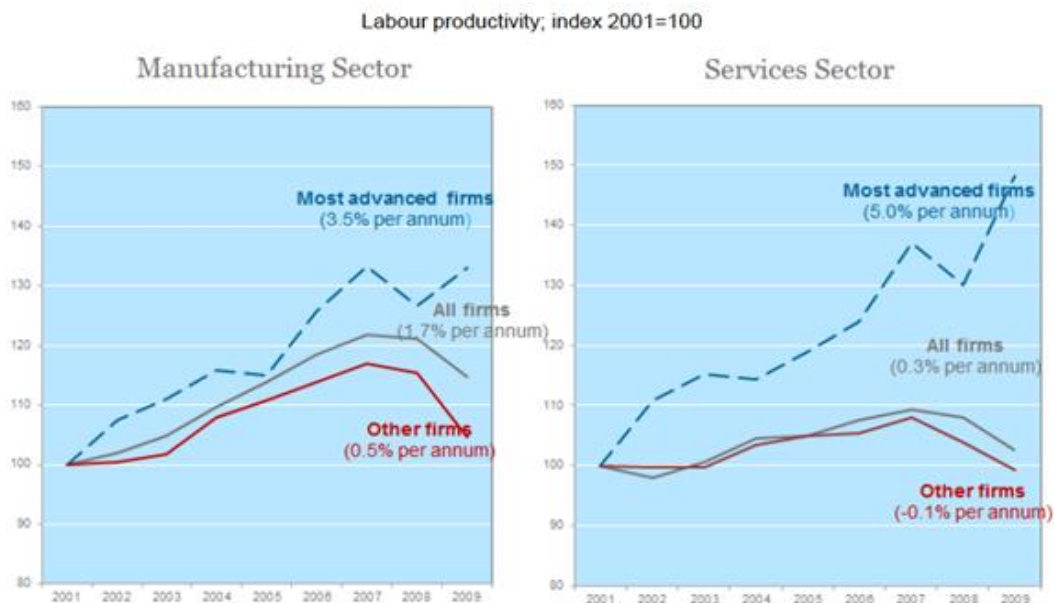
출처: Deznat Zukunft (2018)

이러한 현상을 생산성의 역설(productivity paradox)라고 칭하기도 한다. 생산성의 역설에 대한 논의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부터 보였던 IT업계의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Solow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IT업계의 생산성 증가율을 넘어서 기술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OECD, 2016; Soete, 2018). 왜 생산성의 역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기술 발전이 아직 충분히 경제적 이익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현재의 생산성

지표가 진정한 기술발전의 혜택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OECD(2016)를 포함하여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요소는 불균등 성장과 포용적이지 못한 성장의 문제점이다.

다음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제 일부 고성장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많은 이들이 예측하듯 2000년 이후로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기업이 아닌 경제에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의 생산성이다. 가장 생산성이 좋은 기업들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2000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단위에서는 기계의 도입이나 자동화를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면 생산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국가단위로 볼 때 그 기업에서 자동화로 인해서 밀려난 인력이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저숙련으로 전락하게 되는지에 따라 생산성 증가율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에서 절대 다수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생산성만큼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중요하다. 이 부분이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국가의 생산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OECD 국가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변화



출처 : Andrews, Criscuolo and Gal (2015)

혁신이 장기적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는 David Gordon이나 Eric Bryn은 불평등이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 Gordon은 불평등과 함께 혁신이 당면한 4가지 장애물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불평등, 고령화로 향해가는 인구변화, 충분하지 못한 교육, 그리고 증가하는 부채이다.

2.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동시적 현상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세계 경제에 편입하여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은 한국경제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한 이유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넘었던 적도 있었다. 그 이후로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과 멕시코 다음으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20% 정도인 것에 반해서 우리는 거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무역과 세계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3. 국가 GDP 대비 수출입에 대한 의존 비중 (단위: %)



출처 : World Bank (2019)

한국이 세계화에 편입되는 방식은 다른 국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립형 자본주의' 방식을 채택한 한국은 소재나 부품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비교우위의 논리 속에서 소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세계경제에 위치를 하였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이 강했던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삼성을 위시한 대기업들은 원천기술보다는 기술을 이용하여 조립하고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화 시대에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적 민족주의의 부활과 탈세계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 있었던 일본과의 무역마찰은 한국의 원천기술 부재가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전 세계 히트챔피언(강소기업)들 볼 때 한국은 독일의 1/60 그리고 일본의 1/10 수준이다. 또한,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폴란드보다 적은 23개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탈세계화가 심화될 경우 우리의 경제가 현재와 같이 유지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생산성은 수출주도형 및 조립

형 자본주의 생태계 속에서 매우 낮게 유지되어 있다.

그림 4. 히든 챔피언의 국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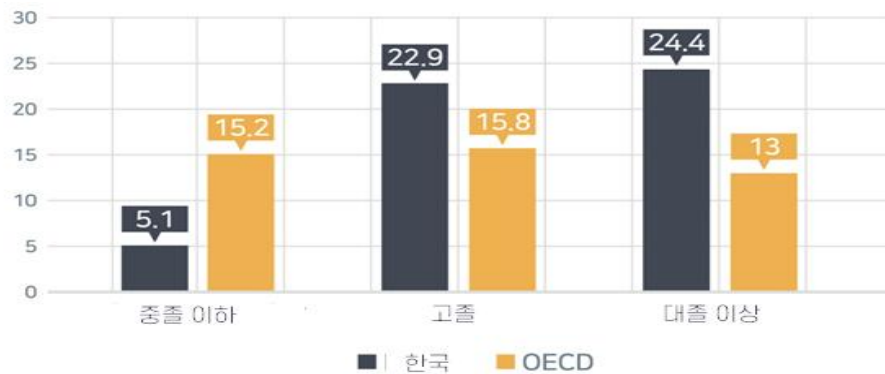


자료: Simon Kucher & Partners (2014)
<https://www.slideshare.net/GregorioLato/simon-kucher-hermannsimonhiddenchampions>
 - Hidden Champion: 한 품목에서 세계 3위 이내거나 각 대륙에서 1위인 중소기업(수입 연 50억유로 미만)

3. 인적자본의 낮은 활용률 및 미스매치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는 거의 70%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대학진학률의 상승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그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70%가 대학에 가지만, 이들이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로 나타나게 되며, 다른 관점으로는 인적자본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년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의 NEET 비율이 OECD 국가가 13%에 지나지 않는데 반해서 한국은 24%에 이르고 있다(그림 5). 청년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저활용은 여성과 성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잘 알려있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교육수준에 비해서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임금격차 역시 상당히 높다. 한국 성인의 경우 숙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바 있다(반가운, 2016). 인적자본의 현재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인적자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림 5. OECD와 대한민국의 NEET 비율 비교



출처 : OECD(2014a) Education at a glance

4. 사회적 난제의 심화와 시민의 역할 부상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Bulut et al., 2013).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실제 사회적으로 무용(“socially useless”)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경제영역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성과가 사회, 환경, 문화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Hubert, 2010). 특히,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난제화(wicked problem) 경향을 보이며,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접근 방식은 너무 경직적이거나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Weber & Khademian, 2008). 이에 최근 시민들의 자발적/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 섹터와 같은 비정부부문의 혁신주도성, 기술발전이 사회혁신에 기여할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이 별도의 영역으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성 속에서 상호 간 엮여져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의 상호성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미국과 유럽의 비영리섹터 역할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최근 비영리부문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역할과 함께 경제위기 시기의 사회적 잠재력을 보존하는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Graddy-Reed et al., 2015).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후 미국에서 민간부문의 총임금수준은 7% 가량 감소하였고, 신규창업 역시 심각하게 감소하였다(US Bureau of Labour Staticstics, 2015). 총임금(total wages)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감소하였으며, 사업체 숫자도 2010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같은 시기 비영리 부문은 고용 총량이 상승하였고 경제회복이 이루어진 2011년 이후 민간부문의 고용량과 연간임금이 비영리섹터를 상회하여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Friesenhahn(2016)는 비영리부문이 경제위기 시기에 민간부문의 고용감소 위험을 완충하고 흡수하여 이후 경제회복기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

였다. 유럽에서도 비영리 섹터는 무역이나 제조업 분야에 버금가는 고용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핵심적인 부문이며,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행위자로 지목되고 있다(Salamon & Sokolowski, 2018). 그러나 2015년 전후로 미국과 유럽에서 제3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이 20%와 15%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섹터의 고용비중은 5% 수준이다. 더욱이 이 인력들도 대체로 공익법인에 편중된 양상을 보여 서구사회에 비해 상당히 저발달된 양상을 보인다.

III. 한국 혁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혁신 개념과 성과

1) 개념

우리의 혁신 수준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혁신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혁신의 정의 및 범위에서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합의된 것이 없으며,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혁신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Schumpeter(1934)는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new combinations” of new or existing knowledge, resources, equipment, and other factors)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창출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의 논의는 발명(invention)이 어디에서든 상업화(commercialization) 목적 없이도 발현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혁신은 경제적 영역에서 상업화 목적을 갖고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specific social activity) 혹은 기능(function)이라고 구별했다. 이후 혁신을 정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다 Romer(1986)의 논의가 혁신을 새로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생산성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꼽아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혁신 관련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에 주목한 것으로 새로운 상품의 도입(introduction)에 초점을 두었다면, Aghion & Howitt(1992, 2009) 등은 기존의 상품을 다듬는 ‘질적 개선’을 통해서도 일찍이 Schumpeter가 논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가능하다고 제시하며 혁신의 점진적(incremental) 측면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또한 주목할 만하다. Oslo Manual(2005)에서도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혁신을 새롭거나 상당 수준 개선된 상품(제품 및 서비스)으로 혁신을 측정한다.

한편 Drucker(1985)는 혁신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특정한 도구(specific instrument)라고 말하며 혁신의 개념을 기술 개발이나 기업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시스템 내 일어나는 광범위한 것이라 언급하여 혁신 개념의 논의 범위를 확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혁신이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OECD(2010), Gault(2018) 등이 언급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의 주체는 개인, 기업, 시민사회, 국가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하는 혁신 활동은 비단 영리 목적 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활동도 포함한다. 즉, 혁신은 단순히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측면에서든 새로운 면을 지니고 가치를 창출하며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의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면을 지니고 가치를 창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경제혁신이라고 부른다면, 사회적 측면의 같은 활동을 사회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혁신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기업가정신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도 확대 적용되는 추세이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 기업가정신의 특성에 기반하여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게 구성된 개념이기 때문이다(배귀희, 2011; Pestoff, 1998). Tan et al.(2005)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단순히 개인적 이익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가치 제공을 하는 기업가 활동이라 정의함으로써 이 역시 명확하게 기업가정신에 속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혁신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 중 하나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ugg-Levine & Emerson(2011)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임을 확실히 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또한, 경제 조직으로서 자본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가치 추구가 보호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목적 추구가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utio et al(2014)에서도 기업가정신에는 산업/기술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맥락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며, 조직적, 제도/정책적인 부분과 모두 더해져서 의미를 가짐을 주장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림 6. 혁신유형과 주체의 구분



출처 : Abu-Saifan, S (2012)

이를 종합하면, 혁신(innovation)은 여러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막론하고 혁신을 논한 다수의 논의를 종합할 때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켈로그 경영대학원(Kellogg School of Management) Joe Dwyer 교수가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 측면으로 요약 정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 Dwyer는 혁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첫째, 새로운 면(newness)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가치(value)를 창출하는가? 셋째, 문제를 해결(solution)하는가? 등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¹⁾ 그리고 혁신의 영역은 다음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체는 비영리와 영리 모두 가능하며, 경제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가 모두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가는 모두 비영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영리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가인 유형도 가능하다(최근의 social start-up이 여기에 해당됨).

2) 성과

한국은 IMF 외환위기 극복 후 각종 경제 부흥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혁신 정책을 집행해왔다.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및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2018년 기준 1인당 GDP 세계 28위, Global Innovation Index 2019²⁾ 기준 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 우리의 경제규모의 지위에 비해서 혁신지수가 훨씬 높은 수준이며, 구체적으로는 매 정부마다 혁신은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벤처-신지식인 정책, 참여정부 시절 동반성장 정책,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 정책,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정책 등의 정책 기조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이른 것이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요소투입형(factor-driven)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혁신 기반 경제성장을 꾀하며 경제선진국 추격형 성장 모형 대신 탈(脫)추격형 모형을 기반으로 하자는 정책 의도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혁신뿐만 아니라 사회혁신도 2000년대 참여정부 때부터 정부가 제도지원을 급속히 확충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진행을 유도하여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래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지원이 이어졌다(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17).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6년 Economists에서 발간한 사회혁신 국제평가에서 한국이 12위에 위치한 바 있다³⁾. 재정, 사회, 기업가정신, 정책 및 제도 중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5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혁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일까?

1) Joe Dwyer, "What is innovation: why almost everyone defines it wrong" Retrieved from <https://digintent.com/what-is-innovation/>

2) 혁신지표 내용에 대한 논쟁은 부록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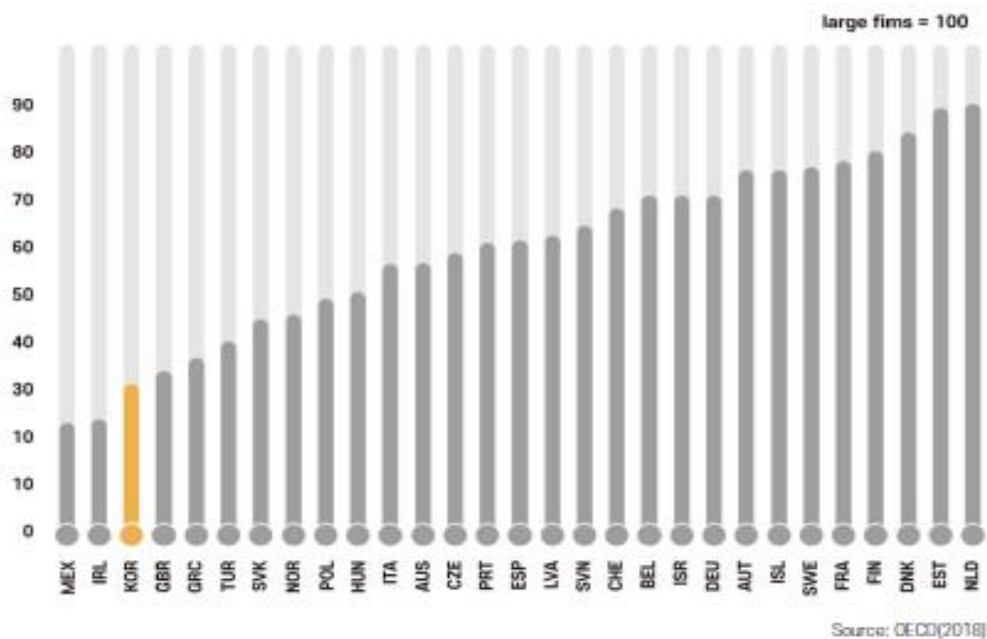
3) <https://perspectives.eiu.com/technology-innovation/us-tops-index-measuring-capacity-social-innovation> (2020년 1월 23일)

2. 혁신의 문제점

1) 소수에 의한 혁신

혁신이 지속가능하게 일어나고 포용적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 일어나는 기반이 넓고 주체가 다양한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혁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혁신의 기반이 넓지 않고 소수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소수에 의하여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임금과 생산성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상당히 크다. OECD(2018b)에 따르면 대기업의 생산성이 100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약 30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는 70-80%에 이르고 있다.

그림 7. OECD 국가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2014년)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임금격차로도 이어진다. 노민선(2018)의 연구를 보면 한국에서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5-9인 사업장 임금은 48이며, 1-4인 사업장은 33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1-4인 사업장 임금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서 79에 이르며, 일본은 66, 프랑스는 59 수준이다. 즉, 생산성 격차의 차이가 임금 수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산성 격차의 차이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함의하기도 한다.

표 1.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비교 (500인 이상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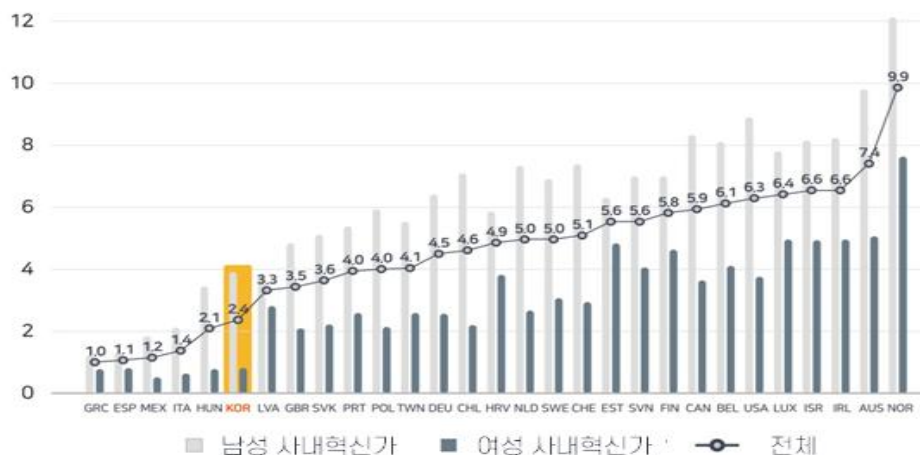
(단위: PPP 기준 US \$, %)

구분	한국(2017)		미국(2015)		일본(2017)		프랑스(2015)	
	평균임금	비중	평균임금	비중	평균임금	비중	평균임금	비중
1~4인	1,990	32.6	3,731	78.8	2,697	65.7	3,083	58.8
5~9인	2,945	48.3	3,071	64.8	3,166	77.1	3,321	63.4
10~99인	3,490	57.2	3,450	72.8	3,438	83.8	3,625	69.2
100~499인	4,267	70.0	4,029	85.1	3,605	87.8	4,164	79.5
500인 이상	6,097	100.0	4,736	100.0	4,104	100.0	5,238	100.0
전체	3,302	54.2	4,200	88.7	3,616	88.1	3,811	72.8

출처 : 노민선(2018)

보다 구체적으로 혁신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은 사내혁신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업 내에서 혁신에 종사를 하고 있는 이들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Global Entrepreneur Monitor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기업 내에서 혁신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은 2.4%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치가 놀라운 것은 한국의 대부분의 혁신이 창업혁신가보다는 기업의 사내혁신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고용인 중에서 혁신활동을 하는 이들은 매우 소수라는 점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혁신 활동이 존재하지만, 위계화된 기업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창의적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향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단순업무를 하거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들이 많게 되면 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사내혁신가 중 여성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가 우리나라이기도 하다.

그림 8. 사내혁신가의 비중



2) 창의성의 부재

기술혁명 시대에 창의성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범용성을 갖는 AI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산업 범위가 넓어지며,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 역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Karakaya, 2017). 정형화된(Routinized)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은 AI, 자동화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비정형적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Goos et al.(2014)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비정형적 업무의 증가는 노동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게 한다. 이 경우 노동자들에게 신속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창의성은 필수적이다. AI의 발전이 반복적인 직무를 가진 직업들을 없애고 있어, 이들이 기술혁명에 의해 위기를 맞을 것이다. Frey & Osborne(2013)은 컴퓨터 기술이 정형화(Routinized)된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그 수준은 무려 미국 일자리의 47%가 될 것으로 예측하여,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Nedelkoska & Quintini(2018)의 논의처럼, 각 국가의 일자리 대체 위험성은 산업구조나 자동화 진행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정말 직업이 대부분 AI와 자동화기술로 대체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Arntz et al(2016) 연구에 따르면, 직업 중 9%가 자동화에 의해 소멸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준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미래에 사라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Acemoglu & Autor, 2011; Autor, 2015).

그림 9. 창의성의 수준



창의성의 시대적 중요성에 비해 한국사회 전반적으로는 창의성의 부재가 두드러진다. 최영준 외(2018)에서는 제6차 World value survey를 통해 자신의 업무가 반복적인지 창의적인지를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종속적으로 하는지를 묻고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의 노동자들은 상당

히 자신의 재량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답한 데 반해 스페인이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응답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LAB2050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얼마나 창의적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연령이 낮을수록이 아닌 높을수록 창의적이라는 응답이 나온 바 있다. 20대가 스스로를 창의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상당히 흥미롭다.

이러한 창의성의 부재는 혁신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9년 11위를 기록하였지만, 창의성 관련 지표는 상당히 낮다. 특히,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생산 및 온라인 창의성 측면에서 다소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창의적 성과 전체 순위(17위)가 혁신 전체 순위(11위) 대비 낮다(Cornell University, INSEAD, & WIPO, 2019). 여기서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란 ‘문화-창의서비스 수출’, ‘영화 제작’,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시장’, ‘출판과 미디어 제조업’, ‘창의적 제품의 수출’ 등을 의미하며, ‘온라인 창의성’이란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의 유지’, ‘ccTLD(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의 유지’, ‘위키피디아 출간’, ‘휴대폰 앱 개발(3년 평균치)’ 등을 의미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관련 순위가 무형자산 관련 순위보다 낮다는 것이다. 상표권이나 산업디자인권, ICT 기반 비즈니스 모델 등을 창출하는 데에는 능하나 무형의 창의적 서비스의 생산 및 수출 측면에서 부진하다는 것은 가시적 성과에 집착함에 따른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논문이나 특허 등 혁신 산출물의 질을 고려하는 이들이 비판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네덜란드 Leiden 대학교의 과학기술연구센터(Centrum voor Wetenschap en Technologische Studies)가 발표하는 연구물 기반 대학평가지표인 ‘Leiden Ranking 2018’에서 서울 대학교가 논문 편수⁴⁾로는 세계 9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논문 대비 인용도 상위 10% 논문의 비율을 비교하면 상위권에 들지 못한 것⁵⁾, 매년 기술 수출이 부진하여 기술무역수지비⁶⁾가 1 이하인 것 등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3) 과도한 안정성 추구 경향

기업가정신이란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을 하고 높은 보상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회를 이용해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Babu & Manalel, 2016), 성취에 대하여 강력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위험을 적절히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McClelland, 1965). 이러한 성향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많은 결정을 내리며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창업가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혁신 및 창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업가정신 및 혁신기업가(entrepreneur)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4) Total number of publications of a university in the period 2014-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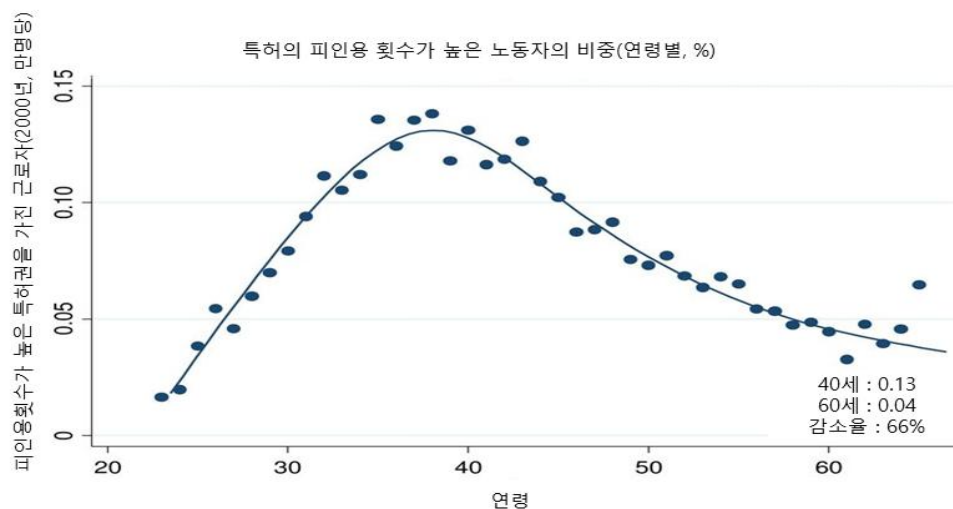
5) 물론 이를 해석할 때에는 전체 논문 수가 클수록 전체 논문 대비 인용도 상위 10% 논문의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형대학이 평가상 불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6) 기술도입액 대비 기술수출액으로 계산하여 기술도입 대비 기술수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수치가 1 이하라는 것은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의미임

Knight(1921)는 혁신기업가를 위험과 불확실성을 계산하고 추려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McClelland(1965)는 성취에 대하여 강력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위험을 적절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기업가정신은 곧 그 국가의 혁신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소가 바로 위험감수(risk-taking)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높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 하고, 그렇게 되면 혁신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각 사회에서 얼마나 위험감수경향이 높은지는 추후 혁신이 얼마나 활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위험감수성향은 중요하다. Bell et al(2017)의 분석에 따르면 특허 인용지수가 높은 결과물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시기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나타난다. 즉, 이 시기가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고,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이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0대 전후 시기에 높은 수준의 혁신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20대~30대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지식기반 창업의 발전에 있어 20대와 30대는 근간이 되는 연령대이다. 10여 년의 도전들을 통해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뛰어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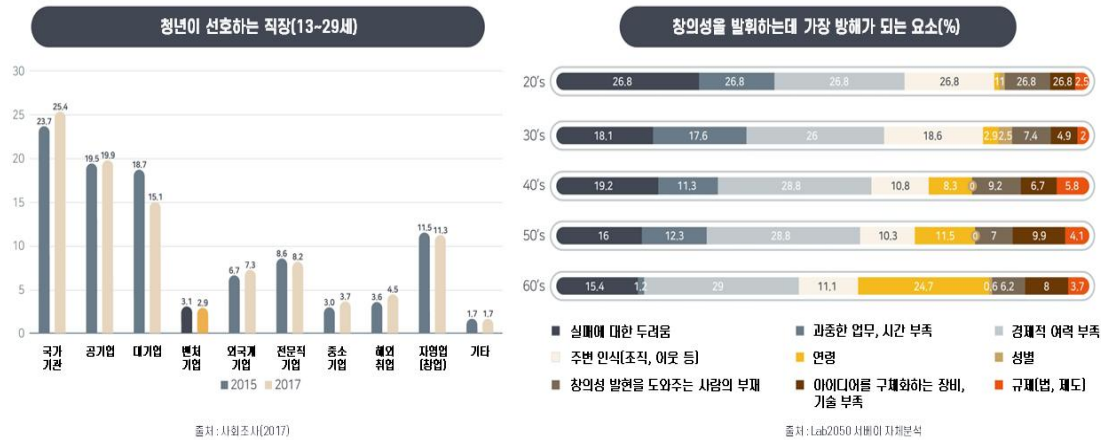
그림 10. 특허의 피인용 횟수와 연령의 관계



출처 : Bell et al(2017)

그림 11을 보면 한국의 청년들이 위험감수성향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원편의 사회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부나 공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심지어 대기업보다도 공공부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단순히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싶은 열망보다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삶을 꾸리려는 경향성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창업혁신가를 의미하는 벤처사업가에 대한 선호는 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11. 위험회피성향과 안정성 추구성향



그러면 왜 위험감수성향이 낮은 것일까? 이미 언급한 LAB2050의 2018년 자료를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20대에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낮아지고, 연령으로 인한 어려움은 나이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안정성 추구성향이 높은 현 20대와 30대에게 혁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추구가 미래 한국의 혁신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7년 기준, GDP는 11위인데 반해,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GEDI, 2018). 이러한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과도한 안정성 추구,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지표이다.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실패를 용인하는 것에 인색하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사회에서의 실패는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감한 도전을 어렵게 하며,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장치도 부족하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GEM, 2015).

4) 높은 생계형 창업 비율

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종류의 창업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는 창업의 양적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단순히 창업을 많이 시도하는 것보다는 질 좋은 창업이 시도되고 그만큼 오래 유지되는 것이 실질적인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창업의 질에 대한 평가는 여러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창업의 동기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다. 생계형 창업은 먹고살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를 일컬으며, 기회형 창업은 더 좋은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에 따르면, 기회형 창업지수가 높을수록, 생계형 창업지수가 낮을수록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국내의 창업 중 21%가 기회형, 생계형이 63%로 나타났다. 이는 덴마크의 경우,

그림 12.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림 13. 열정과 관심 때문에 창업하는 이들의 비중



–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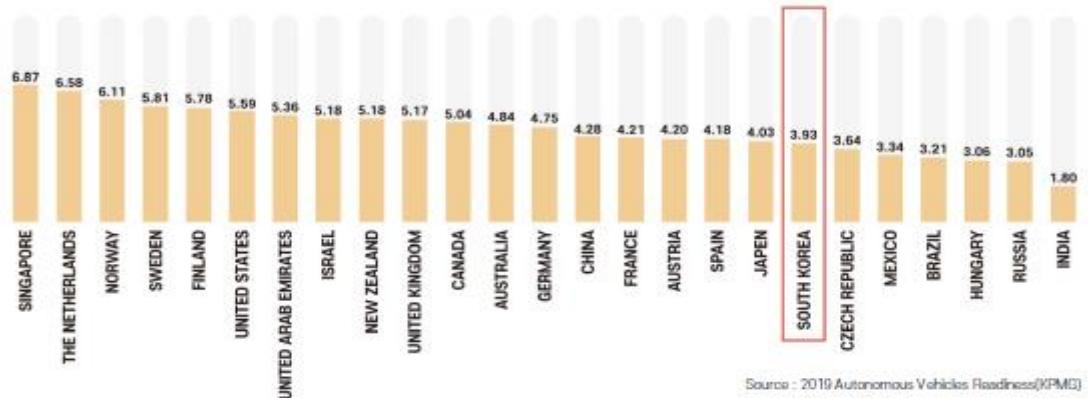
5) 혁신에 대한 낮은 수용성

기본적으로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과정이므로,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은 그 사회에 혁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혁신 저항은 혁신적인 기술 혹은 변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며, 여기서 저항이란 현재 상태에서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소비자의 상태이자 변화에 대하여 느끼는 위협감이다(Ram, 1987). 즉, 이전 상태를 변경하도록 하는 압력에서 이전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Zaltman & Wallendorf, 1983). 이렇게 혁신에 대하여 저항이 높은 것은 혁신의 결과물, 즉 해당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분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운전사와 승객을 필요에 의하여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유사한 서비스가 도입되었지만, 이에 대한 찬성, 반대 혹은 갈등 양상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13년 8월 우버코리아가 출범해 운수사업이 아닌 기술기업으로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3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에 막혀 영업을 종료하였다(강상욱 외, 2015). 그 이후에도 카카오, 카풀 등 승차공유서비스 반대로 이어져 현 시점에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해결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격렬한 반대는 18세기 초, 영국에서 기계에 의하여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기계를 부수었던 러다이트 운동과 닮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 자체를 네오 러다이트 운동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네오 러다이트는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피할 수 없이 생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불신을 의미하는 현대 철학이다. 이들은 기술의 사용이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따라서 기술에 비판적이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며 일부 사람들은 전혀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한 삶을 수용한다(Hunt-Bull, 2006).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혁신적 변화에 대한 수용 및 거부의 정도가 사회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정책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곳에서는 안전망이 탄탄하며, 사람들은 변화에 대하여 위협을 느껴 거부하기 보다는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혁신적 신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 소비자 수용도가 높은 국가들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술력(7위) 및 인프라(4위)를 갖춘 것에 비하여 소비자 수용성은 19위로 낮게 나타났다(KPMG, 2019).

그림 14.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국가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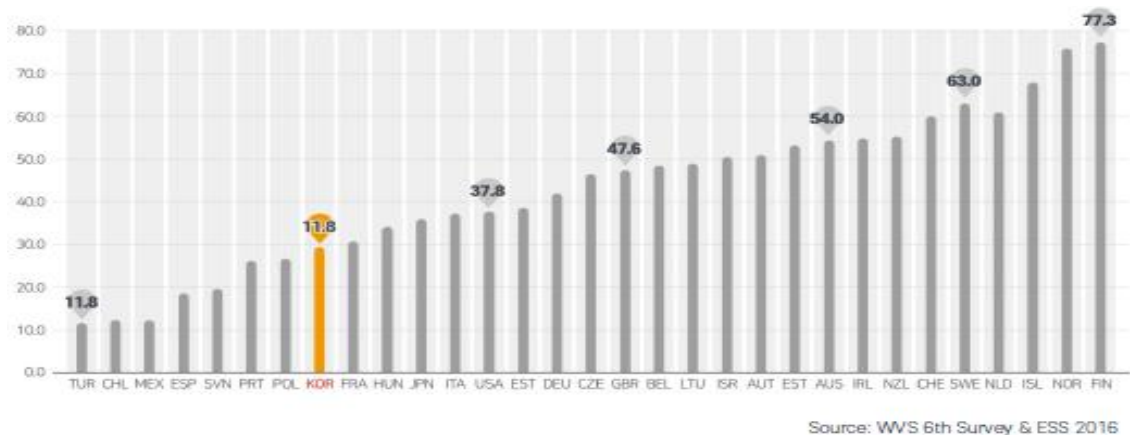


출처: KPMG(2019)

6) 사회혁신의 이슈: 신뢰부족, 사회혁신가부족, 재정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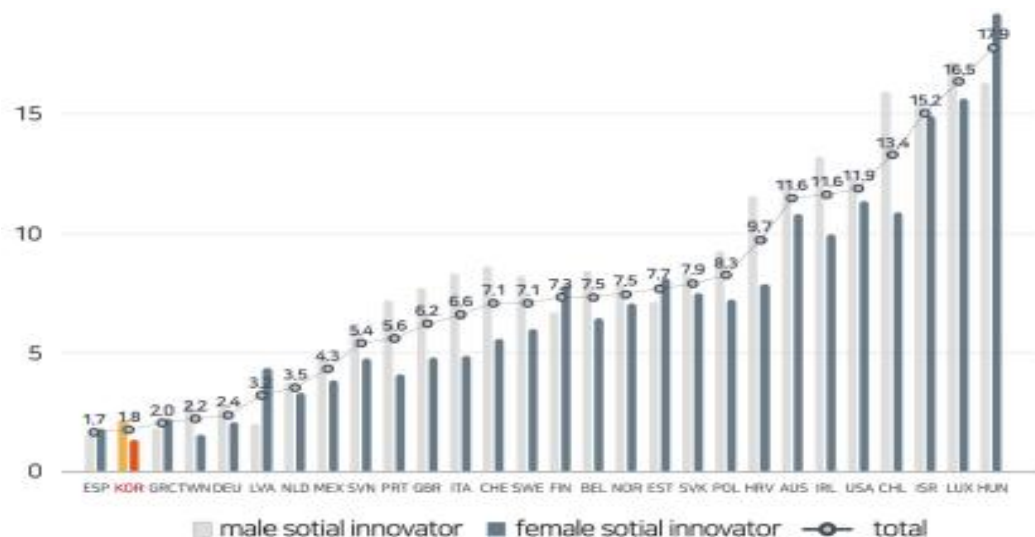
사회혁신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은 사회적 가치를 자각하는 시민사회, 사회혁신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은 사회혁신의 주요한 자원이 된다(Murphy et al., 2015). 사회혁신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개인이나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사회 내의 구성원이 구성원에 대해 가지는 신뢰가 높을수록 많은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혁신 역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WVS(World value survey)와 ESS(European social survey)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신뢰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핀란드를 위시한 북구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60%가 넘는데 반해서 우리 나라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Giving Index(2015)에서도 타인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독일 등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림 15. 사회적 신뢰 비중



사회혁신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그리고 민간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천적 전략으로서, 민간 차원의 창의성이나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회혁신가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동되고 구현된다(미우라 히로키, 2013). 이들은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어 자신의 아이디어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획자(projective agent)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행위자가 된다(Robinson et al., 2012).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혁신가의 활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제시되고 있다. GEM(2015)에 따르면 사회적·환경·공익증진목적의 활동을 최근 시작하고 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선진산업사회 그룹에서 한국이 1.8%로 스페인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활동에서의 여성 비중 역시 37% 수준으로 대만 다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에 의한 지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Economists 사회혁신 순위를 높였지만, 여전히 사회혁신의 저변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림 16. 사회혁신가의 비중



마지막으로, 사회혁신에 있어서 재정은 핵심적 자원으로 인식된다. 사회혁신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혁신을 위해 공공 및 금융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여왔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 OECD, 2019).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혁신 분야의 재정적 역량은 매우 낮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사회영향투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사회영향투자는 대체로 영미국가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는 저조하다. 또한, GIIN(2019)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사회영향투자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사회영향투자 헤드쿼터 비중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IV.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1.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과 혁신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며, 포용적 성장은 포용적 혁신을 기반으로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혁신은 소수 엘리트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의 양극화와 생산성의 양극화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생산성의 역설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소수산업과 기업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로 대체될수록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의 관점에서 국가의 관점으로 시선을 옮기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100명이 100을 생산하다가 10명이 100을 생산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은 놀라운 성장을 한 것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남은 90명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다른 90명이 다른 산업 혹은 기업에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전 국가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저숙련/저임금/저생산성 부문에서 대부분 일을 하게 된다면 생산성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둔화될 수도 있다. 이것이 Soete(2019)가 논의한 ‘뱀의 머리는 앞으로 가지만 꼬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7.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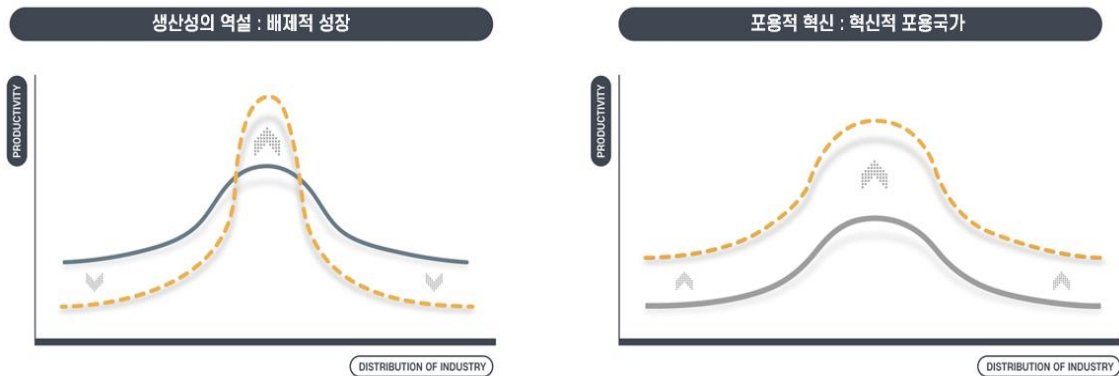


그림 17의 왼쪽과 같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산업/기업이 위로 가고 다른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지체되면 이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이며, 배제적 혁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과거에 비해서 생산성 증가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산성 증가율이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모든 기업과 산업에서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은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의 이전에 있다.

그림 18. 새로운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따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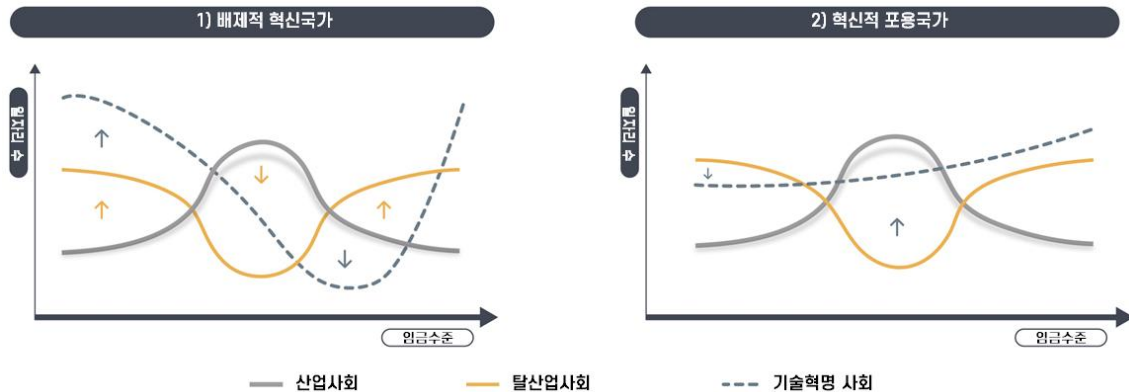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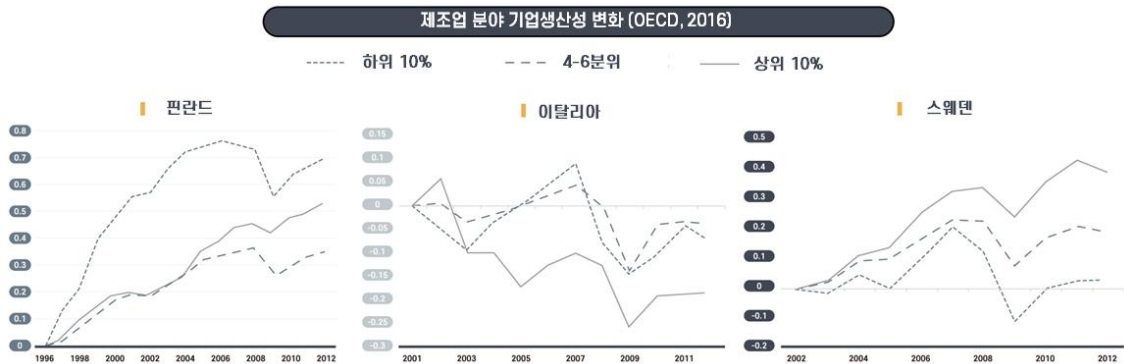


그림 18은 새로운 일자리 생성을 임금수준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었고, 분포될 것인 지에 대한 예상을 보여준다.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산층 일자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는 더디게 생성된 바 있다. 산업화에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초중산층이 형성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탈산업화 시기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반면에 제조업 일자리 및 반복적인 일자리를 하는 중간 정도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Goos et al., 2014). 만일 현재와 같은 추세가 배제적 성장과 함께 지속이 된다면 중산층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소수의 고소득 일자리와 대량의 저소득 일자리로 재편될 우려가 충분히 존재한다.

혁신적 포용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노동시장과 산업이 극단적인 이중화가 될 경우 사회보장과 복지정책만으로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쉽지 않다. 탈산업화의 일자리 분포 경향을 뛰어넘어 중간임금 일자리를 더욱 확대시키고 고소득 일자리가 저소득 일자리보다 많아지게 하는 새로운 포용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풀뿌리 혁신은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생산성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모든 국가가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핀란드와 같이 모든 기업에서 생산성이 2000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한 국가도 존재하며, 반대로 이태리와 같이 모든 기업에서 생산성이 감소된 국가도 있다. 핀란드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낮았던 기업들이 더욱 빠르게 생산성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스웨덴과 같이 전형적으로 잘했던 기업은 더욱 잘하고, 못했던 기업은 생산성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세계화, 탈산업화, 기술변화, 인구변화 등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국가의 전략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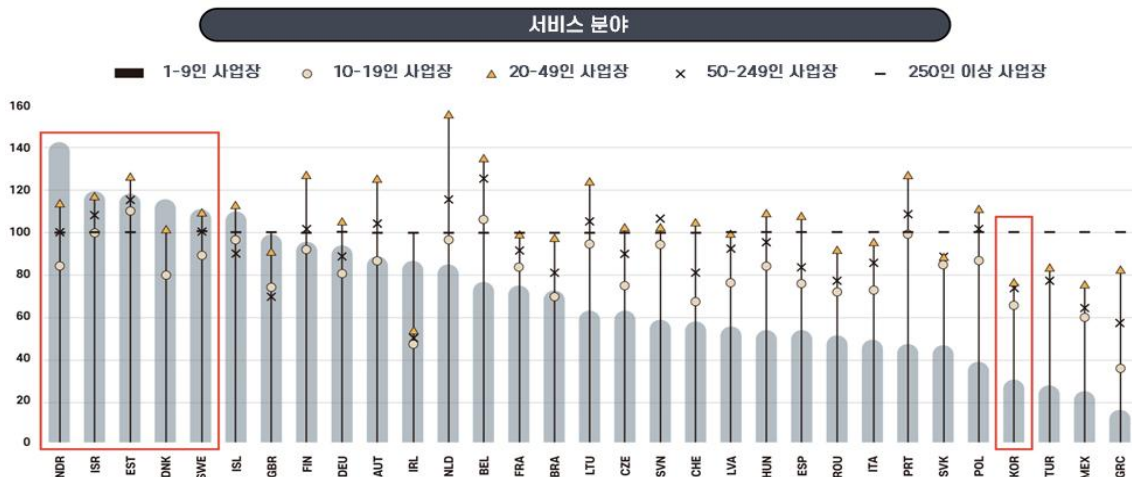
그림 19.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 생산성 증가율의 변화 (OECD, 2016)



2. 혁신과 포용은 공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고용 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기술혁신이 중요시되는 격변기에 중소기업이 갖는 유연성이 주목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효율성 및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최희갑·박성빈, 2016).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특히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 경우, 중소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근로자 249명 이하)이 고용한 인력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R. S., & Lee, J. W., 2018). 그러나 250인 사업장 대비 1-9인 사업장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10인 미만 영세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약 8분의 1(12.4%)에 불과하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격차는 한국의 전통적 성장 모델이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고 대기업 그룹의 시장 지배력은 중소기업의 기회를 방해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림 20. 서비스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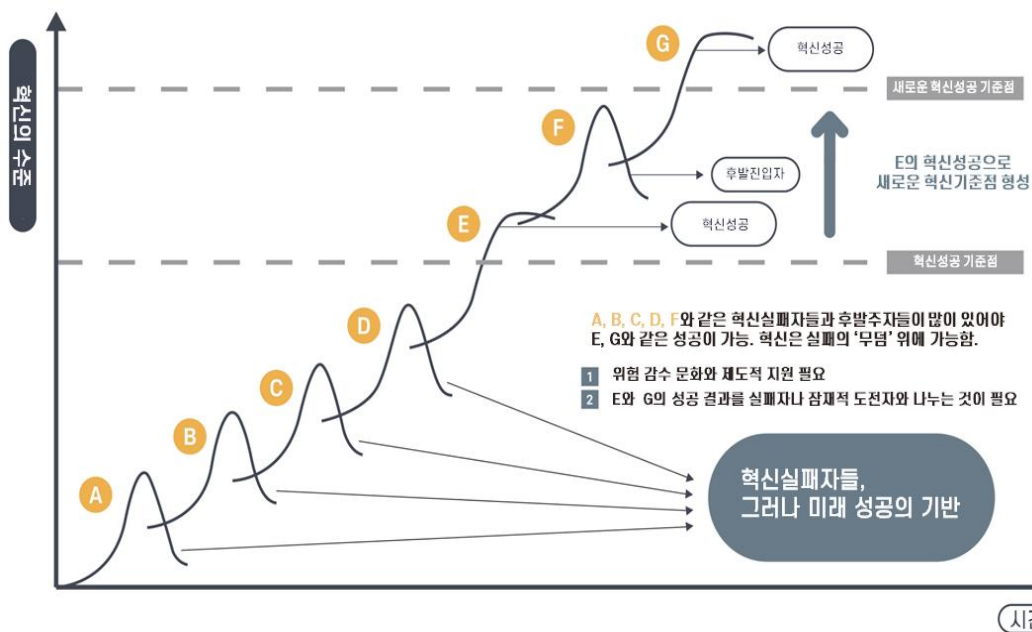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만큼 높기도 하다. 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이 위치하고 있다. 반대로 격차가 큰 기업들은 그리스, 멕시코, 터키, 한국 등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사회정책이 약하며, 불평등이 높은 국가들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고, 반대로 관대한 복지국가이자 최근 가장 혁신적 경제를 만들고 있는 국가들일수록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1-9인 사업장의 생산성이 250인 사업장 대비 140%으로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포용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실패에 대한 포용

혁신은 ‘실패의 무덤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IT 기술이나 앱(APP) 그리고 대학에서의 연구성과들이 누군가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개발한 것은 거의 없다. 그림 21에서 A, B, C, D처럼 누군가가 조금씩 지식을 쌓고 발전시키며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수 있다. 축적된 지식과 실패 위에 E가 일정한 기준(threshold)을 넘게 된다면 ‘혁신’으로 인정을 받고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E의 성공이 E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적 부를 E가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E의 성공 위에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이 되지만, 또 다른 실패(F)와 새로운 지식이 축적되어야 G와 같은 또 다른 혁신과 성공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21. 혁신과 실패와의 관계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제에서는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어떠한 경제에서는 실패가 개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실패로 끝이 나는 곳이 있다. 전자의 경우 더욱 많은 이들이 도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위험감수성향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위험감수행동을 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아주 확실하지 않다면 도전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은 가족이 줄 수도 있지만,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분야에서는 안정된 벤처 펀드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개인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포용적 사회정책이 존재가 중요하다.

4.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례: 스웨덴

1) 떠오르는 창업경제 스웨덴과 북구유럽

창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를 뽑는다면, 일반적으로 실리콘 벨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떠올린다. 하지만, 여러 지표들은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미디어나 학계에서는 스웨덴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혁신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Global Innovation Index 2019에 따르면 가장 혁신지수가 높은 국가는 스위스이며, 2등이 스웨덴, 그리고 3위가 미국이다(GII, 2019). 또한, 혁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의 지표를 제시한다면 PCT ICT 특허출원(patent applications)이라고 할 수 있다. 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백만명 당 PCT ICT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스웨덴이 153으로 1위, 미국이 69.8건으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심층적인 학술연구를 통해서 설명이 되기도 하였다. Heyman et al.(2019)의 연구에서 미국과 스웨덴의 최근 창업기업들을 비교하면서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창업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스웨덴은 오히려 더욱 창업을 통한 경제부흥이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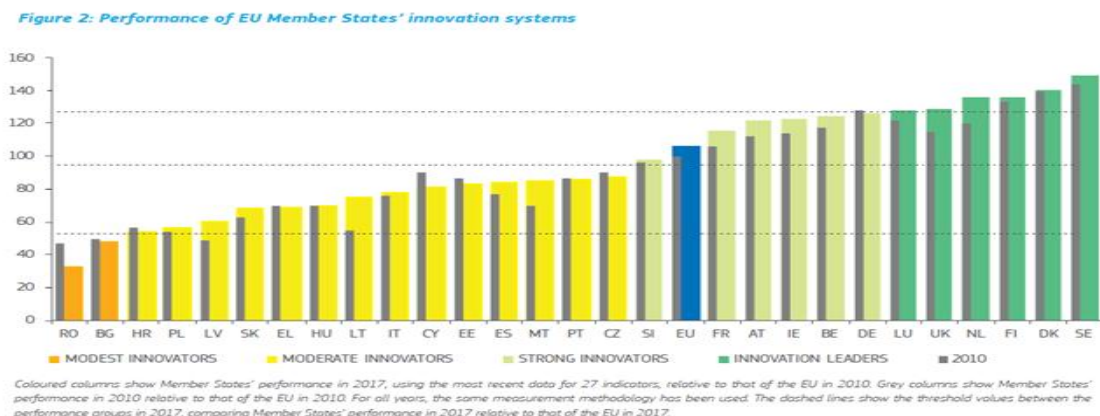
창업 및 혁신과 관련하여 스웨덴이 주목받게 되는 현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조명을 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국가로 주지되면서, 창업과 혁신은 재분배를 많이 하지 않고, 낮은 조세 및 규제를 하는 작은 국가 하에서 더욱 잘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였다(Henrekson & Rosenberg, 2001). 하지만, 스웨덴은 가장 규모가 크고, 재분배가 활발한 국가이며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을 잘 이룩하고 있는 국가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래로 다양한 사회경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구유럽에서 스웨덴만의 현상은 아니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여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2018)을 보면 가장 혁신이 활발한 국가 1등이 스웨덴이며, 2등이 덴마크, 그리고 핀란드, 네덜란드 등 가장 복지국가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과 북구유럽 사례가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첫째, 혁신경제로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재정적인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승자독식’ 경제가 아니어도 혁신과 창업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포용적 성장에 대한 함의이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는 현재 OECD(2016)이나 IMF(2017)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화두이다. 불평등의 증가가 개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혁신에 대한 문헌에서도 불평등이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다(Gordon, 2016).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OECD에서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이며,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창업과 소기업들의 진흥과 생산성 증가가 전체 경제 생태계에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가장 작은 스웨덴과 북구유럽 사례는 여러 가지 함의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웨덴을 위시한 북구유럽은 관대한 복지국가와 재분배, 그리고 혁신경제를 양립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림 22. EU 혁신지수순위 (2018)



출처: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8)

스웨덴은 자유시장경제의 유연성과 조정시장경제에서의 안정성을 노르딕의 방식으로 접목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즉,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리스크를 개인이 온전히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함에 따라 각 개인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아동보육서비스부터 대학교육까지를 거의 무상으로 운영하면서 언제든지 본인이 돈이나 가정 때문에 혹은 지식을 얻을 기회가 없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를 구축하였다. 여기에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 암묵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새로운 암묵지를 가진 이들을 만나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체제를 갖추었다.

Lorenz(2015)는 이를 유연안정성(flexible security) 모델이라고 부르며 설명한 바 있다. 새로운 혁신을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저작들에 따르면 스웨덴은 전통적인 조정시장경제체제를 갖추고 상품혁신보다는 공정혁신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암묵지(tacit knowledge)를 중요시하는 공정혁신 중심의 경제가 1990년대 이후 자유로워진 노동시장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하게 된 암묵지/숙련을 가진 개인들이 전혀 새로운 암묵지를 가진 개인들이나 산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혁신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것인 탄탄한 사회보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를 유연안정성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어떠한 구체적인 요소들이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을 가능케 했을까? 스웨덴은 20세기 중후반에 가파른 경제성장을 한 국가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조선업이나 중공업 등이 침체가 되기 시작하는 1970년대 이후부터 스웨덴 경제는 어려움을 맞이하기 시작한다. 결국 1980년대 들어서 경제침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1991년~1994년 GDP의 대폭 감소와 실업률 증가라는 거시경제의 위기로까지 이어졌었다. Indusfonen이라는 벤처 캐피털 CEO인 David Sonnek에 따르면⁸⁾ 1970년대부터 대기업들의 이윤율이 떨어질 때 정부는 Indusfonen과 같은 회사를 만들면서 대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추구하려고 하였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스웨덴 통화의 평가 절하를 통해서 대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방향이 1990년대 초 경제위기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투자의 방향이 소기업과 창업으로 선회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투자 방향의 선회와 함께 스웨덴은 1990년 이후 개혁패키지에서 미시경제나 규제보다는 거시경제에 포커스를 두어, 유연한 환율을 도입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거시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스웨덴은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타파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탈규제, 조세 및 경제부문의 개혁과 합리화를 통해 창업혁신을 촉진하는 길을 만들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스웨덴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효율성과 원동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고, 스웨덴 내 대부분의 혁신과 창업은 1990년 경제위기 이후 스웨덴이 취한 노선에서 등장하였다. (예, Volvo, AstraZeneca, ABB, IKEA, Ericsson, Electrolux, H&M, Saab and Absolut 등)

가장 혁신적인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5년 이하의 신생국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반해, 같은 기간 스웨덴은 스타트업과 신생기업의 비율과 성장률이 증가추세에 있다(Decker et al., 2014). 또한 미국과 스웨덴은 구체적인 정책방향에서 상이한 노선을 갖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93년에 도입한 A New Competition Act 개혁 이전에는 강력한 규제를

8) 2020년 1월 30일 인터뷰 (스웨덴, 스톡홀름)

지지해주는 메커니즘을 통해 독점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핵심은 중소기업도 자유로운 시장경제 하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으며, 규제개혁 후 스웨덴에서는 독점기업의 시장장악을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대기업이 혁신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시장경제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스웨덴은 새로운 노선을 통해 혁신에서 중요한 요소인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가능케 만든 환경을 확보했다. 창조적 파괴란 새로운 기업이 기존의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이는 ‘혁신’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새롭고’ ‘가치를 창출하며’ ‘문제해결’에 가능한 다양한 방향으로 도모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개혁과 더불어, 스웨덴은 1991년 52%인 법인세를 30%로 감세하는 대대적인 세금개혁도 진행하였다. 감세정책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데, 법인세의 감소는 새로운 기업들이 혁신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1년 감세 이전까지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혁신의 관점에서 세금시스템은 기업의 리스크테이킹과 상환능력을 도모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초아래 2019년 현재 스웨덴의 법인세는 21.4%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2018년에 35%에서 21% 정도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규제와 조세개혁만으로 지금의 스웨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스웨덴의 관련 전문가들은(최연혁 교수, David Sonnen, Nils Fredrik Aurelius 전 국회의원, Joakim Palme 교수 등⁹⁾) 1990년대 규제 및 조세개혁이 스웨덴 사회경제체제의 경로탈피라기보다는 경로를 재구조화하고 재조정하는 시도였다고 평가를 하였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을 실용주의(pragmatism)으로 보고, 변화하는 흐름에 사회경제체제를 개혁하면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방향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변화에 여전히 중요한 혁신의 요소는 복지국가(사회적 안전망과 사회투자)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스웨덴의 조직문화에 있다. 스웨덴 창업연구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인 Claire Ingram Bogusz박사¹⁰⁾는 혁신과 창업이 쉽게 일어나는 스웨덴의 조직문화를 ‘flat hierarchy’와 ‘flat wage’에서 찾았다. 위계성이 없는 문화는 조직에서 위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과의 소통을 쉽게 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관료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 한 조직 내에서 뿐 아니라 스웨덴의 중앙은행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서 막 논문을 마친 박사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였다. flat wage는 평등한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평등한 임금체계가 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Claire Bogusz나 David Sonnen에 따르면 오히려 평등한 임금체계(최하가 낮지 않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실패를 했을 때 크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더욱 창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창업가들

9) 2020년 1월 28일, 29일, 30일 인터뷰(스웨덴 스톡홀름, 칼마르, 옅살라에서 인터뷰)

10) 2020년 1월 28일 인터뷰 (스웨덴 스톡홀름)

은 돈을 목적으로 뛰어들기 보다는 자신의 열정과 관심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큰 청년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부유층 배경의 청년들이 대체로 투자은행이나 컨설팅 산업으로 가는 반면 중산층이나 중하층 청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David Sonnen은 지적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또 다른 창업혁신에 중요 요인은 포용적 사회정책이다. 보편적이고 포용적 사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의 감세정책은 경제적 불평등만 야기할 수 있고 이의 전형적인 예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혁신의 특성상, 각 행위자들이 미래의 위험을 택하려 하지 않거나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가 집합재의 성격을 갖는 경우 이를 오직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 맡겨두면 상품화 할 수 없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혁신적 성장을 살펴봄에 있어 탈규제와 시장개혁만큼 중요한 요소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정책의 역할을 살펴봐야 한다.

스웨덴 사회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 먼저 혁신을 도모하는 포용적인 사회정책으로 관대한 휴가제인 부모휴가제도와 안식년제도가 있다¹¹⁾. 부모휴가제도의 경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에, 창업/학업휴가제도(Leave of absence)는 스웨덴의 노사협약에 의해서 도입된 독특한 제도인데 이는 직업의 안정성과 고용상황을 보장해주는 상태로 6개월간의 휴가를 지지해주는 정책이다. 이 휴가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창업이나 학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장기간의 휴가를 통해 고용인이 보다 창의적인 사고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스웨덴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부모휴가나 창업휴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피고용인에서 창업가로 전환한다고 한다(Claire Bogusz).

또한 사회투자제도로는 무상대학교육 시스템과 평생교육학습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숙련과 역량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율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무상의료제도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연금정책 등의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정책을 확보하고 있다. 즉, 혁신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혁신의 배태된 높은 리스크 특성을 파악해야하며, 성공적 혁신의 기반은 혁신 실패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실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견해는 언론이나 경제단체 그리고 스웨덴의 기업혁신부 장관(Sweden's minister for enterprise and innovation)인 Mikael Damberg 등을 통해서 중요성이 파악이 되고 있다. 다음 인용들은 스웨덴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I think if you want to be an innovative country, you have to give people security so they dare to take risks. Birk Nilson, for instance, knew that if his company fell apart, he'd still have health coverage; he also didn't have

11) 휴가제도에 대해서는 부록 2 참조

any student-loan debt to pay off. Even if you fail, even if you file for bankruptcy, Sweden has a well-known and ambitious safety net. So I do think that taking on risk is not as daunting in Sweden as it is in the U.S."

– Mikael Damberg¹²⁾

(도전할 수 있는 사회보장이 있음)

"Sweden is a risk-friendly place. "Sweden has a lot of safety nets from an income perspective, which reduces the risk of starting your own company," says Mattias Ward at Swedish startup [Innometrics](#), who thinks that potential employees are also less wary of working for a startup. With cheap or free higher education, students from Sweden's excellent universities also do not have crippling levels of debt before they even start."¹³⁾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창업하는데 위험을 줄여줌. 높은 수준의 교육 중요함)

"Why has Sweden proven so successful in encouraging digital entrepreneurs to start and grow new businesses? One counter-intuitive and somewhat controversial answer is its high levels of taxation. And while the tax level is listed by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 as the most problematic factor when doing business in Sweden, the government's minister for enterprise and innovation Mikael Damberg claims the country's social safety net means entrepreneurs are more free to take risks."¹⁴⁾

(낮은 조세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조세수준이 다양한 인프라와 사회보장으로 돌아와서 창업가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

"For Sam Manaberi, founder of Gothenburg-based startup Trine, Sweden's social safety net and wealth equality are at the very heart of what makes his country so innovative. "Sweden is an awesome place to start a business and an awesome place to raise a family," he says.

12)

https://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7/09/sweden-startups/541413/?fbclid=IwAR2hvaTzcPNVrq_CbheOHVCrSfHLYASiguSY6BG9Mik72LUGV2GMh8WBC0 (Why Does Sweden Have So Many Start-Ups?, The Atlantic, 2020년 1월 30일 접속)

13)

<https://www.techradar.com/news/world-of-tech/the-reasons-why-sweden-is-a-hotbed-for-digital-innovation-1292681> (The reasons why Sweden is a hotbed for digital innovation, Techradar.pro, 2020년 1월 30일 접속)

14)

<https://www.weforum.org/agenda/2017/10/why-does-sweden-produce-so-many-startups/> (Why does Sweden produce so many startups?, World Economic Forum, 2020년 1월 30일 접속)

..... He is just about to take the last of his 480 days paternity leave entitlement, which he has spread over the last eight years as his son has grown up. He took a summer off when he came back to his home country from the US, where he'd worked as an executive for German industrial giant Bosch. "It was a great time for reflection and hanging out with my son," he s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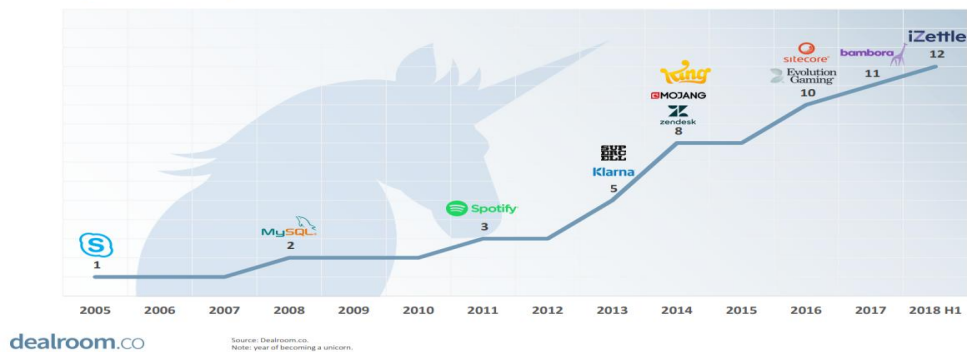
"I decided there isn't that much risk in starting a business. Maybe it had to do with the fact I'd lived in the US for several years - that's real risk."

"Here, the worst thing that could happen was that I lost the salary I would have earned. Healthcare works really well and there are great schools. That safety net was so, so important."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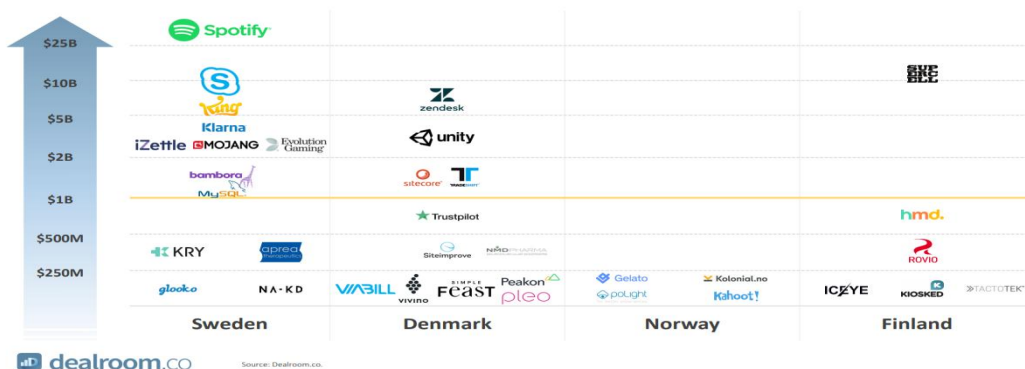
(창업하기에, 가족들과 함께 살기에 좋은 스웨덴. 보건시스템도 중요하고, 사회안전망도 매우 중요함)

그림 23. 북유럽의 스타트업 발전과 변화

The Nordics have created twelve unicorns since the early 2000s, with a combined value of \$69 billion



The Nordics have created some of Europe's most valuable companies; strong pipeline of promising potential unicorns



15)

<https://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sweden-s-technology-powerhouse-shows-brexits-britain-a-positive-way-to-fix-its-ailing-economy-a8118641.html> (How Sweden became one of the most innovative countries on earth, The Independent, 2020년 1월 30일 접속)

안정된 보건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제도, 그리고 일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일터문화와 다양한 휴가제도, 창업을 권장하는 제도들과 평생 교육 제도 등이 스웨덴의 혁신경제를 이끄는 근본적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포용국가의 사례는 스웨덴뿐 아니라, 노르딕 국가 전반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노르딕 국가는 혁신적인 시민사회와 공공복지 영역 간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어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여왔다. 또한, 평등한 사회관계와 낮은 불평등, 그리고 분권화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을 기조로 한 노르딕식의 복지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했다. 특히, 분권화를 통해 각 지역과 개인의 재량을 강화하여, 지시와 매뉴얼에 따른 일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일터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는 21세기 변화하는 경제에 가장 적합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르딕의 강점은 어떻게 스칸디나비아의 복지모델이 사회와 경제섹터 모두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CSEC report, 2014, An Ecosystem for Social Innovation in Sweden).

그 결과 노르딕국가들은 정보통신환경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비교한 PIAAC의 보고서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CSR) 지수 역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신에 있어서도 스웨덴 뿐 아니라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국가들은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신규 기업들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V.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1. 포용적 사회정책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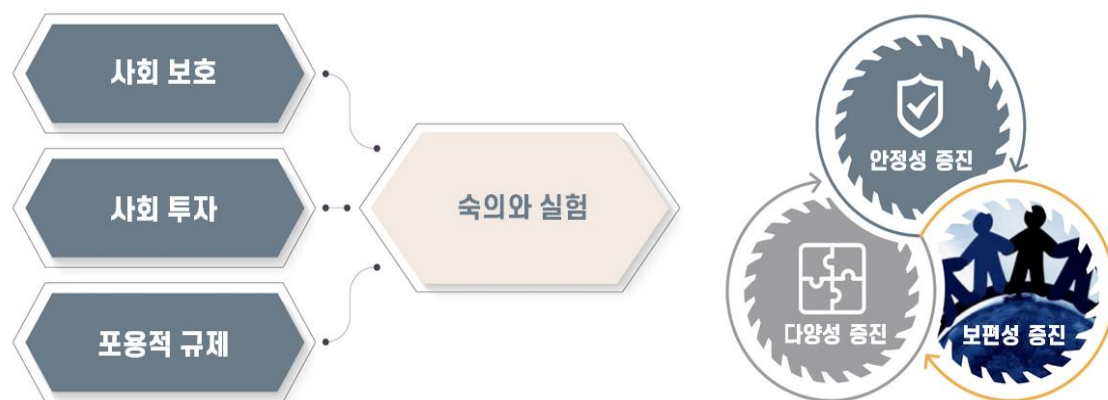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용의 개념과 사회정책의 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포용은 여기에서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다. 안정성이란 삶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생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사회정책의 가장 오래된 목표이기도 하다. 복지국가 초기에는 탈빈곤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면,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삶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처가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즉,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이 개인의 지위와 자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위험 관리자로서의 국가가 대처하면서 삶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사회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된 것이다.

둘째는 다양성이다. 포용성을 논의할 때 가장 자주 논의되는 요인으로서 권위주의와 획일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과 삶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20세기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지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삶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고, 탈산업화 및 기술변화와 함께 고용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욱 포용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이다.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게만 안정성과 다양성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빈곤층은 아니지만 돌봄의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숙련을 발전시켜야 할 이들이 모두 사회정책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회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의 증진은 사회정책과 함께 갈 수 있다. 실제 안정성과 다양성의 인정 그리고 보편성은 사회정책의 중요한 속성이기도 하다. 동시에 다양성은 창의성과 혁신의 기반이기도 하며, 안정성은 위험감수의 기반이 된다. 소수에 의한 혁신이 아닌 다수에 의한 혁신이 우리의 미래라면 보편성은 풀뿌리 혁신의 핵심이 된다.

그림 24. 포용적 사회정책의 개념과 구성



사회정책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된다.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그리고 포용적 규제(inclusive regulation)가 여기에 속한다. 먼저 사회보호는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조부터 보건, 연금, 실업급여 등 주로 다양한 현금급여 정책이 이에 속한다.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안정성의 결핍으로 인적자본의 형성에 방해가 받는 다거나 위험감수성향을 낮추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투자는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이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아동 및 가족돌봄에 대한 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투자’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조세 기반이 넓어지고, 생산성이 증가되어 오히려 사회에 더 큰 ‘리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돌봄제도를 잘 하면 두 부모가 모두 노동시장에 잘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의 인적자본 성장에 도움을 주고, 성인돌봄의 경우 미래 돌봄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기도 하다.

마지막은 포용적 규제이다. 이 부분은 좀 더 개념과 내용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혁신은 자유로운 시도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시도 속에는 공공보건이나 환경을 해치는 시도가 포함될 수 있다.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가슴기 사건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

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사건을 최소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된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포용적 규제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사전예방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으로 혁신 활동은 장려하되,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에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판매금지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밝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 규명 책임 배제 원칙으로 부정적 영향이 의심이 된다고 제기가 될 때 규명할 책임은 기업이나 국가에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 개인정보, 공중보건 등에 대해 무조건적 규제완화 보다는 명확하고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을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종합하면 무조건적 탈규제 혹은 규제장벽을 낮추는 것 보다는 예측가능한 규제를 명확하게 혁신가들에게 제시함으로 오히려 더 높은 질과 생산성을 가진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림 25. 포용적 사회정책의 핵심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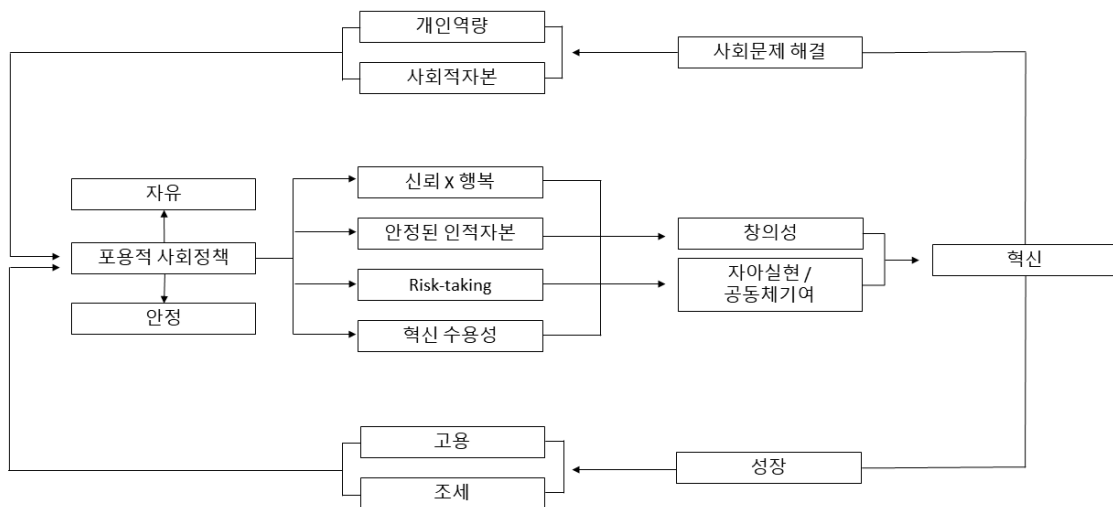
사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에게 높은 삶의 질과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보호 기반 마련 • 평생교육 및 취창업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확장 및 평생지원체계 마련 • 모든 형태의 고용을 가진 이들에게 동등한 사회보호 제공 • 창업가 및 사회혁신가에게 친화적인 사회보호 제공 • 노후소득이나 의료/돌봄에 대한 걱정이 혁신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체계의 개혁
사회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 및 청년에게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기반 마련 • 경쟁적 교육제도에서 협력적이고 창의적 교육제도로의 변화 • 높은 질과 보편성을 가진 교육서비스(아동/평생) 확장을 위한 적극적 투자: 자율적이면서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대학으로의 전환 • 창업가 및 장기중소기업 숙련자들을 위한 휴가제도/교육제도 도입 및 확장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성평등 지향의 모성/부성/육아휴직을 보편화
포용적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고용, 복지영역에 있어서 불필요한 성과평가와 규제를 줄이면서 일의 몰입도를 높여줌 • 노동시장 유연성과 자유로운 이동 확장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나 불공정에 대해 엄정한 대처 • 보건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면서 의료/돌봄 영역에서 기술의 보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예방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혁신 활동은 장려하되,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에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판매금지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밝히도록 함 2) 이용자 규명 책임 배제 원칙: 부정적 영향이 의심이 된다고 제기가 될 때 규명할 책임은 기업이나 국가에 부여 3)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제시: 환경, 개인정보, 공중보건 등에 대해 무조건적 규제완화 보다는 명확하고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을 가이드라인 제시

2.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과의 선순환 메커니즘

포용적 사회정책은 다음과 같이 혁신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앞서 논의한 스웨덴과 북구유럽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 혁신의 문제점과도 연결되어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포용적 사회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정책은 개인의 신뢰와 행복을 증진시킨다. 또한, 사회투자와 동시에 인적자본을 발달시키는 동안 삶을 안정시켜주면서 인적자본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삶의 예측가능성과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개입을 통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위험감수행동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가 개인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서 사회가 혁신적 경제로 전환하는데 보다 우호적일 수 있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정책의 결과는 개인의 창의성 발휘와 자아실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 시민으로 활동하게 하는 기반이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혁신은 사회에 다양한 난제를 풀어나가는 기반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이 증진되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경제혁신은 성장을 가져온다. 성장은 고용의 증진과 조세의 증진을 가져오게 되어 보편적이고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그림 26.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의 선순환 메커니즘



요약한 선순환 과정 중 포용적 사회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의하면,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외부의 통제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결정감을 갖게 되고, 이는 보다 높은 수준의 창의성으로 이어지게 된다(Deci et al., 1989; Gagne & Deci, 2005). 다시 말해, 직무자율성이 높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대안을 탐색하는데 몰입하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Amabile, 1988; Oldham & Cummings, 1996).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가정신의 핵심이다. 실제로 getting to equal(2019)의 연구 결과, 평등한 분위기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창의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실패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이 혁신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가장 평등한 분위기의 회사에서는 40%인데 반해, 가장 덜 평등한 회사에서는 7%만이 동의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산업, 국가,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질문한 결과이며, 다양한 성별, 나이 등이 섞여 있는 결과이다. 다른 어떠한 특성보다 평등한 분위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27).

그림 27. 혁신과 기업의 평등/위계적 문화와의 관계

Percent of respondents who answered "Nothing stops me from innovating."



출처 : getting to equal(2019)¹⁶⁾

세계행복지수(2019)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북유럽의 자유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그들이 행복지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자유도란 자신이 삶에서 선택권이 많고 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응답한 지수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도에 있어서는 144위, 행복지수는 54위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유도가 낮은 곳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고 혁신도 적게 이루어지게 된다.

포용적 사회정책은 시민들의 신뢰와 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과 타인에 대한 신뢰 등의 긍정적 심리자산들은 사회 내 창의성과 혁신을 높이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심리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각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acLeod, 1973; 구교준 외, 2017). 즉,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심리자산의 수준을 높이고, 이는 곧 시민들의 인지다양성을 높인다. 창의성이 인지다양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Page, 2007), 창의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 역시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이 창의성 및 혁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진술한다(Cohn et al, 2009).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목표는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복지국가가 시민들의 행복을 효과적으로 높일 것인가? 기존 연구들은 시민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수준인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행복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Pacek & Radcliff, 2008; Anderson & Hecht, 2015). 특히 Anderson & Hecht(2015)는 국가단위에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수준과 고용규제 그리고 행복의 연관성에 대해 추적하였다. 다른 변수들이 평균 수준임을 가정할 때, 탈상품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한 국가의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노동시장 유연

16)

<https://www.accenture.com/nl-en/about/inclusion-diversity/gender-equality-innovation-research>

성이 제한되면 그 행복이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복에 중요함을 보여주며, 복지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보편적인 ALMP정책, 그리고 육아휴직과 보육서비스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면 노동자의 일 몰입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sser, 2009; 김영미·김은하, 2013; Van der Wel & Halvorsen, 2015). 경제적인 이유보다 자아실현이나 일이 좋아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높은 근로의욕은 노동자들의 재량학습(discretionary learning)의 수준을 높이며, 이는 노동자들의 혁신행동의 기반이 된다(Lorenz, 2015).

특히 Van der Wel & Halvorsen(2015)은 복지국가의 관대성과 일 몰입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관대성이 높을수록 여성의 일 몰입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등이 근로연령대의 여성의 일 몰입과 창의성의 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편적이며 포용적인 사회정책을 펼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혁신 지수가 높다는 점은 사회투자정책의 조합과 혁신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특히 Lorenz & Lundvall(2010)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일은 보편적인 교육제도, 유연안정적인 복지제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Generalized trust)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은 혁신을 촉진하는 변수이다(Barczak et al., 2010; Akçomak & Ter Weel, 2009). 이는 앞서도 논의했듯, 혁신활동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성에 대한 인내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투자 등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혁신활동에 협력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뢰는 나와 전혀 다른 사회집단, 전문가 집단과의 창조적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Miettinen, 2013). 협력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인지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고 혁신의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보편적 복지국가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다는 점은 해당 국가들이 혁신을 선호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것이다.

3.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1) 모든 아동과 청년의 역량 강화

Alic(2011) 등 기존 문헌은 혁신이 특정한 재능있는 개인에 의해 달성된다는 세간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혁신이 마지막에 결과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식별할 수 있기에 발생하는 오해라는 것이다. 혁신은 대부분 장기간의 점진적인

혁신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혁신에 공헌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비추어보면 사회정책은 전국민의 안정적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교육정책과 기회균등정책의 영향력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Miettinen(2013)은 보편적 교육과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혁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편적인 교육정책들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성인기 학습의 기초내용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수준과 일상적 창의성을 제고하여 혁신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기회균등정책은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고 재능의 잘못된 할당을 줄여 더 많은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혁신을 강화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Bell et al., 2017; Celik, 2015).

기회균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Bell et al.(2017)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수학적 성적과 특허출원율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발명가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위 1% 고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중위소득 이하의 아이들에 비해 발명가가 될 확률이 10배 높았다. 특히 3학년때의 수학적 성적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고소득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발명가가 될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백인은 흑인에 비해 발명가가 될 확률이 3배 높게 나타났고, 남성 발명가의 비중은 총 82%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유색인종, 여성은 혁신에 있어 소수 대표되고 있어, 이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하고 혁신에 노출시킬 기회들을 제공할 때 창의성과 혁신의 수준이 높아질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최근 미국 SAT에서는 역경점수(adversity score)라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회 불균등을 조정하려던 시도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8. 가정환경과 혁신과의 관계



출처: Bell et al(2017)

마지막으로 빈곤은 인지적 다양성을 억제한다. 이는 빈곤이라는 경험의 IQ와 인지적 통제 능력과 같은 인지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Page(2007)에 따르면, 인지적 다양성은 재조합형 탐구의 가능성을 높여 혁신의 가능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빈곤은 혁신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을 통해 빈곤을 방지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년에게 사회보호와 사회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미래 혁신가들을 잃지 않게 되어 혁신의 기반을 넓히는 것에 직접적 연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위험감수정향과 혁신수용성의 향상

본 연구는 Baumol(1990)과 Kao(2007)의 논의를 받아들여, 창의성과 혁신은 다양한 제도들이 상호복합적인 영향을 주어 형성되는 결과물이라고 가정한다. 특히 한 국가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안정성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혁신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본다. 그 경로는 안정성을 통한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경로는 혁신의 수용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안정과 창의성의 관계를 논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Amabile, 1996).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은 다시 말하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이정훈·한기순, 2018), 독창성이 크면 클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Runco, 2009). 따라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내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정성을 통해 혁신활동의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risk-hedging). 실제로 직업의 불안정성은 노동자 개인의 몰입을 방해하고 짜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혁신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Niesen et al, 2018; Spiegelaere et al, 2014). 과거 Lawson & Lorenz(1999)는 직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노동자가 직장에서 암묵지(tacit knowledge)의 활용을 줄여,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Carmeli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심리사회적 안정은 한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난다.

개인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사회정책이다. 특히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전 국민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혁신의 촉발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복지국가가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자영업자 혹은 실업자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특정한 복지정책이 창의적인 노동의 결과물인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Fillipetti & Guy, 2015; Raffiee & Feng,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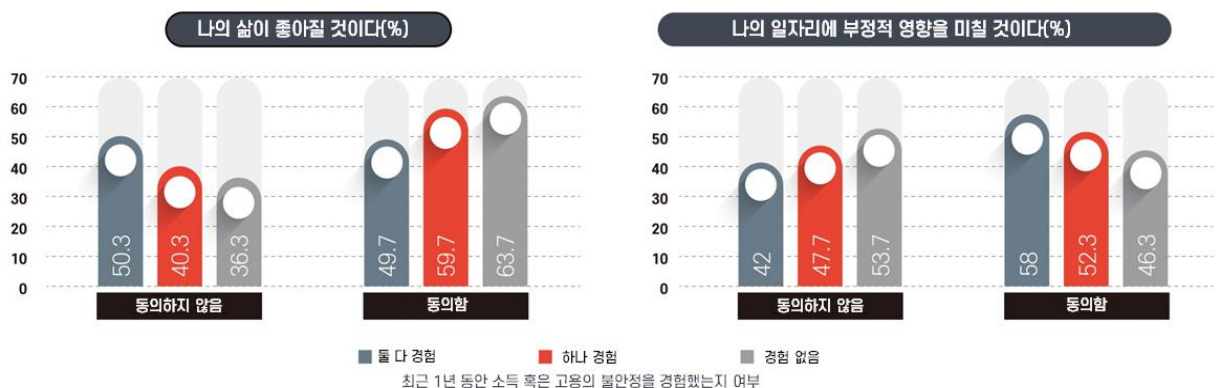
Fillipetti & Guy(2016)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영역에서 벌어진 혁신에 대한 투자행태를 분석하였다. 21개국 5000개의 회사를 분석한 이 결과에 따르면, 고용안정 혹은 실업보험의 수준이 높을 경우 노동자와 실직자들이 보다 잠재적 발전성이 높은 기술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술이 비록 좀 더 불확실하더

라도, 본인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더욱 미래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투자하여, 혁신에 기여한 것이다.

자영업자에 관련된 연구들 중에는 Raffiee & Feng(2014)의 “hybrid entrepreneurship” 연구가 눈에 띈다. 전일유급노동과 자영업을 병행하는 자영업자는 안정성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사업의 전망을 파악하여 사업에 뛰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은 사업과 연계된 불확실한 부분들을 학습하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업의 전망을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hybrid entrepreneurship 자영업자의 퇴출위험은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에 이뤄진 프랑스의 신규실업자영업자 보조금 지원정책(PARE: Plan d'Aide au Retour à l'Emploi.)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Hombert et al, 2019). 이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실업자영업자들에게 3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권을 인정해주는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신규 진입을 12%p 늘릴 수 있었다. 이는 소규모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혁신을 이뤄내어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창조적 파괴의 하나의 예가 된 것이다.

또 다른 경로는 안정성을 확대함으로써 혁신의 수용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낮다. 본 연구진은 2018년 LAB2050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떠한 계층에서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지를 조사한 바 있다(그림 29). 이에 따르면 일자리나 소득에서 불안정성을 겪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기술혁명이 내 삶을 좋게 한다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내 일자리가 기술혁명에 의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즉, 안정성이 있는 이들일수록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포용적인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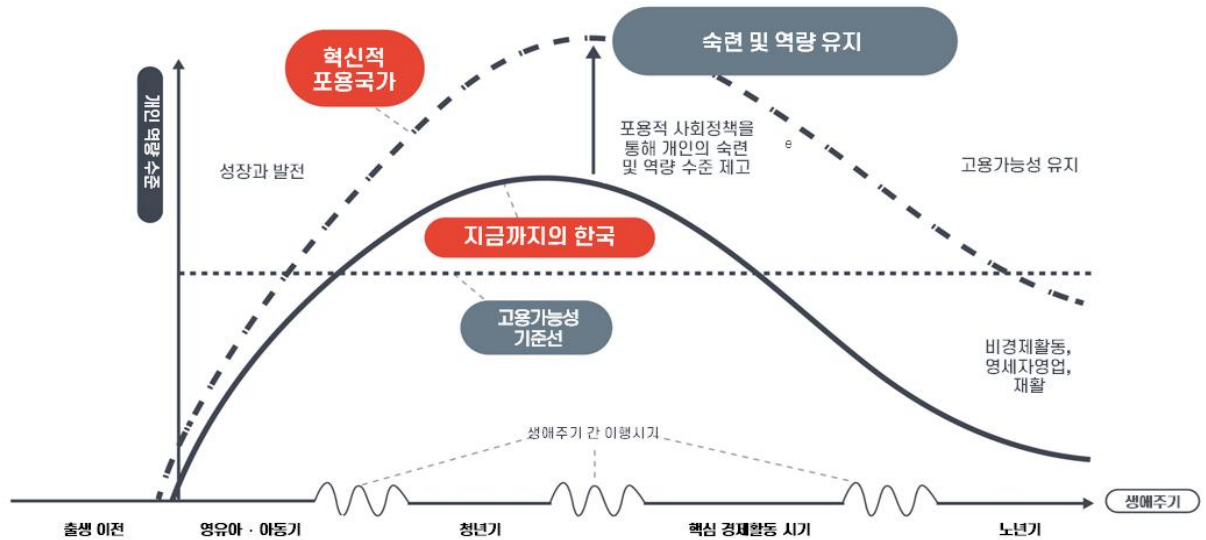
그림 29. 불안정성의 경험과 혁신의 수용성



3) 생애주기 동안 역량의 유지 및 발달

안정성, 다양성, 보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포용을 실현하고 동시에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그림 30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그림 30.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목표



지금은 보육과 교육을 통해서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개인의 역량을 높인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노동시장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후 몇십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경험이 증가하면 역량이 더욱 증가하게 되지만, 노화와 함께 재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술변화와 같은 환경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개인역량은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용가능성이 중고령 시기에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고용의 생애주기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고용가능성이 더 빨리 시작되고, 더 늦게 없어지는데 반하여 다른 사회에서는 더 늦게 시작하고, 더 빨리 사라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점차 늦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50세를 전후하여 퇴직하면서 빨리 고용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결국 이른 시기에 비경제활동으로 가든지, 아니면 미숙련/저임금 일자리나 영세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에서는 안정된 사회보호를 기반으로 실용적이고 집중적인 사회투자 정책을 통해서 고용가능성을 조기에 높이고, 이러한 고용가능성이 중장년기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훈련정책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보호를 강화하여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늦은 시기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주된 일자리가 늦게까지 유지되게 된다면,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단을 갖게 됨과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을 더욱 갖게 된다. 동시에 재정은 상대적으로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는 조기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고 영세자영업으로 전환되게 될 경우 자영업이 안정된 노후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하기보다는 노인빈곤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림 31. 혁신적 포용국가의 생애주기별 정책의 예시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더 오래 유지 시키기 위해서 생애주기에 따른 포용적 사회정책이 중요하다. 그림31은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보호정책과 사회투자정책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정책의 출발은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다. 부모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지원, 한부모 및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산전관리 및 출산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후 보편적이고 양질의 보육, 아동수당의 확대, 보편적 육아휴직 및 지원이 중요하다. 현재는 육아휴직이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차별이 존재하며 보편성의 관점에서 맞지 않다. 또한, 아동수당과 보편적이고 양질의 보육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학생 시기에는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과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창의성과 행복이 희생되지 않도록 학생 기본 생활 기준과 같은 명확한 학생기본권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실용적 수업을 고등학교 때부터 들을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운영 및 자기설계학과와 같은 제도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문화 및 창의학습 및 체험을 강화하면서 21세기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청년기에는 더 많은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현재 청년은 국가정책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집단이자, 혁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기도 하다. 위험감수정향을 높일 수 있으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사회정책 실현이 필요하다. 현재 저소득 구직자에게만 제공하는 청년수당을 좀 더 관대하게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혁신활동을 하는 창업가나 사회혁신가 그리고 기업 내에서 사내혁신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도 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주는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대학이 더욱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경제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지역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면서 개인들의 숙련이 줄어들지 않고 고용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대학이 감당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얻게 되었을 때 젠더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의 역량 발휘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양성평등형 휴직제도를 발전시키고, 일터에 다양한 유연근로를 가능하게 함으로 일가족양립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체로 계약의 관점에서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근로시간의 단축이 보다 용이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층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보호와 사회투자가 필요하다. 개인이 필요할 때 훈련을 받고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어플런티스십(Apprenticeship)이나 개인훈련계좌(Individual learning account)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생애주기 기본소득과 같은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생애주기 동안 자신의 숙련을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모작 혹은 3모작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직업경로에 대한 컨설팅 역할을 강화하면서 생애주기 동안 다양한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는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 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영역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 적극적인 예방과 함께 발전하는 기술을 과감하게 적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영역은 한편으로는 보장성의 이슈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이슈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서 스크리닝 역할 및 기본 서비스 강화를 강화하고, 보건의 혁신적 기술을 공공 플랫폼 위에 도입하여 비용 절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년층에게 사회혁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사회혁신과 기술혁신이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4) 숙의와 실험을 통한 포용적 사회정책의 실현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 아이디어들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하고 있거나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는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며, 그 효과를 속단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정책개혁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의견은 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포용보다 갈등이 있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잘 설계하는 것은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숙의와 증거이다. 참여와 숙의를 하나의 축으로, 그리고 증거기반정책을 또 다른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고, 참여하는 개인의 역량을 높이며, 이를 통한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만이 증거를 중심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사회가 받아들

이지 않을 수 있고, 전문가들이 가진 편견에 의해서 특정한 방향의 정책결정만이 내려질 수 있다. 반면에 숙의만이 강조될 경우 무엇이 더 올바르고 합리적 방향인지를 알 수 없고, 혁신과 포용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숙의와 증거가 둘 다 모두 강조되어야 한다.

숙의는 공공정책의 목표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정책에 대한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상기할 때 이들의 경험과 참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숙의는 현대 공공부문의 문제를 위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non-hierarchical ways)하며,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이고 평등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숙의의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1-2일 정도의 집중적 숙의 포럼부터 시작하여 1-2년의 시간 주기를 정하고 꾸준히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도 있다. 영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처럼 특정한 패널을 구성하여 숙의를 진행하게 할 수도 있으며, 전통적인 노사정 협의 방식을 활용하여 숙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어떠한 방식의 숙의 거버넌스 체계이든 중요한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평등, 대표성, 투명성 등과 함께 증거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증거기반정책이 필요하다(최영준·전미선, 2017).

증거기반정책은 또 다른 축이다. 정책기획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대안들을 실험하고, 실험을 통해 도출된 근거와 자료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 지식 조직으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증거기반정책이다. 증거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결과들을 리뷰하면서 얻어내는 증거부터 직접 실험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다. 다양한 증거들은 무엇이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지를 알려줄 수 있으며, 정책대안의 효과성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 연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항상 같은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정형화된 패턴이 미래에 반복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사회 현상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며, 숙의를 통해서 결과를 함께 논의하는 절차는 항상 중요하다. 정부에 의한 실험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투자자금이나 사회금융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때로는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혁신은 더 많은 이들이 증거를 모으고 사회에 기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플랫폼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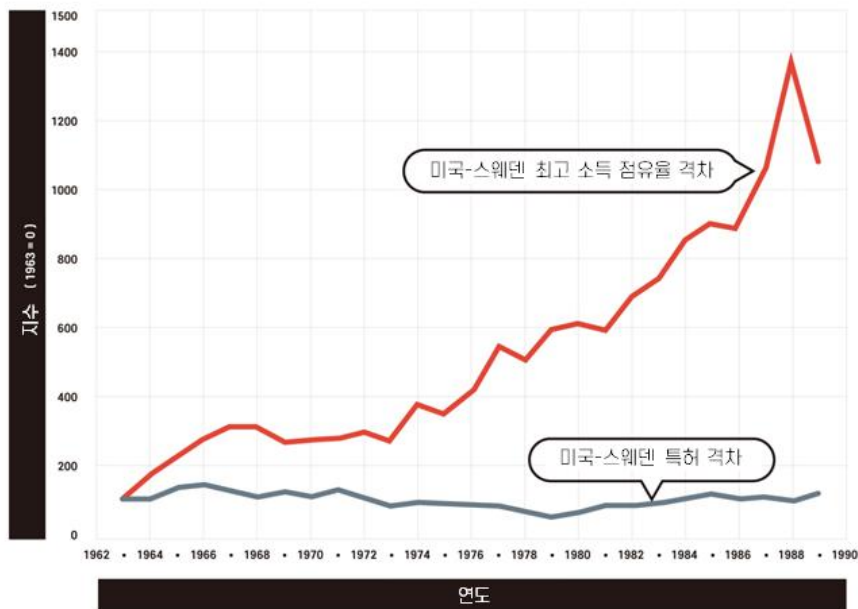
VI. 결론: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

한국은 혁신과 포용에서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외관상 혁신의 국제순위는 높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혁신의 기반이 취약하다. 또한, 소수에 의한 혁신은 배제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면서, 혁신의 성과도 모든 사회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높은 노동시장과 사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글에서는 포용적 사회정책과 포용적 혁신 및 성장의 선순환이 필요하며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며, 그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포용적 사회정책은 개인에게 자유와 안정을 주고, 위험감수성향과 인적자본의 증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동시에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진 이들이 많아질 때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혁신이 다시 고용과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지국가를 유지하게 하는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소수 기업의 생산성의 폭발적 증가가 국가의 생산성 증가라는 착시를 넘어서 모두가 과학기술 혁신과 함께 기업과 사회에서 수많은 작은 혁신을 만들어내면서 포용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포용적 사회정책만이 혁신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관계는 아니다. 불평등이 높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치열한(cutthroat)’ 자본주의에서도 그리고 북유럽과 같이 ‘따뜻한(cuddly)’ 자본주의에서도 혁신은 일어날 수 있다.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불평등이 확대될수록 혁신이 더욱 촉진되는 이론이 맞다면, 미국과 스웨덴의 불평등 격차가 증가하면서 미국이 스웨덴보다 더욱 혁신이 촉진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웨덴과 미국의 불평등 격차는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혁신의 격차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메커니즘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전자의 ‘불평등+혁신’ 메커니즘보다는 후자의 ‘포용+혁신’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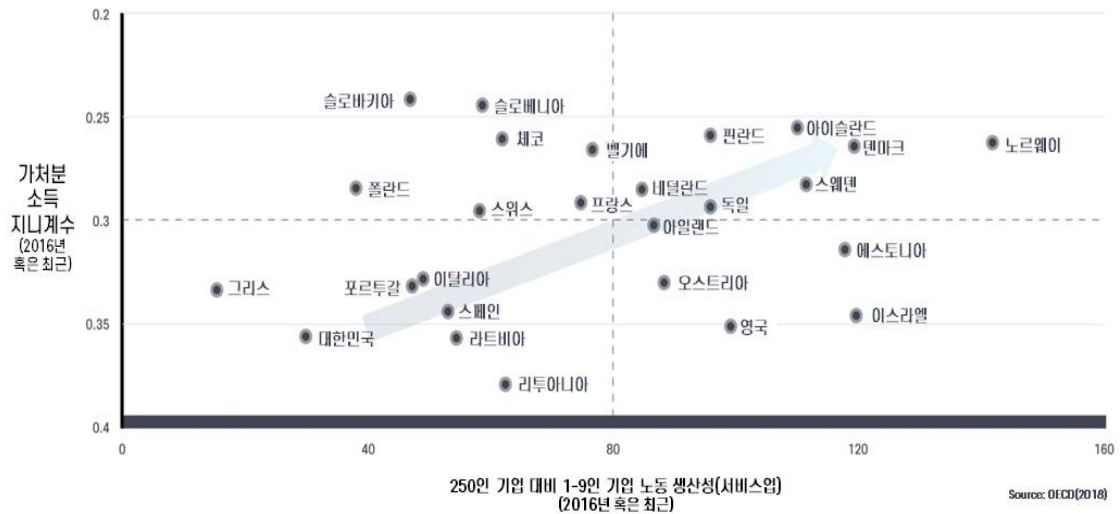
그림 32. 미국과 스웨덴의 불평등 및 혁신의 변화 비교



출처 : The Washington post¹⁷⁾

17)

그림 33.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



실제 한국은 OECD에서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며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 사회이다. 포용적 사회정책과 포용적 성장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면 불평등을 줄이고 동시에 창업경제와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림 33의 3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 진행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은 선언만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포용적 사회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이 GDP 대비 10%인데 반해서 OECD 평균은 20%이며 프랑스나 핀란드와 같은 국가는 30%에 이른다. GDP 10%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약 180조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대대적인 투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며,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보건의 자동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더 많은 복지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직적이고 조건이 붙은 복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증진될 것이다. 시장적 자유주의가 아닌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실질적 자유가 증진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은 쉬운 길은 아닐 것이며, 끊임없는 실험과 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2/09/28/is-sweden-awesome-because-it-mooches-off-the-u-s/> (2020년 1월 20일 접속)

부록 1. 혁신지표의 성격에 대한 논쟁과 경제혁신의 유형

혁신 관련 세계 지표로 Global Innovation Index, Bloomberg Innovation Index 등을 들 수 있는데 해당 지표들에서 한국은 지난 5년간 높은 순위를 점해왔다. 특히 Bloomberg에서 산정하는 Bloomberg Innovation Index는 1) 연구개발 지출액, 2) 제조업 부가가치, 3) 생산성, 4) 첨단기술 기업 수, 5)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수, 6) 전문 연구기관 수, 7) 특허 등 7개 부문 지표를 종합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은 지난 5년간 조사 대상 국가 60개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INSEA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이 꼽은 Global Innovation Index는 혁신 활동에 대한 투입(input) 측면과 산출(output)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2019년 기준 대상 국가 129개국 중 한국을 11위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 지표가 높다고 하여 한국의 혁신역량이 높다고 마냥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지표를 구성하는 원자료에 대한 신뢰¹⁸⁾, 시차(time difference)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정 방식의 한계 등 지표에 대한 원초적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은 혁신을 위한 투입을 많이 하고 그만큼 산출이 많아도 정작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¹⁹⁾ 게다가 Global Innovation Index 2019에 따르면 한국은 혁신투입(innovation input) 대비 혁신산출(innovation output)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투입과 산출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지만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면 투입 측면의 순위가 높아 상대적으로 산출 측면의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혁신투입 및 산출의 7개 부문 중 한국의 평균 순위 11위보다 낮은 부문은 ‘지식 및 기술 성과’(13위), ‘인프라’(15위), ‘창의적 성과’(17위), ‘제도’(26위)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ICT 및 R&D, IP와 관련된 내용에 강하고 노동 및 고등교육, 해외투자유치, ICT 서비스의 수출입 관련 내용에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KISTEP, 2019).

강충경(2018)은 OECD의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를 인용하면서 기술무역수지에서 한국이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과 혁신이 발전하여 널리 활용이 된다면 기술무역수지에서 흑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한국은 약 60억달러 적자를 2015년에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핀란드는 거의 60억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420억 달러, 일본은 376억 달러, 독일은 181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었다.

아래 참고자료는 경제분야 혁신의 다양한 유형과 설명을 보여준다.

18) 일레로 Kolodziejczyk, B. (2018)는 한 건의 발명에 대해 여러 회사가 공시(disclosure)하는 등의 혁신지표 산정 관련 문제를 언급한 바 있음

19) 경향신문, 2018.8.2. “[유종일의 경제세판짜기] ‘혁신지수 1위’ 한국의 아이러니”. 접속일: 2019.9.1.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022049005#csidxda27e94875b6001ab1b219e27c23bb1

[참고] 경제분야 혁신의 유형

경영 혁신 (Business innovation)			
기업 내 혁신 (Innovation in firms)			
기술 혁신 (Technological Innovations)		비기술 혁신 (Non-technological Innovation)	
제품 (Product)	공정 (Process)	조직 (Organisational)	마케팅 (Marketing)
제품의 특성 및 용도와 관련하여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도입, 사용자 편의나 기타 기능상의 현저한 개선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생산 혹은 전달 방식을 의미, 장비 및 소프트웨어상의 변화 포함	사업방식, 고용조직, 외부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조직 방식 도입	제품 디자인, 포장, 판매망, 판촉, 가격에서의 새롭고 현저한 개선
출처: OECD/Eurostat (2018)			
혁신 유형 - 혁신이 근본적인 (fundamental) 변화를 야기해 기존의 행위와 명백히 분리되도록 하는 정도 (extent)에 의한 구분	점진적 혁신 (Incremental innovation)	기존의 지식에 의존하고 기존 제품이나 프로세스 기술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 궤도 개정 및 개선	조직
	급진적 혁신 (Radical innovation)	제품 등급 (class)의 불연속성 (discontinuity)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과학기술 궤도를 바꿔놓을 정도의 역량 (competence-destroying)을 기반으로 함	해당 주체의 기존 상태 (existing state of an entity) 내 작은(little) 변화를 야기 기술, 조직 혹은 산업 상 관없이 주요 (major) 변화를 야기
출처: Damanpour(1991)를 기반으로 재구성			

부록 2. 스웨덴의 휴가제도

1. 부모 육아휴직 - Parental leave(föräldrapenning)¹⁾

스웨덴은 1974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다. 대부분의 유자녀 여성과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구체적 사용 비율은 후술),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은 부모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된다.

부모휴가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육아와 기타 가사업무가 남녀 간에 더욱 평등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Duvander, 2017). 스웨덴은 남녀의 구분 없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일시적인 휴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노동력 비중 또한 비교적 높다.

1) 수급 자격 조건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부모(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학생 등)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다만, 소득에 비례하는 유급휴직 급여는 출산/입양 예정일 이전 240일 동안 하루 250크로나(약 3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거나, 사회보장 시스템에 개별 세금을 납부한 자영업자에 한해 지급된다.

2) 혜택 (휴직 기간 및 급여)

육아휴직 기간은 총 480일이다. 이 중 90일은 부모에게 각각 할당되어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제된다. 즉,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6개월 중 3개월의 육아휴직은 이용할 수 없다. 나머지 300일은 선택에 따라 배우자와 자유롭게 나누어 이용한다. 또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270일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는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2014년 이전에 태어난 경우, 자녀가 8살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해야 할 수 있었으나, 2014년생 이후부터는 자녀가 12살이 될 때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다만, 자녀가 4살이 된 이후에는 96일(전체 유급 육아휴직의 20%)만 허용되므로 대부분은 4살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생겼다.²⁾ 그리

1) 전반적으로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18의 스웨덴 자료를 보고 정리함.

2) 이러한 제도 변경의 배경에는 스웨덴에 유입된 이주민의 노동시장 문제가 크게 작용하였다. 8세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주민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이주민 자녀들의 취학 전 교육 시작도 늦어지면서 언어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제도가 조정된 것이다(Duvander, 2017).

고 자녀가 18개월이 될 때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유급과 무급 휴직을 함께 사용해서 양육 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77.6%(상한액 455,000크로나, 한화 약 5,500만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90일에 대해서는 하루 180크로나(한화 약 2만원)으로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단체협약으로 급여를 보충하는 경우, 추가 지급액으로 인해 실제 급여액이 총소득의 90% 정도에 이르거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³⁾ 소득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40일에 대해 하루 250크로나(한화 약 3만원)이 고정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양도할 경우, 급여는 양도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또한 이전 자녀의 출생 및 입양 후 30개월 내에 다음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이전과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이는 이전 자녀 출산 및 입양 이후 근로시간(또는 소득)을 단축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소득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를 ‘speed premium’으로 부른다.

육아휴직 급여는 Ministry of Social Affairs(보건사회부), 휴직에 대한 권리 보장은 Ministry of Employment(고용부) 소관이다.

480일					
240일(어머니)			240일(아버지)		
195일(이전 평균 급여의 77.6% 지급)		45일 (정액지급 - 일 180크로나, 양도 가능)	195일(이전 평균 급여의 77.6% 지급)		45일 (정액지급 - 일 180크로나, 양도 가능)
90일 (어머니 할당, 양도 불가능)	105일 (양도 가능)		90일 (아버지 할당, 양도 불가능)	105일 (양도 가능)	

자료: 송지원(2018)에서 발췌

3) 급여사용의 유연성

육아휴직은 full-time(전일), part-time(파트타임), quarter-time(쿼터타임), one-eighth time(8분의 1)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full-time 육아휴직 하루는 part-time으로 2일, quarter-time으로 4일과 동일하다. 휴가는 한번에 연속해서 사용하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서 사용 가능하다. 공식적으로는 1년에 최대 3번으로 나누어 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고용주들은 더 많은 기간 분할을 허용한다.

3) 휴가제도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여러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보완되고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산업, 근무형태, 직종별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은 휴가기간이나 급여액을 보완하여 추가혜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Sjögren Lindquist & Wadensjö, 2006).

부부는 자녀가 만 1살이 될 때까지 30일 동시 휴직('double days')이 가능하며, 이는 급여의 77.6%가 지급되는 기간 중 개인에게 할당된 90일을 제외한 105일의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4) 사용 현황

거의 모든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아빠들 10명 중 9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2016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수급자의 45%가 남성, 55%가 여성이었으며, 육아휴직을 균등하게(40%~60%) 사용하는 부부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부분(2017년 기준 여성의 88%, 남성의 95%)이 소득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급 외에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급과 무급을 합한 평균 휴직 일수는 여성이 13.5개월, 남성이 3.5개월이다(Duvander and Viklund, 2014). 예를 들어, 2008년에 태어난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여성이 평균적으로 342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남성은 평균 106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2년 남성이 그 해에 사용된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12%의 기간을 사용한 반면, 2017년에는 28%로 증가했다.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난 첫 해에는 여성들이, 아이가 1-3살 사이에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5) 연구 동향

스웨덴은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과 몇 차례의 제도적 개혁을 거쳐 현재 육아휴직 정책이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된 국가로 평가된다. 부모 육아휴직에 대한 스웨덴 연구는 크게 ① 제도의 효과, ② 제도 개혁의 개선 효과, ③ (특히 남성의) 제도 사용 결정요인 등을 다룬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스웨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행동의 변화에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된다(Anxo, 2009). Anxo(2009)는 스웨덴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기에도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7세 미만 아동을 둔 여성의 고용률이 취업률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Johansson(2010)은 남성이 사용하는 부모휴가 기간이 1개월 증가할 때 여성의 소득이 6.7% 상승함을 검증하였다. 즉,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가 여성 고용과 가족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 육아휴직의 효과를 다룬 주요 연구 결과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가장 오래된 스웨덴에서도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성에 비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휴직의 일부 기간을 남성이 반드시 사용하도록 정한 아버지 할당제(father's quota)가 그 대표적 수단이다. 1995년

에 1개월, 2002년에 2개월의 아버지 할당제가 도입되었는데, Duvander & Johansson(2012)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수와 남성의 휴직기간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양성평등 장려금(gender equality bonus)을 비롯한 기타 방안들도 시도되었지만, Duvander & Johansson(2012)에 의하면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에는 뚜렷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2016년에는 아버지 할당 휴직을 3개월로 확대하였으나, 이 제도 변화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다.

스웨덴 남성의 사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하더라도 남성 내에서의 사용 격차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남성의 제도 사용에 대한 결정 과정은 교육 수준, 소득, 성평등 인식, 직장 및 가구 차원 등의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학력이 안정된 고용지위를 가져오고, 직장에서의 재량과 의사결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Gislason & Eydal, 2011). 그리고 저임금 남성일수록 단기적인 소득상실이 가구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우며(Duvander et al., 2016), 성역할 태도가 개방적인 남성일수록 육아휴직 사용 확률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Pragg & Knoester, 2017). 민간 기업에 다니는 남성은 육아휴직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단체교섭의 결과로 공공부문 보다 적은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일반 근로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27일 덜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Duvander & Löfgren, 2019). Brygen & Duvander(2006)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아짐을 밝혔다.

2. Leave of absence⁴⁾

Leave of absence는 1998년 도입된 휴직제도로써, 근로자가 창업 및 학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하며 이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단, 근로자의 새로운 사업이 고용주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여겨지거나 근로자의 휴직이 고용주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 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1) 수급 자격 조건

근로자는 정규직 및 한시직의 구분 없이 휴직 시작 시점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고용되었거나 지난 2년 중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적어도 휴직 시작 3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고용주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근로자에게 휴직 사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4) 전반적으로 스웨덴 법안 홈페이지 참조하여 정리함. <https://lagen.nu/1997:1293>

2) 혜택 (휴직 기간 및 급여)

최대 6개월 동안 완전히 휴직(full leave)할 수 있으며, 무급이다.

근로자는 본인의 휴직을 취소하고 복귀를 희망할 경우,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고용주에게 가능한 빨리 알려야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로부터 복귀 희망 의사를 전달받은 후 1개월 내에 다시 답변 주어야 한다.

근로자는 휴직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고될 수 없으며, 해고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3) 급여사용의 유연성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단 한번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육아휴직 제도처럼 여러 차례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Parental leave와 Leave of absence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참고] Parental leave와 Leave of absence 비교

	Parental leave	Leave of absence
소관 부서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Ministry of Employment	Ministry of Employment
수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부모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학생 등) · 소득 비례 육아휴직 급여 청구조건: 출산/입양 전 240일 간 일 250크로나 이상의 급여 수령 기록 · 수급자격이 미달 시, 일정 정액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거나,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
휴직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0일 (그 중 90일은 부모 각각에게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6개월 (1회 사용 가능)
소득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0일간 본인 월 급여 77.6% (상한액 455,000크로나), 나머지 90일은 일 180크로나 지급 · 수급자격이 미달 시, 240일 간 일 250크로나 지급 ·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 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
고용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휴가 만료 후 그 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산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는 휴가 신청인이 본인의 사업과 경쟁이 되는 사업을 준비한다고 생각할 시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동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휴직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

부록 3. 포용에서 경제혁신으로의 경로

본 연구는 포용적 방식으로의 경제혁신도 가능하고, 배제적 방식의 경제혁신도 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퍼지분석(fuzzy-set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해보았다. Charles Ragin이 발전시킨 Fs/QCA(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론은 하나의 성과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독립변수의 순효과(net effect)를 보는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은 다음 표와 같다. 성과변수로는 경제혁신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백만 명 당 특허출원률을 상정하였고, 원인변수로는 불평등도, 사회지출, 교육수준, 조세수준, 시장에 대한 국가통제 수준, 마지막으로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 가치 비중을 이용하였다.

[참고] 주요변수의 측정

구분	지표	변수명	측정	자료
성과 변수	특허	fpatent	백만 명 당 특허출원 수	World Bank
원인 변수	불평등도 (지니계수)	fgini	소득 불균형 지수 완전 평등(0)~완전 불평등(1)	OECD
	사회 지출	fsocx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에 대한 지출 (% of GDP)	OECD
	교육수준	feduatta	국가의 교육제도 내의 최고 수준 교육	OECD
	조세수준	ftax	국민부담률(% of GDP)	OECD
	시장에 대한 국가통제 수준	fstatecon	제품시장규제(PMR) - 공공소유권 (공기업 범위, 네트워크 영역의 정부 참여, 기업 직접 통제, 공기업 거버넌스) - 사업운영 관여 (가격통제, 규정의 사용)	OECD
	제조업 가치 비중	fmanufacturingvalue	제조업 가치창출 비중 (% of GDP)	World Bank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허를 대표로 하는 경제혁신에 이르는 길은 세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약한 통제와 높은 사회지출이 결합된 경우($\sim fstatecon * fsocx$), 두 번째는 높은 불평등과 높은 교육수준이 결합된 경우($fgini * feduatta$), 마지막으로 낮은 제조업 비중과 높은 조세 그리고 낮은 불평등이 결합된 경우이다($\sim fmanvalue * ftax * \sim fgini$). 세 가지 경로를 다 합하면 약 85% 정도의 경제성과를 설명하고(solution coverage) 일관성(solution consistency)은 0.74 수준이다. 세 가지 경로 각각의 설명력이 0.5를 다 넘지만 자신 만의 설명력은 두 번째 경로인 높은 불평등과 높은 교육수준이 결합되었을 때 0.15로 상대적으로 높다.

[참고] 분석 결과

	coverage	unique coverage	consistency
~fstatecon*fsox	0.59611	0.0629291	0.783459
fgini*feduatta	0.58238	0.156178	0.80538
~fmanvalue*ftax*~fgini	0.558352	0.0800917	0.837768
solution coverage: 0.84897			
solution consistency: 0.748739			

첫 번째 경로가 높은 사회지출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가 낮은 국가 유형은 포용적 성장 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는 자유롭고, 국가가 개인에 대한 투자는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가 높고 사회지출이 높은 경우 다소 경직된 사회경제체제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경로는 배제적 성장에 가까운 모형이다. 높은 불평등도에서 교육수준이 높으면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모형이지만, 만일 교육수준까지 낮다면 남유럽 모형으로 혁신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산업화된 경제(~fmanvalue)에서는 낮은 불평등도와 높은 조세수준이 결합되었을 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도가 낮은 사회에서 사회적 이동성이 높고, 높은 조세가 사회경제 파트에 다양한게 투자가 되었을 때 혁신이 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스웨덴의 성공을 말할 때도 단순히 사회보장을 넘어서 교육지출이나 과학기술투자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광범위한 공공 인프라에 대한 강조가 높다. 국가가 통제적 힘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높은 조세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 및 개인에 대한 투자는 탈산업화된 사회에서 혁신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경로를 대표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로로 설명이 가능한 국가(~fstatecon*fsox)는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덴마크, 일본, 영국, 헝가리이다. 두 번째 경로로 설명이 가능한 국가(fgini*feduatta)는 미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한국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탈산업화 유형 국가(~fmanvalue*ftax*~fgini)로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가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혁신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고, 현재 한국은 포용적 성장보다는 배제적 성장에 가깝고, 물질에 대한 인센티브가 혁신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높은 교육수준이 혁신을 아직까지는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물질에 대한 경쟁과 높은 교육경쟁이 저출산이나 낮은 행복도 등 다양한 문제점을 파생하고 있으며,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경로에서 포용적 경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적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상욱·서영욱·이민호. (2015). 우버 (Uber) 의 출현과 택시시장의 변화: 시장의 교란자인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인가.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132.
- 강충경. (2018),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맥스미디어.
- 구교준·최영준·박일주. (2017). 혁신과 복지국가: 역량 중심 복지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7년 동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 김영미·김은하. (2013). 복지국가와 일에 대한 태도: 노동시장 제도와 일 몰입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9(3): 81-112.
- 노민선. (2018).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임금정보브리프 2018년 제9호(통권 제35호): 11-16.
- 미우라 하루키. (2013). 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에 관한 고찰: 유사 개념의 포괄적 분류와 사회생태계적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47(5): 341-366.
- 반가운. (2016). 한국의 스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성과 국제비교, The HRD Review, 19(2): 6-18.
- 배귀희. (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99-227.
- 송지원. (2018).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육아휴직제도 및 사용실태. 국제노동브리프, 16(1): 65-72
- 이정훈, & 한기순. (2018).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창의력교육연구, 18: 87-106.
-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11272&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 최영준·전미선. (2017). 공공정책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분석. 한국행정학보, 51(3): 359-387.
- 최영준·구교준·윤성열. (2018). 복지국가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34(4): 229-258.
- 최희갑·박성빈. (2016). 한일 간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비교: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73: 23-50.
- Abu-Saifan, S. (2012). Social entrepreneurship: definition and boundarie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2(2): 22-27.
- Acemoglu, D., & Autor, D. (2011).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4: 1043-1171.
- Acemoglu, D., Robinson, J. A., & Verdier, T. (2012). Can't we all be more like Scandinavians? Asymmetric growth and institutions in an interdependent world (No. w1844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ghion, P., & Howitt, P. (1992).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323-351.
- Aghion, P., and Howitt, P., (2009). The Economics of Growth. MIT Press.
- Akçomak, I. S., Ter Weel, B. (2009). Social capital, innovation and growth: Evidence

- from Europe. *European Economic Review*, 53(5): 544–567.
- Alic, J. (2011). Everyone an innovator. *State of Innovation: The US Government's Role in Technological Innovation*, Boulder, Paradigm, 236–260.
- Amabile, T. M. (1988). A mode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0(1): 123–167.
- Amabile, T. M. (1996).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Harvard Business School Background Note.
- Anderson, C. J., & Hecht, J. D. (2015). Happiness and the Welfare State: Decommodification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Subjective Well-Being. *The Politics of Advanced Capitalism*, 357–380.
- Andrews, D., C. Criscuolo & P. Gal (2015). *Frontier Firms, Technology Diffusion and Public Policy: Micro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OECD Productivity Working Papers, No. 2, OECD Publishing, Paris.
- Anxo, D. (2009). Working time policy in Sweden. *Workingtime: In search of new research territories beyond flexibility debates*, 55–70.
- Arntz, M., T. Gregory & U. Zierahn (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89, OECD Publishing, Paris,
- Autio, E., Kenney, M., Mustar, P., Siegel, D., & Wright, M. (2014). Entrepreneurial innovation: The importance of context. *Research Policy*, 43(7): 1097–1108.
- Autor, (2015).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 Barczak, G., Lassk, F., & Mulki, J. (2010). Antecedents of team creativity: An examination of team emotional intelligence, team trust and collaborative culture.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19(4): 332–345.
- Baumol, W. J. (1990). Entrepreneurship: Productive, unproductive, and destruc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893–921.
- Bell, A. M., Chetty, R., Jaravel, X., Petkova, N., & Van Reenen, J. (2017). Who Becomes an Inventor in America? The Importance of Exposure to Innovation (No. w2406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loomberg Innovation Index
- Bugg-Levine, A., & Emerson, J. (2011). Impact investing: Transforming how we make money while making a difference. *Innovations: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6(3): 9–18.
- Bulut, C., Eren, H., & Halac, D. S. (2013). Which one triggers the other? Technological or social innovation.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5(4): 436–445.
- Carmeli, A., Reiter-Palmon, R., & Ziv, E. (2010). Inclusive leadership and employee involvement in creative tasks in the workplace: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safe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2(3): 250–260.
- Celik, M. A. (2015). Does the Cream Always Rise to the Top? The Misallocation of

- Talent and Innovation. Unpublished, University of Pennsylvania.
- Cohn, M. A., Fredrickson, B. L., Brown, S. L., Mikels, J. A., & Conway, A. M. (2009). Happiness unpacked: Positive emotions increase life satisfaction by building resilience. *Emotion*, 9(3): 361–368.
- Cornell University, INSEAD, & WIPO (2019).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Creating Healthy Lives—The Future of Medical Innovation*, Ithaca, Fontainebleau, and Geneva.
- CSEC report (2014). *An Ecosystem for Social Innovation in Sweden*.
- Damanpour, F. (1991). Organizational innovation: A meta-analysis of effects of determinants and moderato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3): 555–590.
- De Spiegelaere, S., Van Gyes, G., De Witte, H., Niesen, W., & Van Hootegem, G. (2014). On the relation of job insecurity, job autonomy, innovative work behaviou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work engagement.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23(3): 318–330.
- Deci, E. L., J. P. Connell, & R. M. Ryan(1989), “Self-determination in a work organiz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4): 580–590.
- Decker, R. A., Haltiwanger, J., Jarmin, R. S., & Miranda, J. (2016). Declining business dynamism: What we know and the way forward. *American Economic Review*, 106(5): 203–07.
- Deepa Babu, K. G., & Manalel, J. (2016).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Firm Performance: A Critical Examination. *IOSR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18(4): 21–28.
- Dezernat Zukunft (2018) *The Productivity Paradox - A Survey*, <https://dezernatzukunft.org/2018/10/02/the-productivity-paradox-a-survey-2/>
- Drucker, P. F.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Harper & Row.
- Duvander, A. Z. (2017). 스웨덴의 휴가제도: 스웨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일하는 걸까?. *국제노동브리프*, 15(7): 9–19.
- Duvander, A. Z. & Johansson, M. (2012). What are the effects of reforms promoting father's parental leave us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3): 319–330.
- Duvander, A. Z., Mussino, E., & Tervola, J. (2017). Men's Childcare: A Comparative Study of Fathers' Parental-Leave Use inSweden and Finland. In *PAA 2017 Annual Meeting*.
- Duvander, A. Z., & Viklund, I. (2014). Women's and men'sparental leave. *Lönsamt arbete. Familjeansvarets fördelning ochkonsekvenser*. Governmental report for the Delegation for Gender Equality inWorking Life.
- Duvander, A. Z. & Löfgren, N (2019). 'Sweden country note,' in Koslowski, A., Blum, S., Dobrotić,I., Macht, A., and Moss, P. (eds.)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and Research 2018*.

http://www.leavenetwork.org/lp_and_r_reports/.

- Esser, I. (2009). Has welfare made us lazy? Employment commitment in different welfare states. *British Social Attitudes. The 25th Report*. London: Sage.
- European Union (2018).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 Filippetti, A. & Guy, F. (2016). Skills and social insurance: Evidence from the relative persistence of innovation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n Europe. *Science and Public Policy*, 43(4), 505–517.
- Frey, C. B. & Osborne, M.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 Friesenhahn, E. (2016). Nonprofits in America: new research data on employment, wages, and establishments, *Monthly Labor Review*,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Gagne, M. and E. L. Deci. (2005),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work motiv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4): 331–362.
- Gault, F. (2018). Defining and measuring innovation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Research Policy*, 47(3): 17–622.
- GEDI (2018).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 GIIN (2019). *2019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
- Giving Index (2015)
- Gíslason, I. V., & Eydal, G. B. (2011). Parental leave, childcare and gender equality in the Nordic countries. *Nordic Council of Ministers*.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5)
-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 Goos, M., Manning, A., & Salomons, A. (2014). Explaining job polarization: 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04(8): 2509–26.
- Gordon, R. J. (2012). Is US economic growth over? Faltering innovation confronts the six headwinds (No. w1831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Graddy-Reed, A., & Feldman, M. P. (2015). Stepping up: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ole of social innovation in response to an economic recession.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8(2): 293–312.
- Henrekson, & M., Rosenberg, N. (2001). Designing efficient institutions for science-based entrepreneurship: Lesson from the US and Sweden.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26(3): 207–231.
- Hombert, J., Schoar, A., Sraer, D. A., & Thesmar, D. (2019). Can unemployment insurance spur entrepreneurial activity? Evidence from France. *HEC Paris Research Paper No. FIN-2013-1020*.
- Hubert, A. (2010). Empowering people, driving change: Social innovation in the European Union, *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ors (BEPA)*.
- Hunt-Bull, N. (2006). *A Neo-Luddite Manifesto: or Why I Do Not Love Robots*.
- IMF, (2017), “Fostering Inclusive Growth.” *Staff Note for the discussion at the*

- Meeting of G20.
- Inglehart, R., C. Haerpfer, A. Moreno, C. Welzel, K. Kizilova, J. Diez-Medrano,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t al. (eds.). 2014. World Values Survey: Round Six – Country-Pooled Data file Version: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Madrid: JD Systems Institute.
- Johansson, E. A. (2010). The effect of own and spousal parental leave on earnings, IFAU Working paper, 2010: 4.
- Jones, R. & J. Lee (2018). Enhancing dynamism in SMEs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10, OECD Publishing, Paris.
- Kao, J. (2007). Innovation nation: How America is losing its innovation edge, why it matters, and what we can do to get it back. Simon and Schuster.
- Karakaya, E. (2017). Why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matter in innovation systems: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ning and metal producing industry of Sweden. In DRUID Society Conference.
- KISTEP (2019) 2019년 세계혁신지수(GII) 분석, KISTEP 통계브리프 2019년 제11호.
- Knight, F. (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Houghton Mifflin, Boston.
- KPMG(2019). 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 LAB2050 (2018). 자유와 안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Leiden Ranking 2018
- Lindquist, G. S., & Wadensjö, E. (2006). National SocialInsurance-not the whole picture. Stockholm: Regeringskansliet.
- Lorenz, E. (2015). Work organisation, forms of employee learning and labour market structure: accounting for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place innovation. *Journal of the Knowledge Economy*, 6(2): 437–466.
- Lorenz, E., & Lundvall, B. Å. (2010). Accounting for Creativity in the European Union: A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 competence, labour market structure, and systems of education and training.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5(2): 269–294.
- MacLeod, G. A. (1973). Does creativity lead to happiness and more enjoyment of lif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7: 227–230.
- McClelland, D. C. (1965). N achievement and entrepreneurship: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389.
- Miettinen, R. (2013). Innovation, human capabilities, and democracy: Towards an enabling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Mkandawire, T. (2007).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and innov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19(1): 13–29.
- Murphy, L., Huggins, R., & Thompson, P. (2016). Social capital and innov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policies.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34(6): 1025–1057.

- Nedelkoska, L., & Quintini, G. (2018). Automation, skills use and training. OECD Publishing.
- Niesen, W., Van Hootegeem, A., Vander Elst, T., Battistelli, A., & De Witte, H. (2018). Job insecurity and innovative work behaviour: A psychological contract perspective. *Psychologica Belgica*, 57(4): 174–189.
- OECD (2010),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Innovation", in SME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080355-50-en>.
- OECD (2014a). Education at a glance
- OECD (2014b).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 OECD (2016). The Productivity–Inclusiveness Nexus: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58303-en>.
- OECD (2018a).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 OECD (2018b).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co_surveys-kor-2018-en.
- Oldham, G. R. & A. Cummings(1996), "Employee creativity: Personal and contextual factors at 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3): 607–634.
- Pacek, A., & Radcliff, B. (2008). Assessing the welfare state: The politics of happiness. *Perspectives on Politics*, 6(2): 267–277.
- Page, S. E. (2007). Making the difference: Applying a logic of diversity.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1(4): 6–20.
- Pestoff, V. (1998). Beyond the Market and State: Social Enterprises and Civil Democracy in a Welfare Society. Aldershot: Ashgate.
- Pragg, B., & Knoester, C. (2017). Parental leaveuse among disadvantaged fa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38(8): 1157–1185.
- Raffiee, J., & Feng, J. (2014). Should I quit my day job?: A hybrid path to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7(4), 936–963.
- Ram, S. (1987). A 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 *ACR North American Advances*.
- Robinson, K., Robinson, D., & Westley, F. (2012). Agency in Social Innovation: Putting the Model in the Model of the Agent. In *Social Innovation* (pp. 162–177). Palgrave Macmillan, London.
- Romer, P. (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1002–1037.
- Runco, M. A. (2009). Parsimonious creativity 25. and its measurement. *Measuring creativity*, 393.
- Salamon, L. M., & Sokolowski, W. (2018). Beyond nonprofits: In search of the third sector. In *The Third Sector as a Renewable Resource for Europe: Concepts, Impac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p. 7–48).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SDSN (2019). World Happiness Report.
- Simon, H. (2014). Hidden Champions–The Vanguard of Globalia. University of Economics Prague,
- Sjögren Lindquist, G., & Wadensjö, E. (2006). National Social Insurance—not the whole picture. Supplementary compensation in case of loss of income. Report for ESS, Expert Group on Economic Studies, 5.
- Soete, L. (2018). Destructive creation: Explaining the productivity paradox in the digital age, in: Work in the Digital Age: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y Network.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Ltd, London. 29–46
- Tan, W. L., Williams, J., & Tan, T. M. (2005). Defining the ‘social’ in ‘social entrepreneurship’: Altruism and entrepreneurship.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3): 353–365.
- US Bureau of Labour Statictics. (2015). Employment statistics.
- Van der Wel, K. A., & Halvorsen, K. (2015). The bigger the worse? A comparative study of the welfare state and employment commitment.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9(1): 99–118.
- Weber, E. P., & Khademian, A. M. (2008). Wicked problems, knowledge challenges, and collaborative capacity builders in network setting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2): 334–349.
- World Giving Index(2015)
- Zaltman. Gerald & Melanie Wallendorf. (1983). Consumer Behavior: Basic Findings and Management Implic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제 2 장

혁신을 촉진하는 포용적 사회정책
(PPT 발표자료)

I. 국문본 발표자료

혁신을 촉진하는 포용적 사회정책 - 혁신적 포용국가 원칙과 전략 -

2020. 02. 15.
혁신과 포용 연구팀



핵심 연구 질문

치열한 자본주의 vs. 따뜻한 자본주의

포용적 정책은 혁신과 양립할 수 있는가?

- ☑ 양립불가능: 기술선도국가들은 불평등이 높은 자유시장경쟁제형 제도(치열한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반면, 다른 후발 국가들은 보다 평등한 조정시장경쟁제형 제도(따뜻한 자본주의)를 선택함(Acemoglu, Robinson and Verdier 2012)
; 큰 복지국가는 기업가정신을 감소시킴 (Henreckson, 2002)
- ☑ 양립가능: 복지국가는 위험감수 행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과 숙련 형성을 강화하여 혁신에 기여함 (Mkandawire 2007, Filippetti and Guy 2015, Bell et al. 2018)
; 복지지출은 R&D 지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Koo, Choi, and Park, 2019)
; OECD와 IMF의 포용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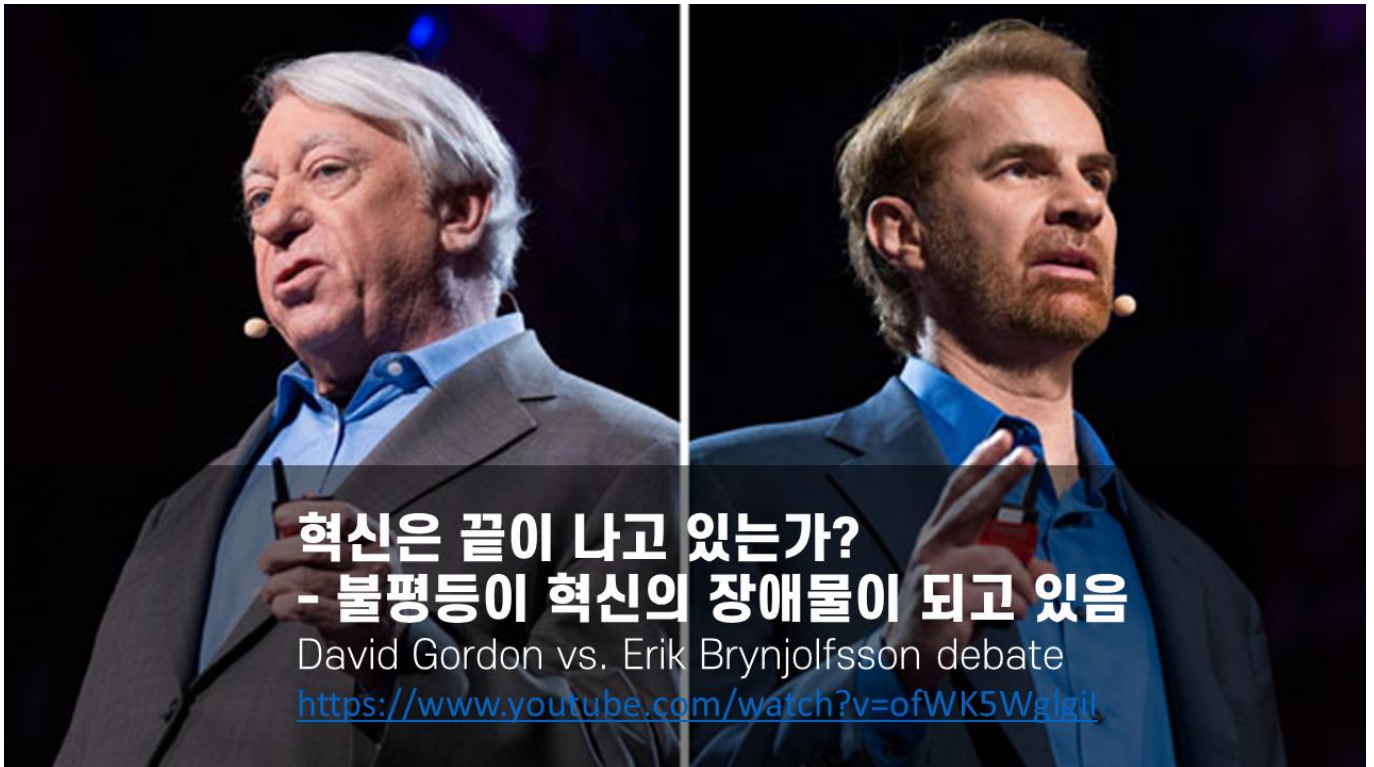
왜 포용적 정책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 ☑ 어떻게 포용적 정책은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가?

CHAPTER1

혁신적 포용국가의 맥락

- 01 생산성의 역설과 불균등성장
- 02 보호주의의 등장
- 03 인적자본의 최적 활용 필요성
- 04 복잡한 사회문제와 새로운 문제해결주체로서의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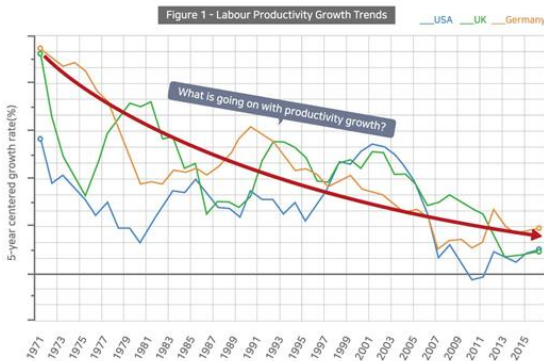
CHAPTER1

1. 생산성의 역설과 불균등 성장

생산성의 역설과 양극화 심화

- ☑ 1970년대 이후 생산성의 전반적 감소 : 생산성의 역설(Solow)와 불균등성장(Baumol)이 나타남.
- ☑ 생산성이 급증하는 산업분야와 정체하는 산업분야의 격차 증가
- ☑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기업이 소수가 되고 다수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노동시장 이중화로 이어짐

생산성의 역설 (Dezernat Zukunft, 2018)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기업생산성 변화(2000년대 이후)

(Andrews, Criscuolo and Gal, 2015)

Labour productivity; index 200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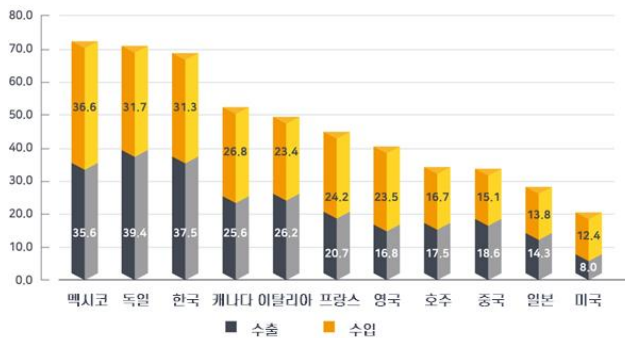
CHAPTER1

2. 무역 보호주의의 등장

세계화와 경제적 민족주의의 등장

- ☑ 한국은 OECD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세계화된 경제 중 하나임. 그림에서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 ☑ 경제적 민족주의와 무역분쟁의 증가로 인해 한국 경제의 취약성 노출되고 있음
- ☑ 조립식 자본주의 방식으로 한국경제가 발전해오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취약성을 보임. 건설한 중소기업의 수가 매우 적음
- ☑ 건강한 소/중기업을 양성하는 경제 전략의 필요성

G20 주요국가 무역의존도 (2017)



국가별 히든챔피언 현황



전세계 히든챔피언 수
2,734

자료: Simon Kucher & Partners (2014)
<https://www.slideshare.net/GregorioLato/simon-kucher-hermannsimonhiddenchampions>
- Hidden Champion: 한 품목에서 세계 3위 이내거나 각 대륙에서 1위인 중소기업(수입 연 50억유로 미만)

CHAPTER1

3. 인적자본의 최적 활용 필요성

-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학력 인적자본이 보편화되어 있으며(69.8%), 청소년·청년의 높은 역량·학습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 그러나 고학력 인적자본의 활용은 매우 떨어지고 있음.
 - 대졸 NEET 수준이 OECD보다 월등히 높으며, 경력단절로 인한 남녀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큼
- 청소년 학업성취도와 성인 인적역량의 차이가 매우 큼(PIAAC Survey of adult skills)

한국과 OECD 평균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2000-2017)



Source: OECD (2019),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indicator)

한국과 OECD 평균 교육수준별 NEET 비율(2014)



Source: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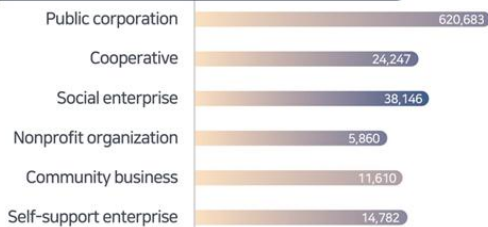
CHAPTER1

4. 복잡한 사회문제와 새로운 문제해결주체로서의 시민

시민사회와 기업은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여겨지고 있음

- ☑ 일상적인 생활 이슈부터 세계 환경 문제까지,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짐
- ☑ 사회혁신은 조직된 시민활동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음
- ☑ 사회혁신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
- ☑ 유럽과 미국의 제3섹터 규모는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보여줌 (Salamon 2018; Salamon & Sokolowski, 2018), 한국은 상당히 취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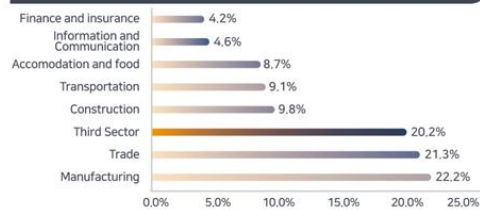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제3섹터 고용규모(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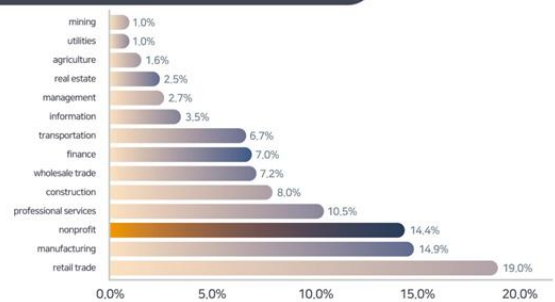
5% of Korean full-time employees work in the nonprofit sectors.

Source: Better Future (2017)

미국의 비영리 고용 비중(2015)



유럽의 비영리 고용 비중(2014)



Source: Salamon & Sokolowski (2018), edit

CHAPTER2

한국의 포용적 혁신 진단

- 01 혁신이란?
- 02 한국의 혁신: 역사와 성과
- 03 경제혁신의 이슈
- 04 사회혁신의 이슈

CHAPTER2

1. 혁신이란?

혁신의 정의

- ☑ 혁신을 설명하는 3가지 조건 1) 새로운가? 2) 가치를 창출하는가? 3) 문제를 해결하는가?

혁신의 주체와 범위

- ☑ 혁신주체는 개인, 기업, 시민사회, 국가 등 다양하며 영리 목적 활동 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활동도 포괄함
- ☑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을 포괄하며, 상품혁신과 과정혁신(공정혁신)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임



Source: Joe Dwyer (<https://digitent.com/what-is-innovation>)



Source: Abu-Saifan, 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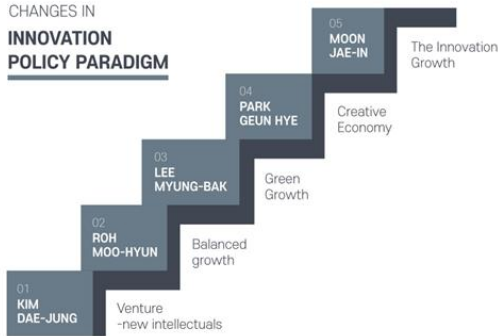
CHAPTER2

2. 한국의 혁신: 역사와 성과

우수한 혁신 투입 및 혁신 산출

- ☑ IMF 외환위기 극복 이후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혁신 정책을 통한 경제 부흥 노력
- ☑ **Global Innovation Index 2019년에 따르면 한국은 11위임 (1인당 GDP는 28위, 2018년)**
- ☑ 사회혁신 논의는 2000년대 참여정부부터 본격화: 정부가 제도지원을 급속히 확충하면서 사회적 경제 진흥 유도

CHANGES IN INNOVATION POLICY PARADIGM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Types (founding year)	Social Enterprise (2012)	Cooperative (2012)	Self-support enterprise (2012)	Community enterprise (2018)
Ministr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bjectives	Creating employment for vulnerable people and providing services	Improving union rights and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	Support for the self-help of the beneficiary, etc.	Improving local environment and activating local community
Law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MOS Guidelines
Number of orgs (as of year 2018)	1,713	10,640	1,149	1,448

Source: 관제복지협동(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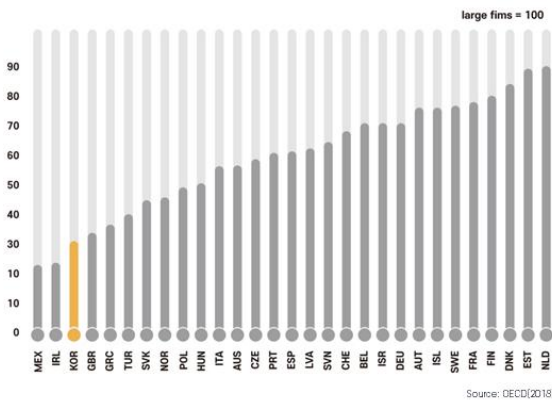
CHAPTER2

3. 경제혁신의 이슈 ① 소수에 의한 혁신

생산성의 양극화: 혁신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

- ☑ 한국 고용의 82.2%는 중소기업의 몫(중소기업 위상지표, 2018)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가 매우 큼 → 불평등 초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비중 (2014)



Source: OECD(2018)

기업규모별 평균임금 국제비교 (500인 이상 대비)

(unit : US\$ PPP, %)

	Korea(2017)		U.S(2015)		Japan(2017)		France(2015)	
	Average wage	Ratio	Average wage	Ratio	Average wage	Ratio	Average wage	Ratio
1-4 persons	1,990	32.6	3,731	78.8	2,697	65.7	3,083	58.8
5-9 persons	2,945	48.3	3,071	64.8	3,166	77.1	3,321	63.4
10-99 persons	3,490	57.2	3,450	72.8	3,438	83.8	3,625	69.2
100-499 persons	4,267	70.0	4,029	85.1	3,605	87.8	4,134	79.5
OVER 500 persons	6,097	100.0	4,736	100.0	4,104	100.0	5,238	100.0
TOTAL	3,302	54.2	4,200	88.7	3,616	88.1	3,811	72.8

Source: Pho(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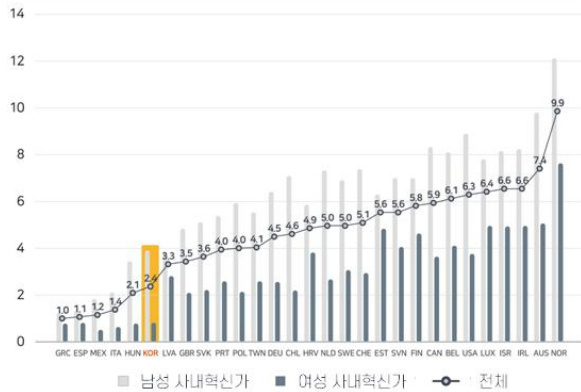
CHAPTER2

3. 경제혁신의 이슈 ① 소수에 의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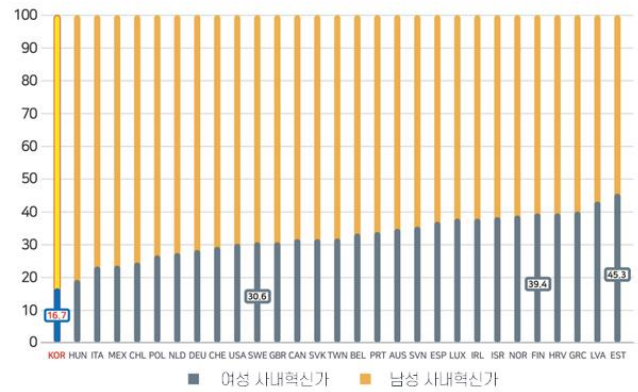
한국의 경제혁신은 대기업의 사내혁신가가 주도해 옴. 그러나 대기업 이외의 혁신은 매우 부족한 상태

- ☑ 세계적으로 높은 특허출원률에도 불구하고 사내혁신을 경험한 이들은 2.4%로 매우 낮은 수준임
- ☑ 대기업의 혁신활동은 중요하지만, 고용이나 생활수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
- ☑ 특히 여성 사내혁신가의 비중은 최하위 수준

국가별 사내혁신가 경험 보유 비중(%)



국가별 사내혁신가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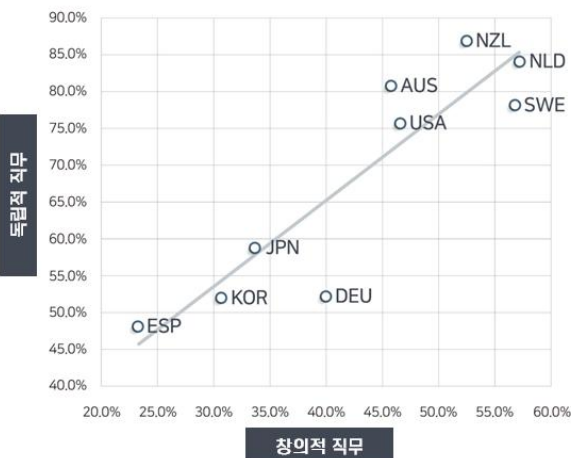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5 Adult Population Survey

CHAPTER2

3. 경제혁신의 이슈 ② 창의성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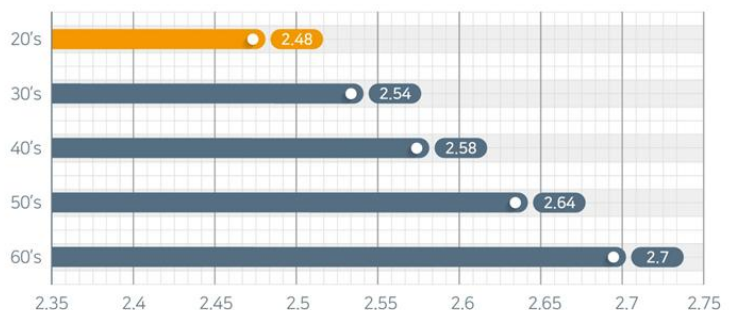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능력인 창의성이 부재함

- ☑ 정형편향적 기술변화: 미래사회에는 창의적인 업무·일자리만이 살아남을 것(Goos et al, 2014)
- ☑ OECD와 비교 시, 한국의 노동자들은 반복적이며 의존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중이 높음
- ☑ 심지어, 2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자신의 창의성을 가장 낮게 응답하고 있음



Source : the analysis of the 6th world value survey

나는 창의적이다(1 to 4)
20대 후반 평균 = 2.42



Source : the analysis of the LAB2050 Survey

CHAPTER2

3. 경제혁신의 이슈 ② 창의성의 부재

창조적 성과의 부족

- ☑ 2019년 Global Innovation Index 기준 무형자산 생산성은 뛰어나지만,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생산 및 온라인 창의성 측면에서 다소 낮은 순위.
창의적 성과 전체 순위(17위)도 혁신 전체 순위(11위) 대비 낮음

항목	세부 항목	순위				
		'15	'16	'17	'18	'19
창의적 성과		28	21	15	17	17
무형자산	상표권 원산지/bn PPP\$ GDP					
	산업디자인권 원산지/bn PPP\$ GDP					
	ICT 비즈니스 모델 창출	19	2	3	2	3
	ICT 및 조직모델 창출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문화· 창의 서비스 수출, % total trade					
	영화제작 /mn pop. 15-69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시장/th pop. 15-69	49	50	35	37	42
	출판업 및 미디어제조업, % manufacturing					
	창의적 제품의 수출, % total trade					
온라인 창의성	gLTD(일반 최상위 도메인)의 유지/th pop. 15-69					
	ccTLD(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의 유지/thpop. 15-69	41	35	40	37	37
	위키피디아 출간/mn pop. 15-69					
	휴대폰 앱 개발(3년 평균)/bn PPP\$ GDP					

Source : the analysis Source :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KISTEP(2019) Analysis of Global Innovation Index(GII) 2019, KISTEP Statistics Brief 2019(11) of the LAB2050 Survey

CHAPTE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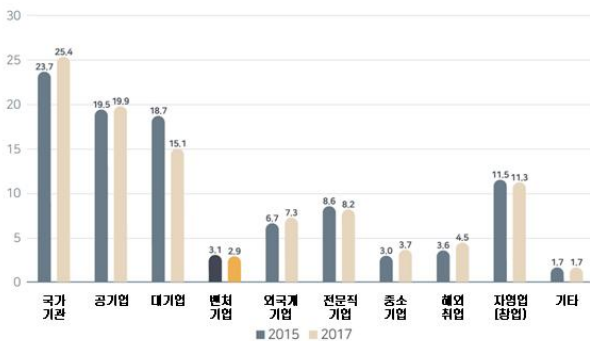
3. 경제혁신의 이슈 ③ 과도한 안정성 추구

혁신, 기업가 정신의 기본은 위험감수(risk-taking)에서 비롯됨

20대-30대는 지식기반 창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연령대 (Bell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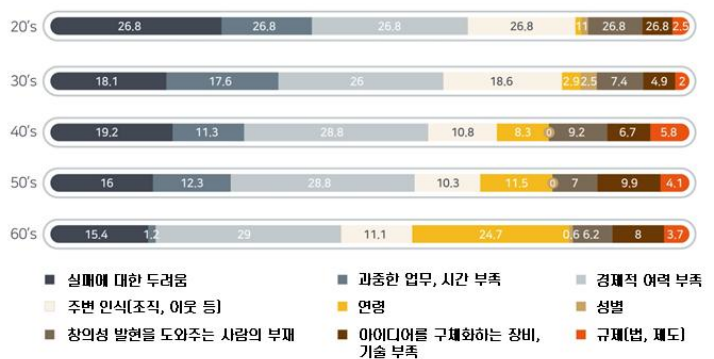
- ☑ 한국의 청년들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위험과 도전(risk-taking)을 회피하고 있음.
☑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혁신 잠재력의 심각한 저하로 이어짐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13~29세)



Source: KOSIS Social survey(2017)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Source : the analysis of the LAB2050 Survey

CHAPTER2

3. 경제혁신의 이슈 ③ 과도한 안정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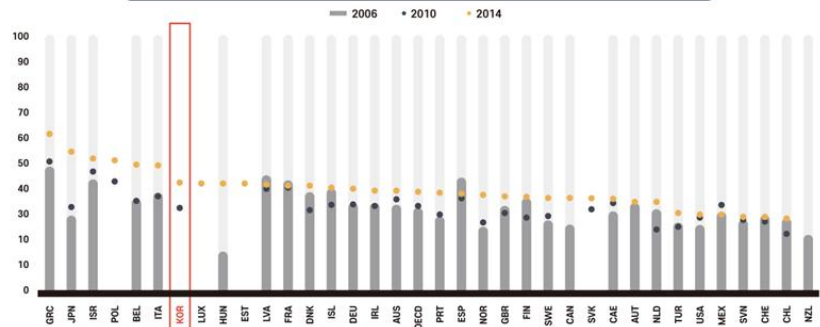
낮은 기업가정신

- ☑ 기업가 정신은 미래혁신 활동의 폭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임 :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하여 기업가 정신의 수준이 낮음
- ☑ 실패가 두려워 창업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가장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지닌 계층은 안정성을 추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선택지가 없는 이들이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

2018년 기업가정신 · 경제규모 비교

Ranking	Country	GEI (2018)	GDP(2017) ranking
1	United States	83.6	1
2	Switzerland	80.4	19
3	Canada	79.2	10
4	United Kingdom	77.8	6
5	Australia	75.5	13
6	Denmark	74.3	36
7	Iceland	74.2	105
8	Ireland	73.7	35
9	Sweden	73.1	23
10	France	68.5	5
24	Korea	54.2	11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 (18-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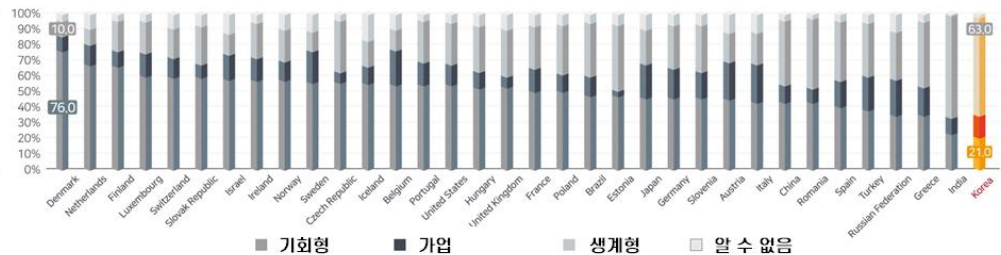
CHAPTER2

3. 경제혁신의 이슈 ④ 높은 생계형 창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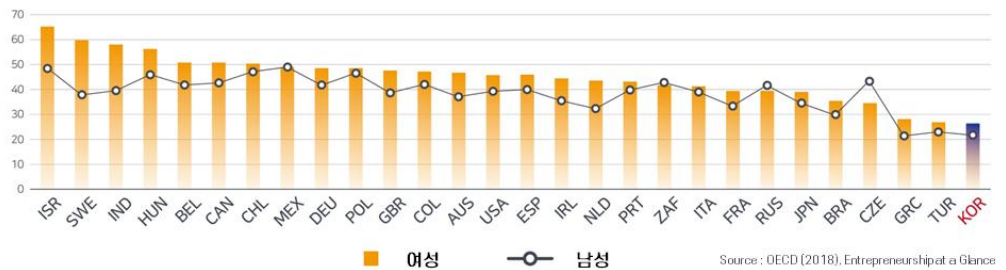
기회추구형 창업, 관심과 흥미로 창업을 택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

- ☑ 자신의 관심과 열정으로 일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이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사업을 시작한 이유 (기회형, 가업, 생계형 등)



관심과 열정에 의한 창업 여부 국제비교 (성별)



CHAPTE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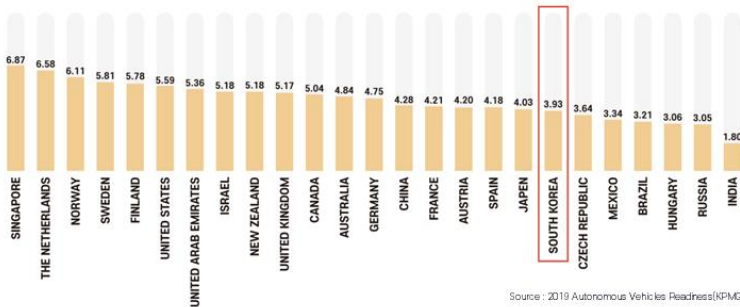
3. 경제혁신의 이슈 ⑤ 낮은 수용성

혁신 도입과 혁신을 반대하는 이들의 대립과 갈등 존재 - 혁신 기술에 대하여 낮은 소비자 수용도

☑ 사회의 낮은 혁신 수용성은 새로운 기술, 서비스, 상품 등의 진입에 제약이 됨

☞ 네오라이트인은 디지털 기술이 막대한 기대가 아닌 규범이 된 사회를 향하는 거대한 흐름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의미함(Adam Howatson, 2018)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



택시와 모빌리티 신산업 간의 갈등

2014.08	우버, 국내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X 출시, 택시업계 반발
2015.03	우버 X 서비스 중단
2018.10	카카오, 카풀 전용앱 드라이버용 출시 택시업계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 출시
2018.12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출시 발표 택시단체, 카카오T 택시 호출 거부 선언 카풀 반대하는 택시기사 분신사망 사건 카풀서비스 출시 철회

Source : <http://news.mt.co.kr/mview.php?rc=2019022416375065276>

CHAPTER2

4. 사회혁신의 이슈 ① 시민사회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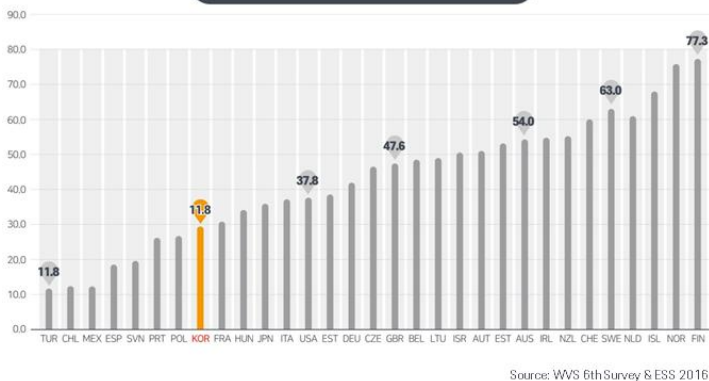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사회혁신의 주체인 시민사회 역량은 대체로 제한적

☑ 시민사회는 사회혁신의 주요 주체(Economis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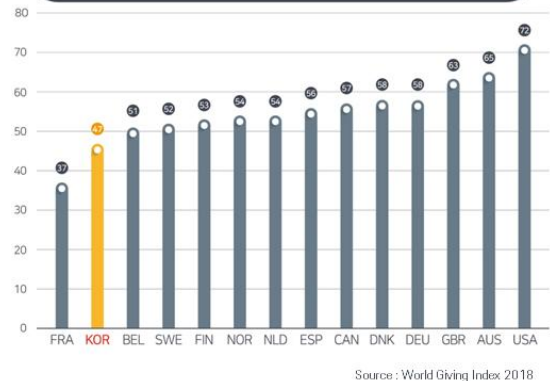
☑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은 시민사회의 핵심자원이자 사회적 기업의 주요 자원임(Madhooshi et al, 2015; SOLIDUS 2018)

☑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나 타인에게 도움을 준 경험은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남

대다수의 사람들을 신뢰하는가?(%)



지난 5년간 낯선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CHAPTE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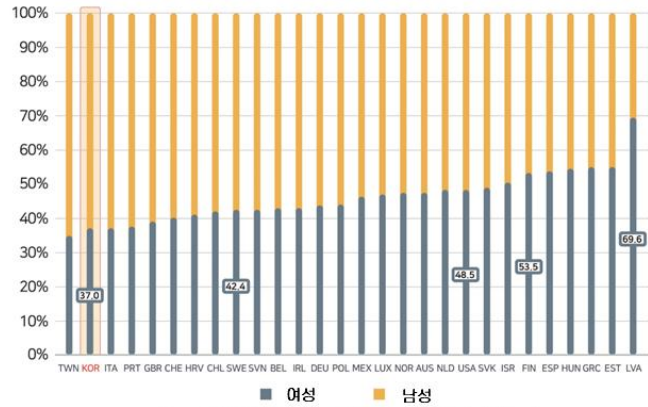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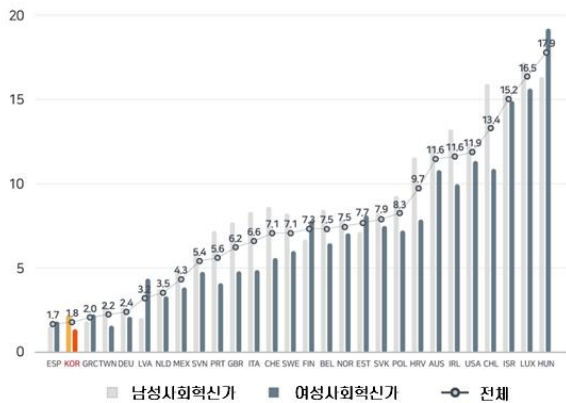
4. 사회혁신의 이슈 ② 사회혁신가 활동

사회혁신가(사회적·환경적·공익적 활동을 경험한 사람)의 비중이 매우 낮은 한국

☑ 사회적·환경적·공익적 가치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비중은 1.8%로 매우 낮음

☑ 사회적·환경적·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혁신가의 성비 역시 남성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

사회적·환경적·공익적 가치를 목적으로 가지고 혁신활동을 시작하거나 주도한 적이 있습니까?(단위: %)



Source: GEM(2015)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Attitudes (database)

CHAPTER3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 01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혁신으로
- 02 혁신과 포용의 공존
- 03 실패를 사회경제적 자산으로
- 04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례 :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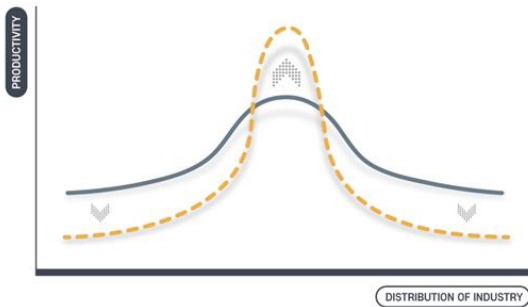
CHAPTER3

1.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혁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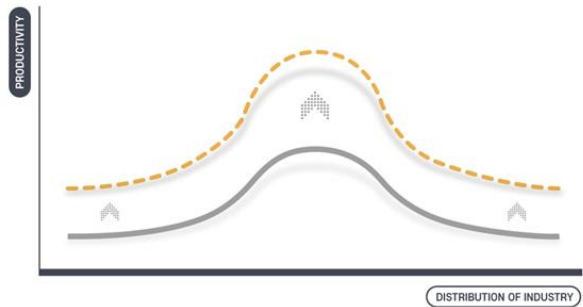
모두에 의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혁신

- ☑ 만약 몇몇 기업들이 괄목할만한 생산성 성장을 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복지국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배제적 성장
- ☑ 포용적 혁신은 포용적 혁신은 선도적 산업에서 '정체된' 산업으로의 광범위한 생산성 성장을 가정하고, 과학기술혁신(STI :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혁신(DUI: Doing, Using, Interacting) 및 사회혁신도 추구함 (예: 풀뿌리형 혁신)
- ☑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이를 통해 개인의 혁신역량 잠재력을 활성화시킴. 이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의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함

생산성의 역설 : 배제적 성장



포용적 혁신 : 혁신적 포용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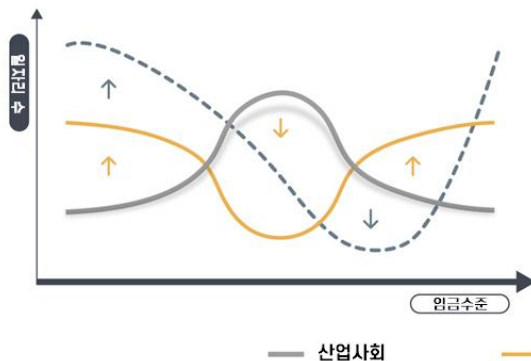
CHAPTER3

1.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혁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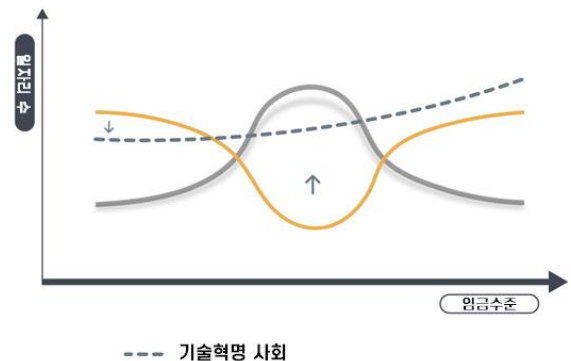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중산층 일자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패턴은 디지털 혁명 시대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 포용적 제도를 통해 인적 역량을 강화하면, 저역량 일자리가 줄고, 중간역량 일자리를 확장시킬 수 있음
→ 생산성 격차가 작고 평등한 노동시장을 지향

1) 배제적 혁신국가



2) 혁신적 포용국가



CHAPTER3

1.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과 혁신으로

모든 국가에서 생산성의 역설과 배제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님

- ☑ OECD 국가별로 생산성 증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핀란드와 같이 자생산업 영역에서 생산성 증가가 더 높기도 함
- ☑ 전반적으로 일국 내에서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만, 산업간 격차가 벌어지는 곳도 있음: 스웨덴의 사례가 그러함

- **제도와 정책이 중요함 : 정부의 역할**

제조업 분야 기업생산성 변화 (OECD,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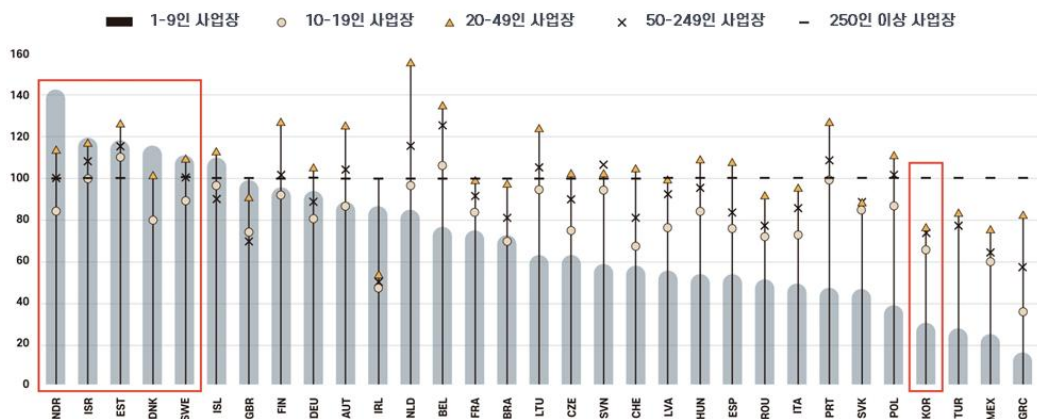
CHAPTER3

2. 혁신과 포용의 공존

포용적 사회정책이 잘 발달된 곳에서 배제적 혁신이 아닌 포용적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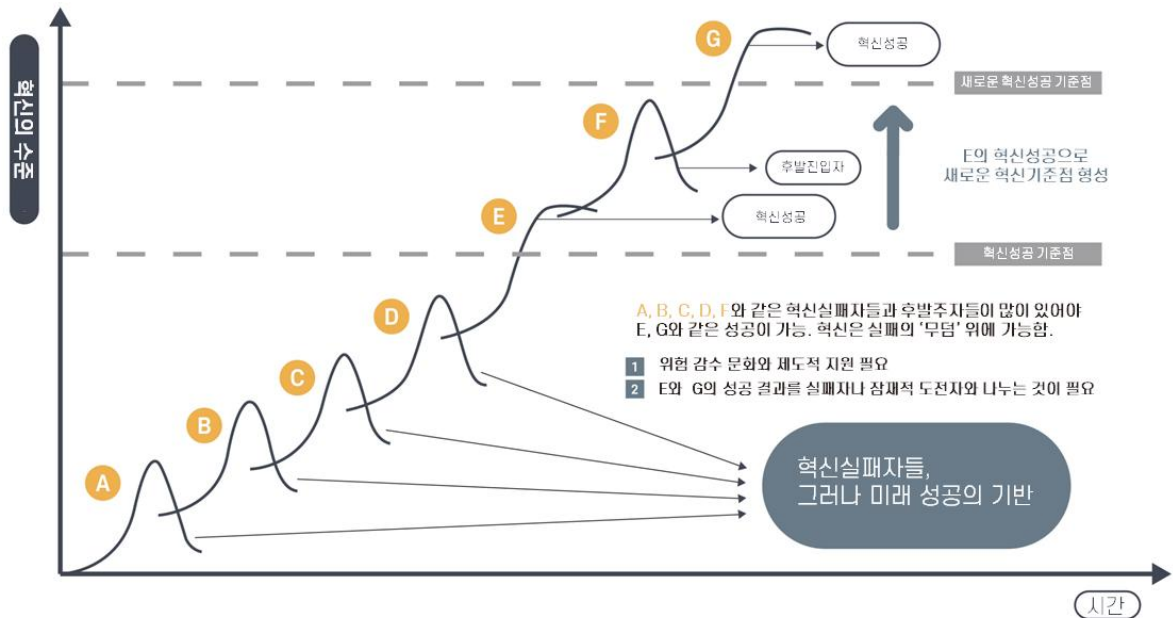
- ☑ 250인 사업장 대비 1-9인 사업장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

서비스 분야



CHAPTER3

3. 실패를 사회경제적 자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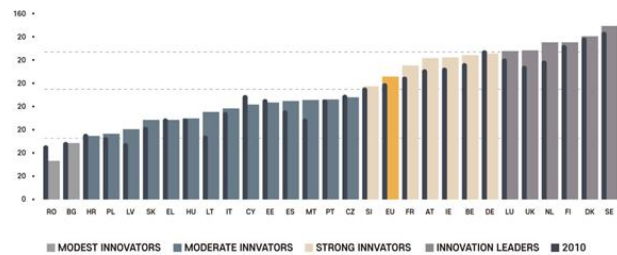
CHAPTER3

4.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례 :스웨덴

- 1990년대 이래로 대기업과 전통산업 위주 경제정책에서 중소 및 창업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함. 이와 동시에 경제 및 노동시장 탈규제와 조세개혁으로 혁신활동을 촉진함 (e.g. The New Competition Act in 1993)
- 공정혁신뿐 아니라 상품 혁신에 있어서도 스웨덴은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는 국가로 변모함 (유럽혁신지수에서 1위) 젊은 기업과 신생 기업은 미국 사업 부문보다 스웨덴 사업 부문에서 더 두드러짐 (Heyman et al., 2016; Decker et al., 2014)
- 성공의 주요 요인 : 경제 혁신과 함께, 안정된 사회보호정책(재분배적 소득보장, 무상의료), 사회투자 정책(무상대학교육, 평생교육), 가족친화정책, 창업에 특화된 사회정책(창업 휴가) (sources: World Economic Forum, Forbes, Independent,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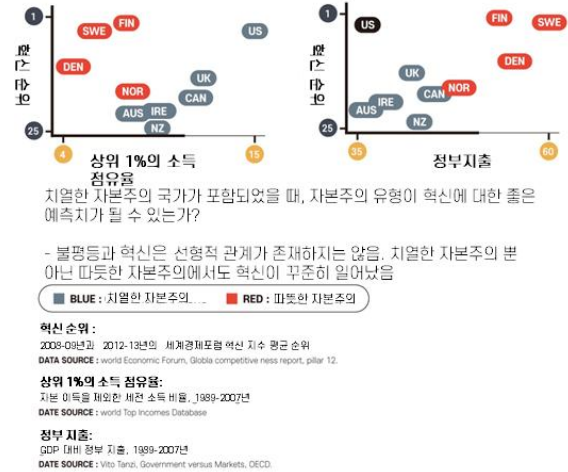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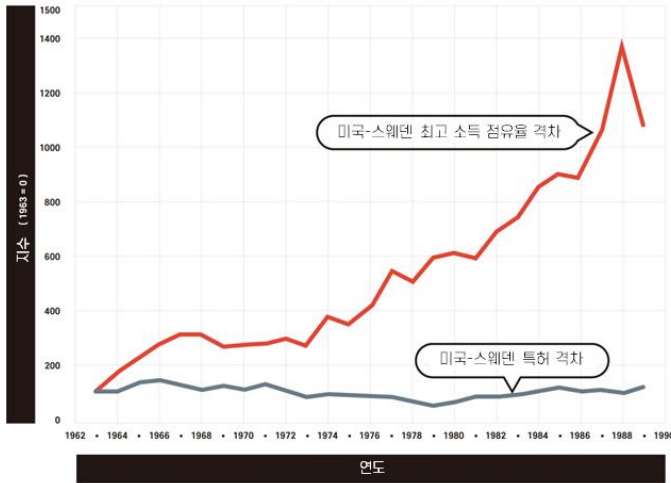
-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가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 World Economic Forum (2017)



- EU에서 가장 높은 혁신지수를 보여주는 국가
-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8)

CHAPTER3

4.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례 : 스웨덴



-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2/09/28/is-sweden-awesome-because-it-mooches-off-the-us/>
- <https://lanekenworthy.net/2012/09/29/will-everyone-be-worse-off-if-the-united-states-turns-social-democra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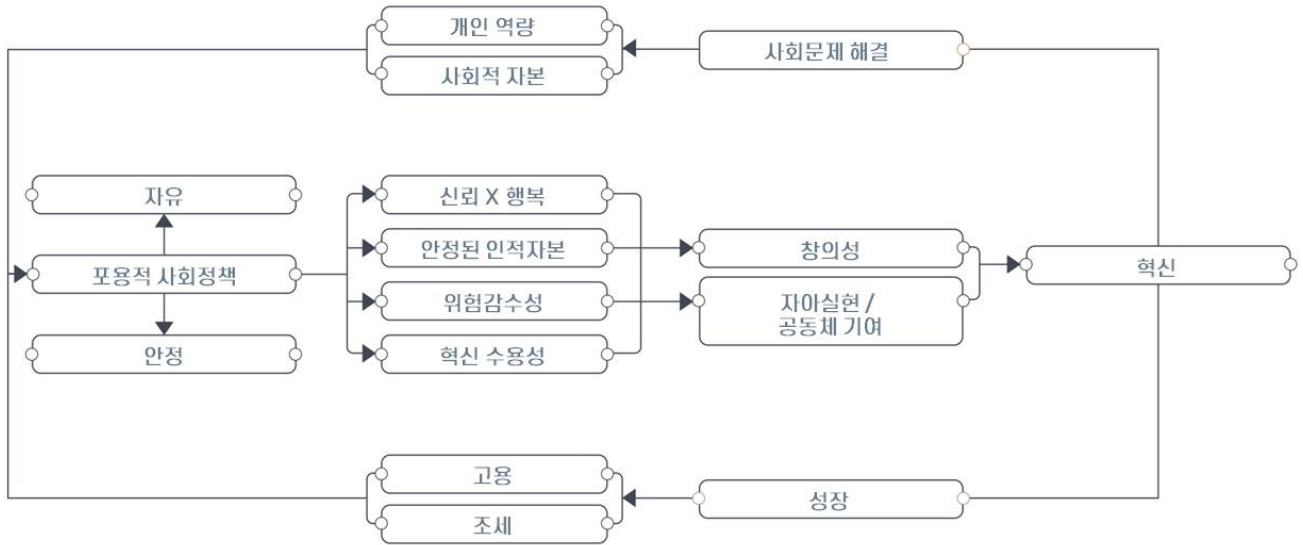
CHAPTER4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 01 포용적 사회정책의 영향
- 02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 03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CHAPTER4

포용적 사회정책의 영향



CHAPTER4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풀뿌리 혁신을 촉진하는 포용적 사회정책

- ☑ 안정성 증진 : 삶의 질을 높이고 생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사회정책
- ☑ 다양성 증진 : 권위주의와 획일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과 삶을 증진시키는 사회정책
- ☑ 보편성 증진 :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정책



CHAPTER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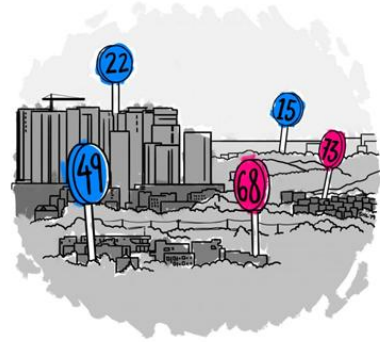
2.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 더 이상의 아인슈타인을 잃지 말기!

- ☑ 보편적 교육정책, 개별적 교육서비스를 통해 모든 개인이 혁신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함 (Miettinen, 2013)
- ☑ 기회균등정책 도입 통해 부의 불평등 해소 및 인적자본 확충 (예 : adversity score)
- ☑ 빈곤이 인지적 기능을 저해함 (Mani et al, 2013).

초등학교 3학년 수학성과 특출출원률 관계 (Bell et al 2017)



Adversity Score (SAT)



CHAPTER4

2.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 안정성 제공 → 위험감수성과 수용성

위험과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안정성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Filippetti & Guy, 2015; Raffee, J., & Feng, J.,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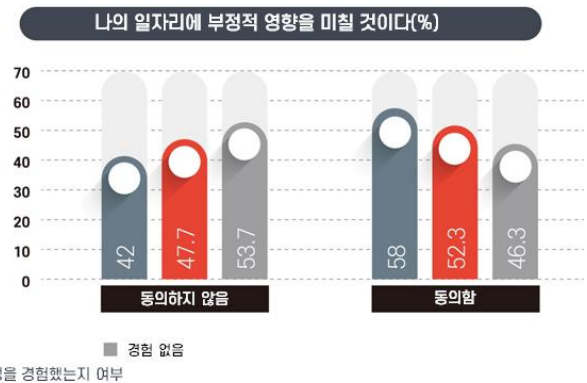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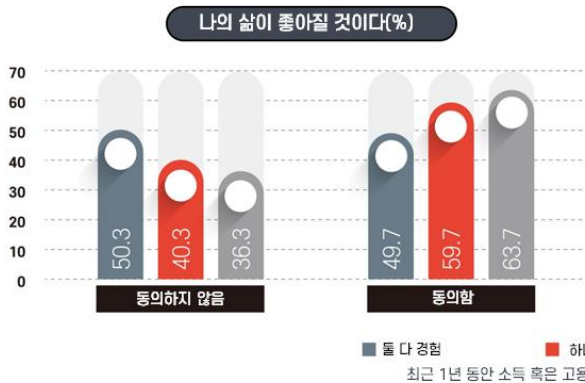
- ☑ 창의성은 제도의 산물
- ☑ 심리적 안정은 위험감수성과 창의성에 기여함 (Carmeli et al, 2010)

불안정성 경험이 기술혁명 사회에 대한 예측에 미치는 영향

- ☑ 최근 소득 및 고용에 대하여 불안정을 경험하면, 기술혁명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비율이 높음.

• 자료 : 안정과 자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LAB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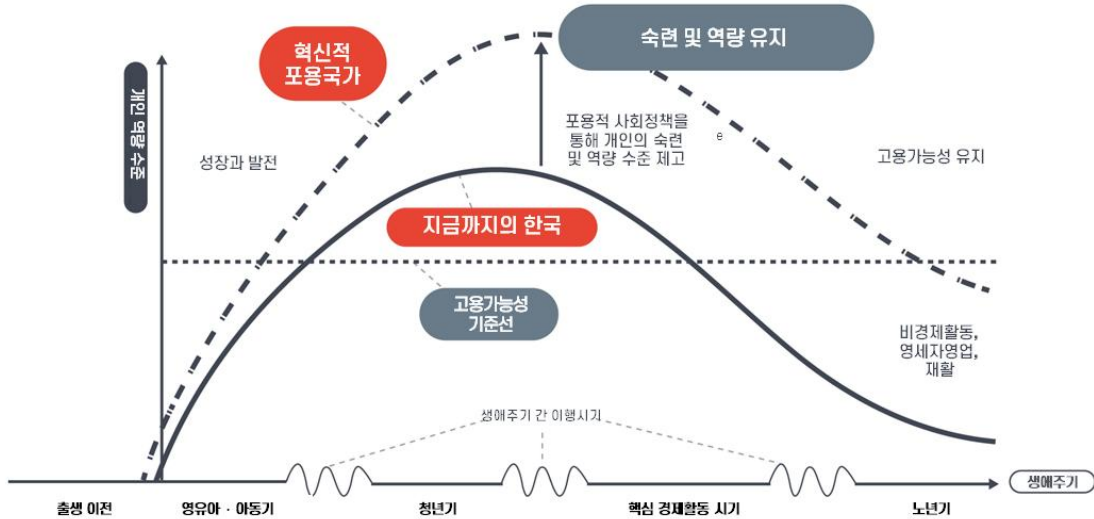
• 19-64세 일반 국민



CHAPTER4

2. 포용적 사회정책 방향 : 생애주기별 사회적 성과유형

사회보장과 사회 투자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과 고용가능성을 생애주기적으로 높임



CHAPTER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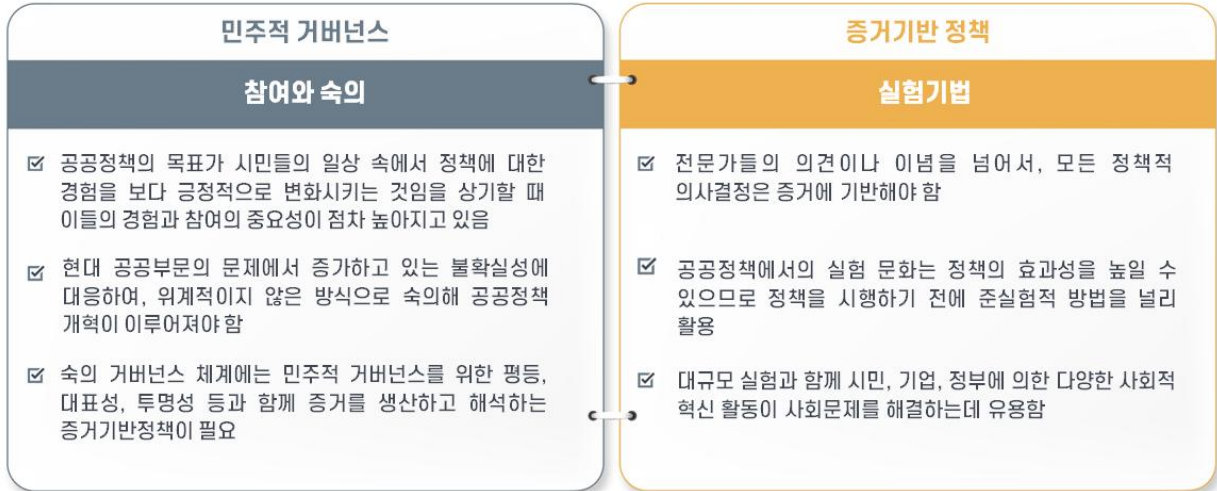
2.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 생애주기별 사회적 성과유형



CHAPTER4

2.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 속의와 실험을 통한 혁신 지원

- 정치개혁은 다양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 다양성은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포용보다 갈등이 있을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적 심의와 증거 기반 정책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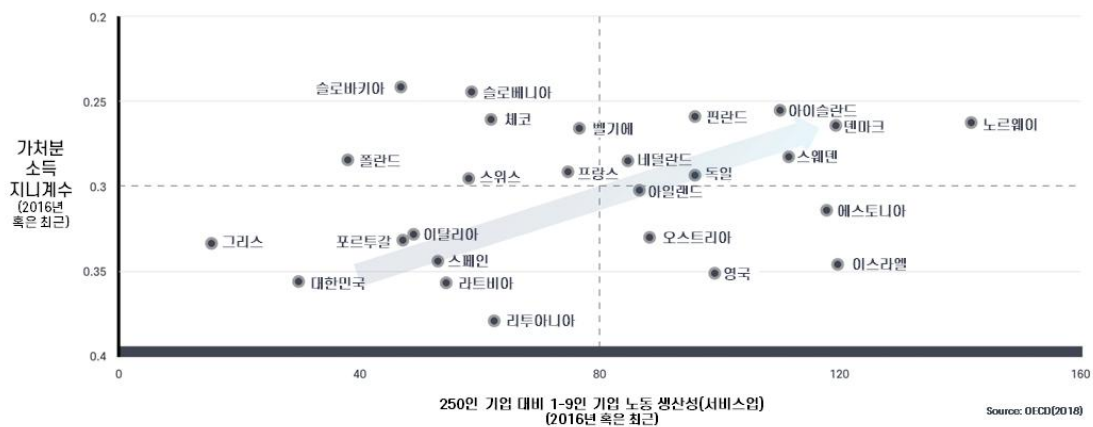


CHAPTER4

3.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관대한 복지국가, 혁신적 회사, 활동적인 시민사회를 통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 이행

- ☑ **혁신과 포용적 사회정책의 선순환 추구**
- ☑ 자유와 안정성을 제공하고 연대와 혁신을 촉진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
- ☑ 큰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 관대한 복지국가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사회혁신





THANK YOU

감사합니다

II. 영문본 발표자료⁵⁾

Why do we need inclusive social policy for inclusive innovation?

Towards innovative and inclusive state

2019. 11. 06.

Research Team for Inclusiveness and Innovation

PI : Young Jun CHOI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Question to be discussed

Cutthroat capitalism vs. Cuddly capitalism

Can inclusiveness be compatible with innovation?

- ☑ **Incompatible** : The technologically leading countries opt for liberal-style institutions ('cutthroat' capitalism) with income inequality, while other following countries adopt coordinated-style institutions ('cuddly' capitalism) with greater equality (Acemoglu, Robinson and Verdier 2012)
; Large welfare states diminish entrepreneurship (Henreckson, 2002)
- ☑ **Compatible** : The welfare state could contribute to innovation through enhancing human capital and skill formation, as well as increasing risk-taking behaviors (Mkandawire 2007, Filippetti and Guy 2015, Bell et al. 2018)
; Welfare spending c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D spending (Koo, Choi, and Park, 2019)
; Inclusive growth by the OECD and the IMF

Why should inclusiveness go with innovation?

- ☑ How could inclusiveness enhance innovation and vice versa?

5) 해당 자료는 “HR Global Forum 2019 기조세션 2 : 혁신과 포용의 인재 정책”에 발표되었음

CHAPTER 1

Context : why we need inclusive innovation

- 01 Productivity paradox and unbalanced growth
- 02 Emergence of economic nationalism
- 03 Underuse and mismatch of human capital
- 04 More wicked problems and citizens as new active 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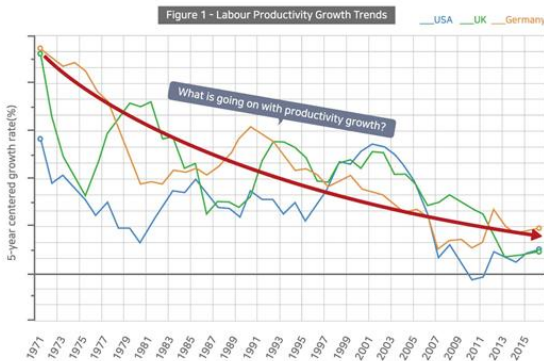
CHAPTER1

1. Productivity paradox and unbalanced growth

Productivity paradox and dualization

- ☑ The productivity has slowed down since the 1970s : Producing the 'Productivity Paradox' and 'Unbalanced Growth'
- ☑ Widening gap between progressive sectors and stagnant sector
- ☑ Decreasing the number of firms contributing to the productivity increase and also the number of people benefiting from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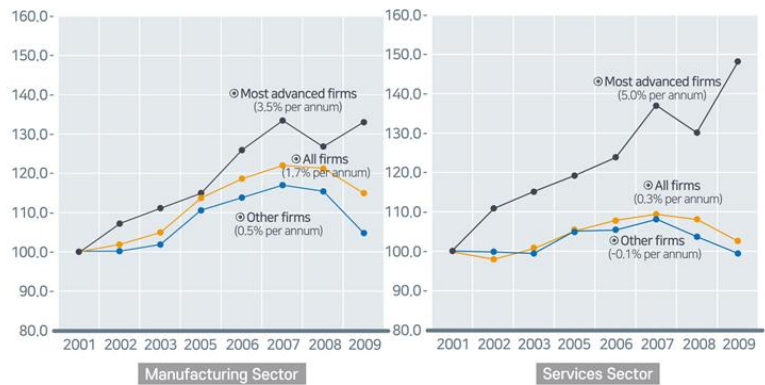
Productivity paradox(Dezernat Zukunft, 2018)



Marked between-firm divergence has been observed from the early 2000s

(Andrews, Criscuolo and Gal, 2015)

Labour productivity; index 200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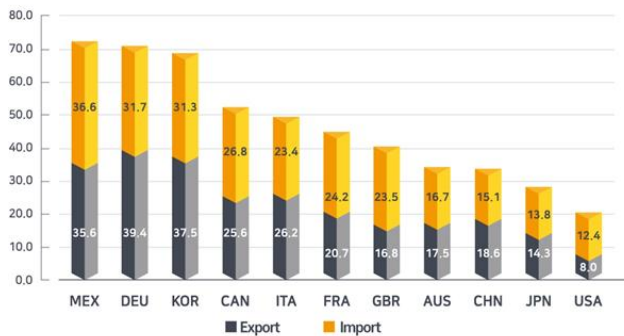
CHAPTER1

2. Emergence of economic nation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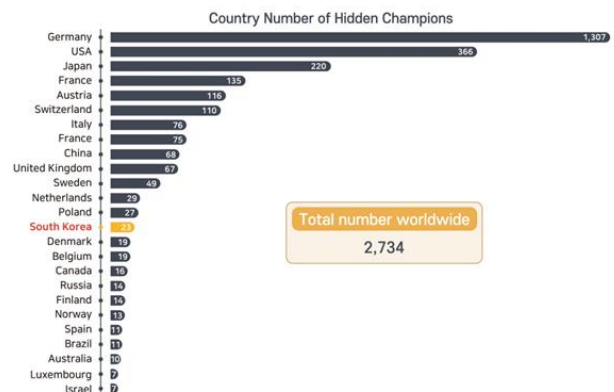
Rising tension between globalization and nationalism

- ☑ Korea has been one of the most open and globalized economies
- ☑ Rising economic nationalism and trade conflicts can expose the vulnerability of the Korean economy
- ☑ Buying and assembling parts and materials abroad & making and selling final products abroad
- ☑ New economic strategy required?

Reliance on trade, % of GDP (2017)



Hidden Champions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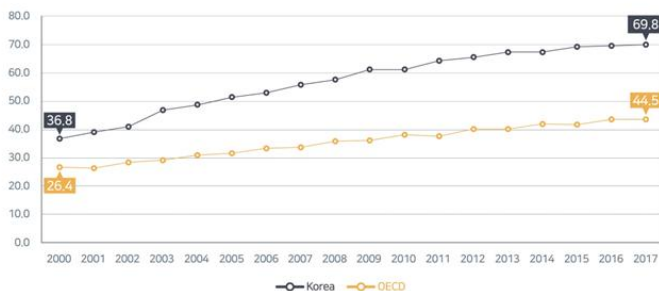
자료: Simon Kucher & Partners (2014)
<https://www.slideshare.net/GregorioLato/simon-kucher-hermannsimonhiddenchampions>
 - Hidden Champion: 한 품목에서 세계 3위 이내거나 각 대륙에서 1위인 중소기업(수입 및 50억유로 미만)

CHAPTER 1

3. Underuse and mismatch of human ca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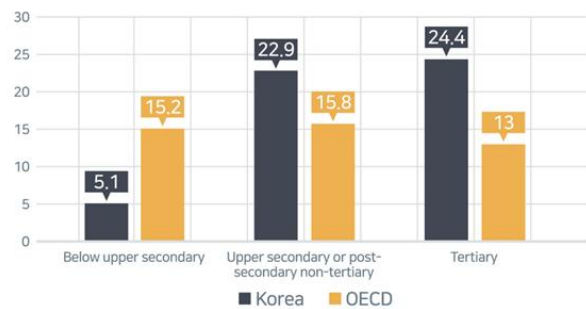
- The advancement rate to tertiary education in South Korea is near to 70%, and the level of human capital and skill level of young people is one of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 ☑ But, the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ratio is equally high and women's employment rate i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The gender pay gap is the highest among OECD
- A large gap between adults' skill level and young people's level, according to the PIAAC (Survey of adult skills)

Advancement rate to tertiary education (age 25-34) in Korea and OECD (2000-2017)



Source: OECD (2019),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indicator)

NEET ratio by educational attainment in Korea and OECD (2014)



Source: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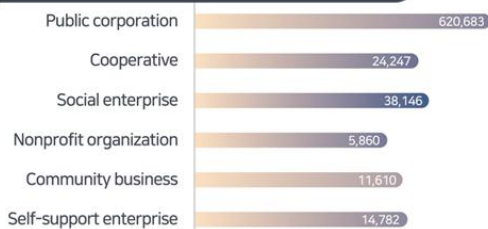
CHAPTER 1

4. More 'wicked problems' and citizens as active agents

Civil society and enterprises is considered as key to address fundamental social challenges.

- ☑ Social problems from daily issues to global environmental issues are increasingly becoming 'wicked'
- ☑ Citizens take part in social innovation voluntarily and social innovation require some form of organized action.
- ☑ The size of the third sector in the US and Europe shows the potential of civil society (Salamon 2018; Salamon & Sokolowski, 2018), but not much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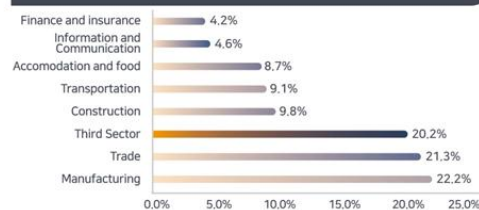
Employment in nonprofits in Korea,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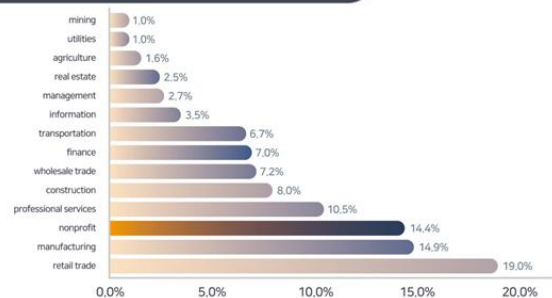
5% of Korean full-time employees work in the nonprofit sectors.

Source: Better Future (2017)

Employment in nonprofits vs. key industries in US, 2015



Employment in nonprofits vs. key industries in 24 European countries, 2014



Source: Salamon & Sokolowski (2018), edit

CHAPTER2

Review of inclusive innovation in Korea

- 01 What is innovation?
- 02 Status of innovation in Korea
- 03 Issues in economic innovation
- 04 Issues in social innovation

CHAPTER2

1. What is "Innovation"?

Definition` of "Innovation"

- ☑ Three criteria to distinguish the "innovation" 1) Is it novel? 2) Does it create value? 3) Does it solve a meaningful problem?

Scope of Innovation

- ☑ Innovators can be individuals, businesses, civil society, countries, and also include not only for-profit activities but also for non-profit activities
- ☑ This concept encompasses business innovation and social innovation, and both product innovation and process innovation



Source: Joe Dwyer (<https://digitent.com/what-is-innovation/>)



Source: Abu-Saifan, S. (2012)

CHAPTER2

2. Innovation in Korea : History and Performance

Excellent Innovation Inputs and Outputs

- ☑ The government put efforts to revive the economy through innovative policies such as revitalizing venture businesses and fostering growth-driven industries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 ☑ **Korea ranks 11th in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GDP per capita: the 28th largest, as of 2018)**
- ☑ Discussions on social innovation began in the 2000s with the Roh Moo-hyun Government
: the government rapidly expands institutional support, leading to the promotion of the social economy

CHANGES IN INNOVATION POLICY PARADIGM



Social Economy in Korea

Types (Starting year)	Social Enterprise (2012)	Cooperative (2012)	Self-support enterprise (2012)	Community enterprise (2018)
Ministr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bjectives	Creating employment for vulnerable people and providing services	Improving union rights and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	Support for the self-help of the beneficiary, etc.	Improving local environment and activating local community
Law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MOS Guidelines
Number of orgs (as of Dec. 2018)	1,713	10,640	1,149	1,446

Source: 관계부처합동(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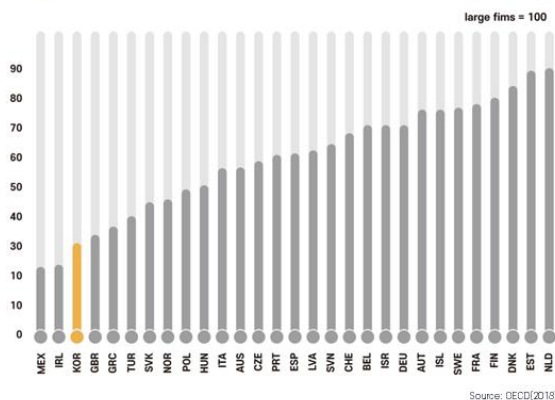
CHAPTER2

3. Issues in economic innovation ① Elite-oriented innovation

Polarization of productivity: Increasing gap between innovation-led conglomerates and SMEs

- ☑ 82.2% of employment in SMEs (SMEs Indicators, 2018)
- ☑ Rising gap of labor productivity and wage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 increasing inequality

The productivity in SMEs as a percentage of large firms in 2014



Average wage by workplace size (Over 500 persons=100)

(unit : US\$ PPP, %)

	Korea(2017)		U.S.(2015)		Japan(2017)		France(2015)	
	Average wage	Ratio	Average wage	Ratio	Average wage	Ratio	Average wage	Ratio
1-4 persons	1,990	32.6	3,731	78.8	2,697	65.7	3,083	58.8
5-9 persons	2,945	48.3	3,071	64.8	3,166	77.1	3,321	63.4
10-99 persons	3,490	57.2	3,450	72.8	3,438	83.8	3,625	69.2
100-499 persons	4,267	70.0	4,029	85.1	3,605	87.8	4,134	79.5
OVER 500 persons	6,097	100.0	4,736	100.0	4,104	100.0	5,238	100.0
TOTAL	3,302	54.2	4,200	88.7	3,616	88.1	3,811	72.8

Source: Phd(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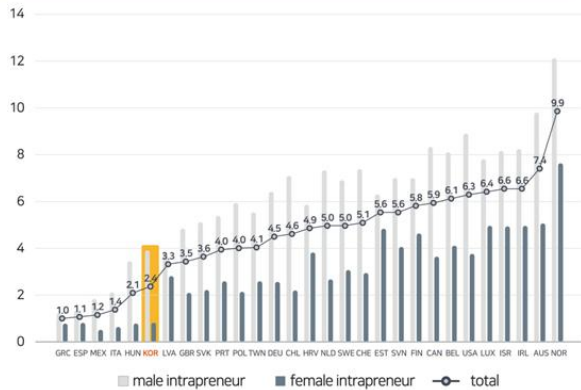
CHAPTER2

3. Issues in economic innovation ① Elite-oriented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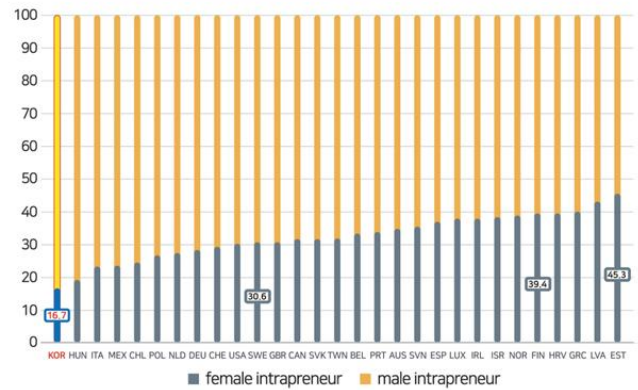
Intrapreneurs within large enterprises have led economic innovation in Korea, but innovation outside large firms are scarce

- ☑ Despite the high ICT patent application rate, only 7.9% of employees experienced innovation activities
- ☑ Though innovation activities in large firms are highly important, their impact on employment and general living standard seems to be less influential
- ☑ In particular, women's ratio among intrapreneurs is very low

Employees engaged in innovation activities by countries (%)



Intrapreneurs gender rati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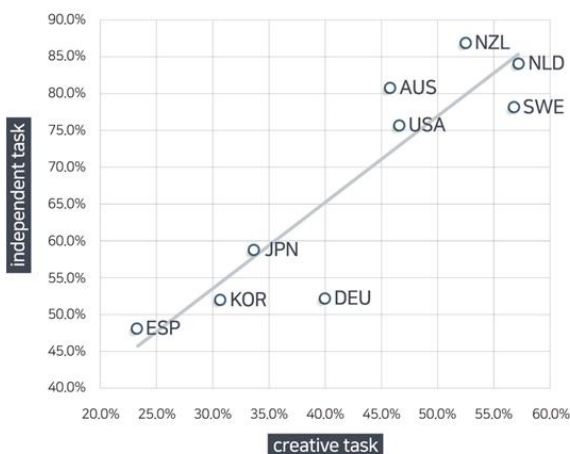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5 Adult Population Survey

CHAPTER2

3. Issues in economic innovation ② Lack of crea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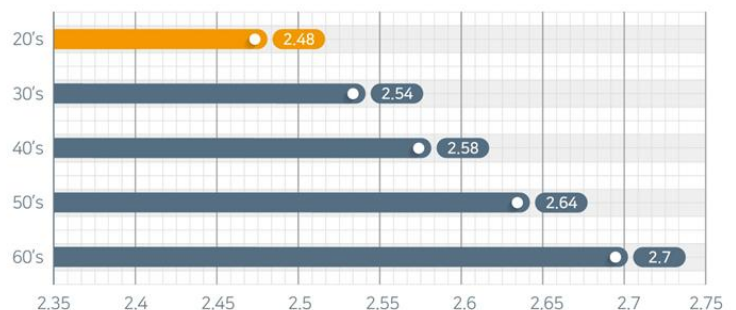
Required skills in digital revolution : Creativity

- ☑ 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Jobs with creative task would survive in future (Goos et al, 2014)
- ☑ Compared to the other OECD countries, Korea has more employees performing routinized task and dependent task
- ☑ Furthermore, youth generation is allegedly the least creative generation in Korea



Source : the analysis of the 6th world value survey

How creative are you?(1 to 4)
The mean of late twenties=2.42



Source : the analysis of the LAB2050 Survey

CHAPTER2

3. Issues in economic innovation ② Lack of creativity

Lack of Creative Outputs

- ☑ According to the 2019 Global Innovation Index, the intangible asset productivity of Korea is excellent, but the ranking relating to creative performance is lower than the overall Innovation ranking of Korea (11th)

Criteria	Items	Ranking				
		'15	'16	'17	'18	'19
Creative Outputs		28	21	15	17	17
Intangible assets	Trademarks by origin/bn PPP\$ GDP Industrial designs by origin/bn PPP\$ GDP ICTs & business model creation ICTs & organizational model creation	19	2	3	2	3
Creative goods & services	Cultural & creative services exports, % total trade National feature films/mn pop. 15-69 Entertainment & Media market/th pop. 15-69 Printing & other media, % manufacturing Creative goods exports, % total trade	49	50	35	37	42
Online creativity	Generic top-level domains (TLDs)/th pop. 15-69 Country-code TLDs/th pop. 15-69 Wikipedia edits/mn pop. 15-69 Mobile app creation/bn PPP\$ GDP	41	35	40	37	37

Source : the analysis Source :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KISTEP(2019) Analysis of Global Innovation Index(GII) 2019, KISTEP Statistics Brief 2019(11) of the LAB2050 Survey

CHAPTE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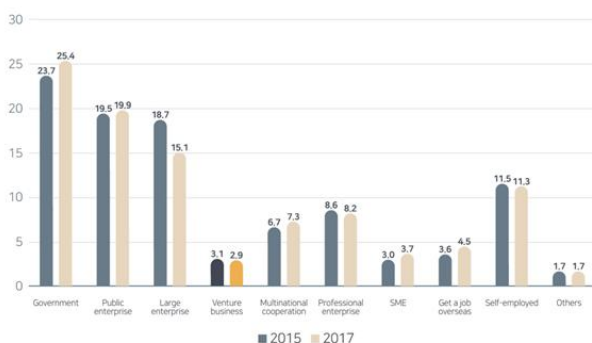
3. Issues in economic innovation ③ An excessive pursuit of stability

Risk-taking behavior is key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eople in 20s and 30s are the most crucial age groups for knowledge-based start-ups (Bell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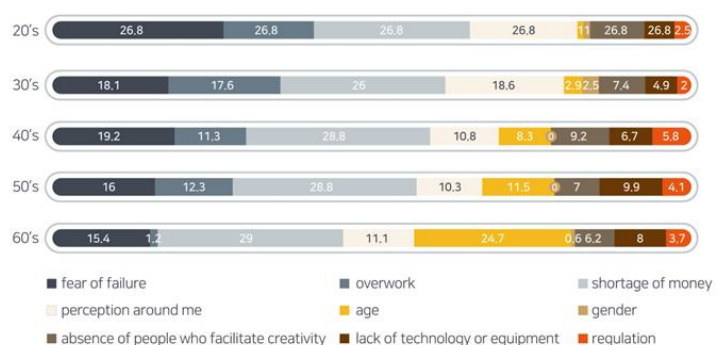
- ☑ Youth in Korea tend to seek stability and to avoid risk and challenge
- ☑ This trend would undermine the potential of innovation in Korea

Young people's desired future career(13~29 years old)



Source: KOSIS Social survey(2017)

What is the obstacle to creativity for you?(%)



Source : the analysis of the LAB2050 Survey

CHAPTE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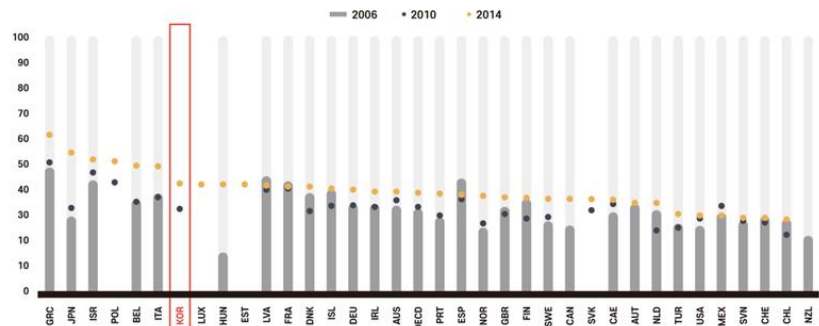
3. Issues in economic innovation ③ An excessive pursuit of stability

Low entrepreneurship

- ☑ Entrepreneurship is an indicator of the breadth of future innovation activities
: Korea has a lower level of entrepreneurship than its economic status.
- ☑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are afraid of failure is high
➔ People with higher human capital seek stability and people who have no choice in the labor market jump into the self-employment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18 to 64 who are unable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due to fear of failure

Ranking	Country	GEI (2018)	GDP(2017) ranking
1	United States	83.6	1
2	Switzerland	80.4	19
3	Canada	79.2	10
4	United Kingdom	77.8	6
5	Australia	75.5	13
6	Denmark	74.3	36
7	Iceland	74.2	105
8	Ireland	73.7	35
9	Sweden	73.1	23
10	France	68.5	5
24	Korea	54.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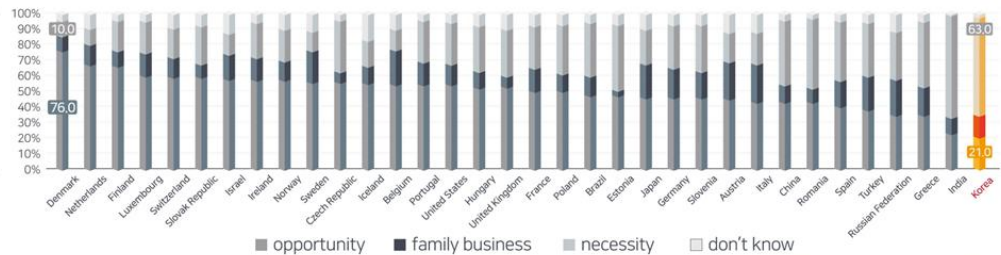
CHAPTER2

3. Issues in economic innovation ④ high ratio of the vulnerable self-employed

Low percentage of people who start their own businesses for opportunity, with interest and pa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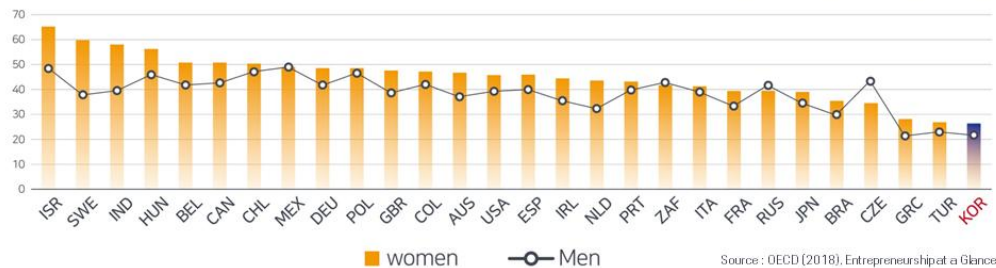
- ☑ People who start their businesses with their own interests and passion are more likely to be creative and successful

Reasons for starting a business
(Opportunity, Family business, necessity)



Source : OECD(2014),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Percentage of respondents pointing to the option, by gender of ownership or management;
To pursue an interest or passion



Source : OECD (2018),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CHAPTER2

3. Issues in economic innovation ⑤ Low Accept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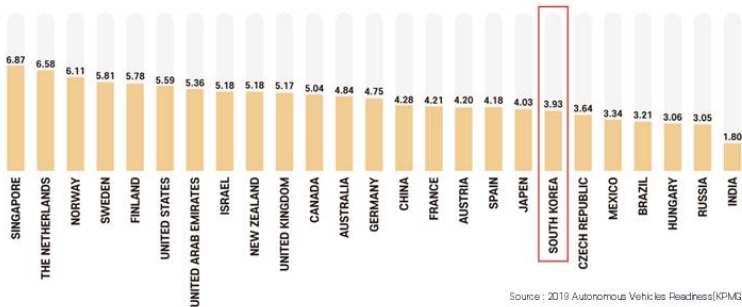
Conflict with people who oppose innova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innovation – low consumers' acceptance

- ☑ Low acceptance of innovation in society hinders entry of new technologies, services, products, etc.



A neo-Luddite is a person who resists the gradual pull towards a world where digital technology is the norm, rather than an expectation (Adam Howatson, 2018)

Consumer Acceptance of Self-driving Vehicles



Conflict of taxi with new mobility industry in Korea

2014.08 Uber launches its own car sharing service Uber X in Korea. Protesting from the taxi industry.

2015.03 Ceasing Uber X service

2018.10 Kakao launches for drivers' Carpool App. A protest from the taxi industry. Launching a Shared Service 'Tada'

2018.12 Kakao announces launch of carpooling service. Taxi drivers' group declares rejection of Kakao taxi calls. A taxi driver killed himself in opposition to carpool service. Carpool service stopped.

Source : <http://news.mt.co.kr/mview.php?rc=2019022416375065276>

CHAPTER2

4. Issue in social innovation ① Capacity Building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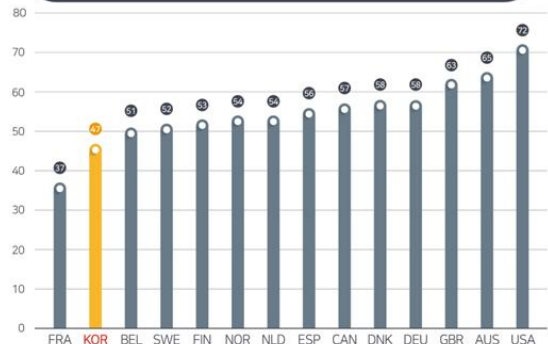
In Korea, the civil society capacity is generally limited.

- ☑ Civil society is a key actor in social innovation (Economist, 2017)
- ☑ Social trust and social capital are considered as the primary resource of civil society and social entrepreneurship (Madhooshi et al, 2015; SOLIDUS 2018)
- ☑ Korean tend to have low trust in stranger or general people and do not help stranger compared to Europea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

Most people can be trusted(%)



Helped a stranger, or someone you didn't know who needed he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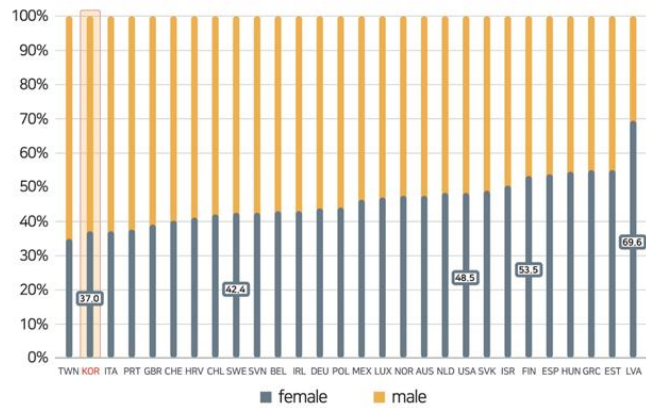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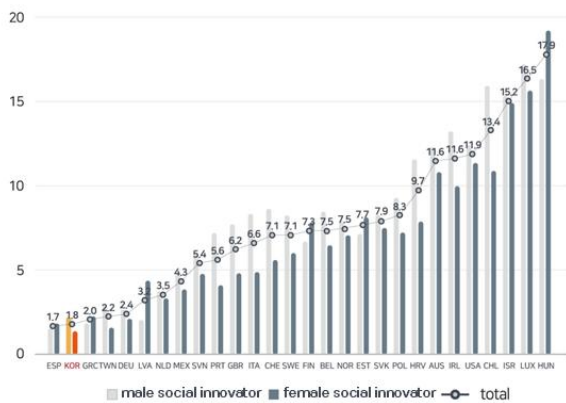
CHAPTER 2

4. Issue of social innovation ②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repreneur, i.e. people who engaged in activities for social, environmental, and community objective is very low in Korea

- ☑ Korean who responded that they are currently trying to start or leading any kind of initiative that has a particularly social, environmental or community objective was only about 1.8%.
- ☑ The gender gap was also high that the percentage of female entrepreneurs is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re you currently trying to start or leading any kind of initiative that has a particularly social, environmental or community objective? (unit: %)



Source: GEM(2015)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Attitudes (database)

CHAPTER 3

Vision of Innovative & Inclusive State

- 01 Exclusive growth to inclusive growth/innovation
- 02 Coexistence of innovation and inclusiveness
- 03 Failure as socioeconomic assets
- 04 Case of innovative and inclusive state: Swe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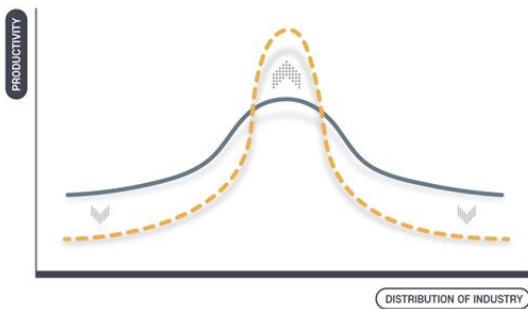
CHAPTER3

1. Exclusive growth to inclusive growth and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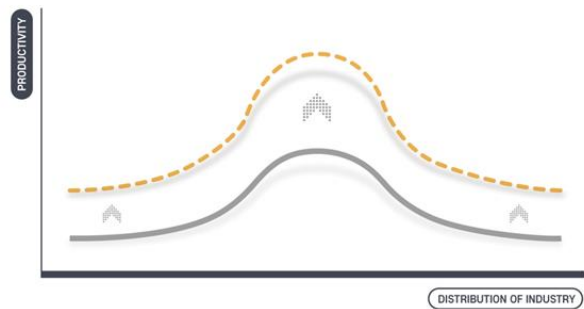
Innovation by all and for all

- ☑ If few firms produce remarkable productivity growth whereas others not, it could aggravate inequality and increas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welfare state → Exclusive growth
- ☑ Inclusive innovation assumes wide productivity growth across leading industries to 'stagnant' industries and pursues STI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also DUI (Doing, Using, Interacting) innovation & social innovation i.e. grass roots-type innovation.
- ☑ Inclusive social policy reduces social risks faced by individuals and facilitates the potential of individuals' innovation capacity

Productivity paradox: exclusive growth



Innovative and inclusive state: Inclusive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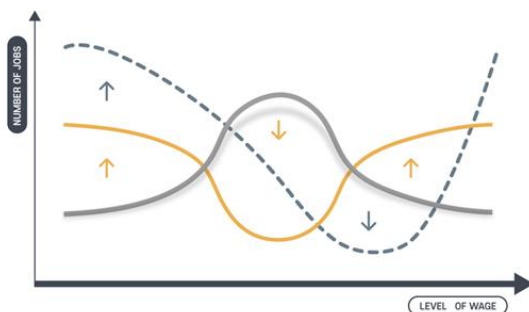
CHAPTER3

1. Exclusive growth to inclusive growth and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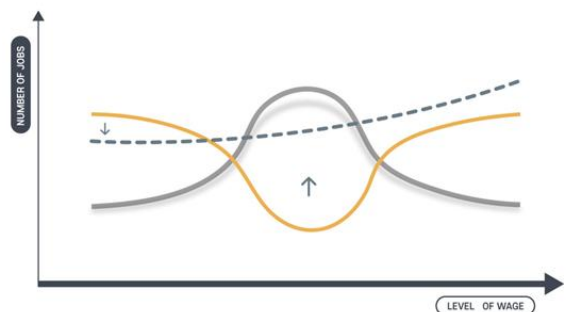
Significant reduction of middle-class jobs in the transition from industrial to post-industrial economies and likely to be continued in the era of the digital revolution

- ☑ Inclusive institutions could enhance individuals' capabilities, reduce low-paying jobs, increase middling jobs
→ Pursuing the reduction of productivity gap and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1) As it is



2) Desirable path



— INDUSTRIAL ECONOMIES — POST-INDUSTRIAL ECONOMIES - - - DIGITAL ECONOM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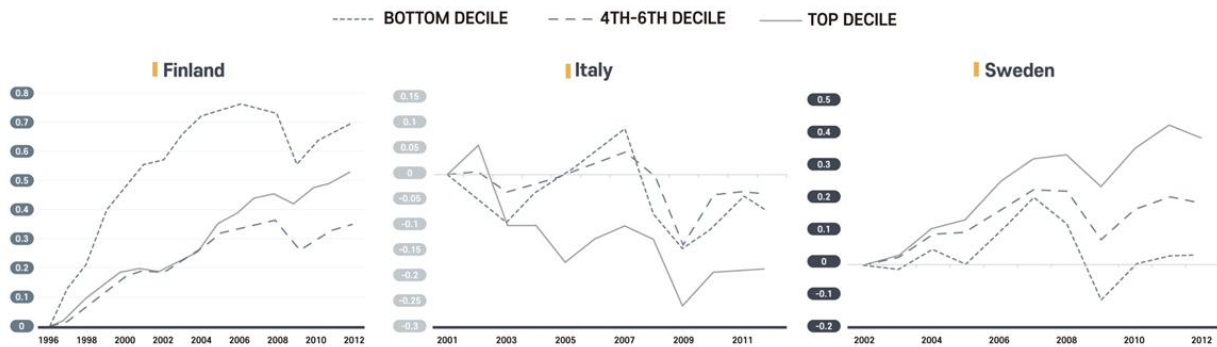
CHAPTER3

1. Exclusive growth to inclusive growth and innovation

Not all countries experienced productivity paradox and exclusive growth

- ☑ Varied patterns of productivity growth across OECD countries
- ☑ Some show the general productivity increase or decrease across industries but others exhibit the widening gap among industries
- **Institutions and policies matter: Role of the government**

Firms' productivity change in manufacturing sectors (OECD,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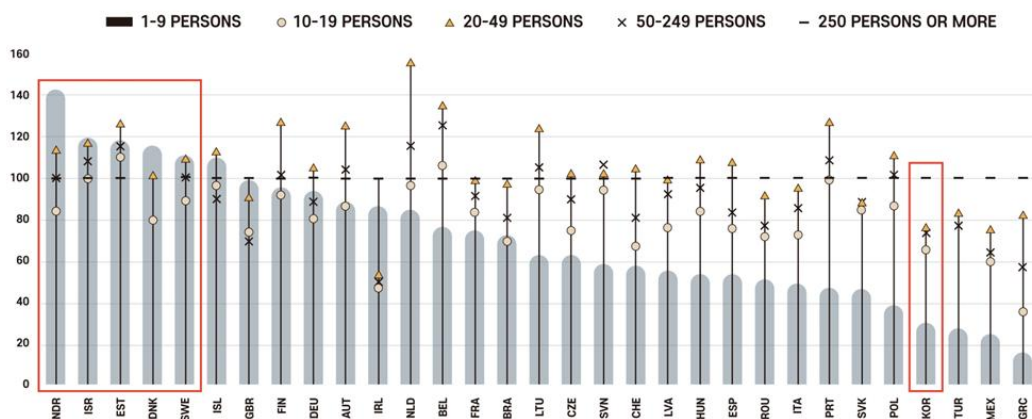
CHAPTER3

2. Coexistence of innovation and inclusiveness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inclusive innovation, not exclusionary innovation, in a well-established country of inclusive social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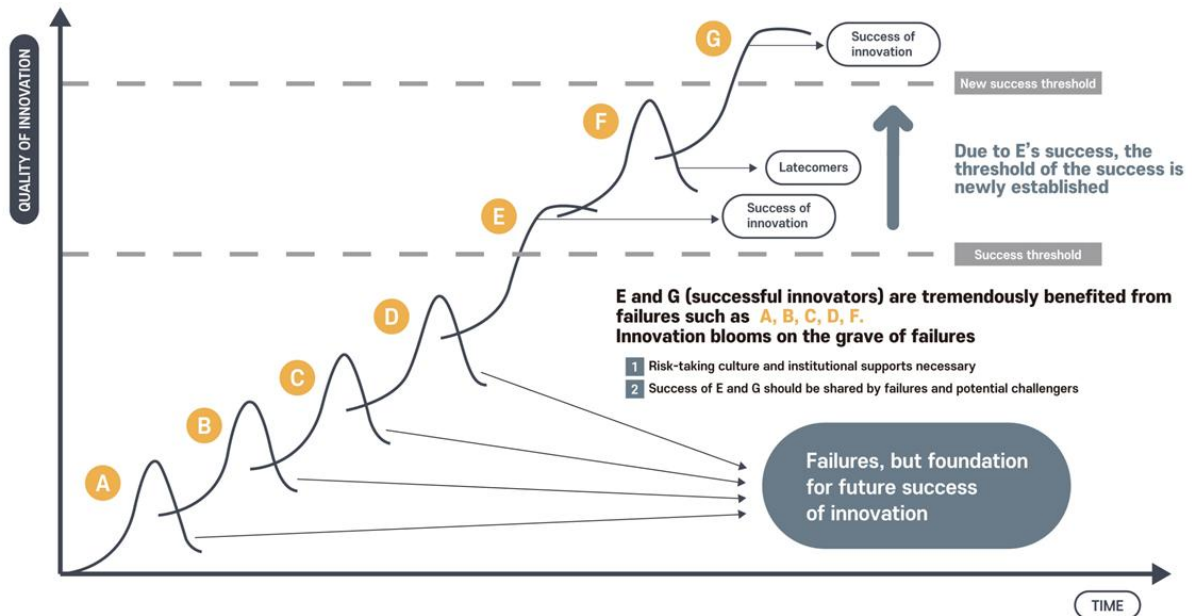
- ☑ Northern European countries are much higher than South Korea in terms of productivity of 1-9 employees compared to 250 employees.

SERVICES



CHAPTER3

3. Failure as socioeconomic as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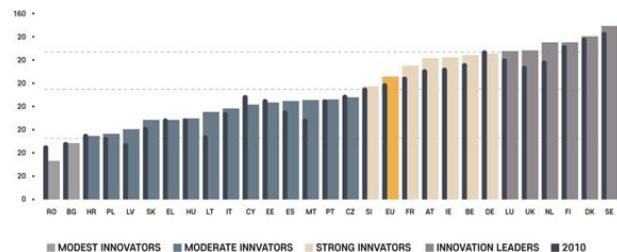
CHAPTER3

4. An example of Innovative & Inclusive State: Sweden

- Since 1990, innovations have been enhanced by business sector reforms, labor market deregulation & tax reforms (e.g. The New Competition Act in 1993)
- With not only process innovation but also product innovation, Sweden turned into the fast and most improvements. Young firms and start-ups are more prominent in the Swedish business sector than in the U.S. business sector (Heyman et al., 2016; Decker et al., 2014)
- **Main factors of success : With business sector innovation, stable social protection policy (redistributive income security, Free medical care), social innovation policy (tuition free, lifelong education), family-friendly policy, social policy specialized to entrepreneurial activity (Sabbatical leave) (sources: World Economic Forum, Forbes, Independent,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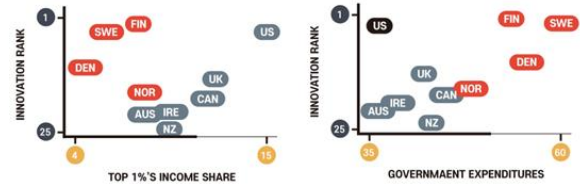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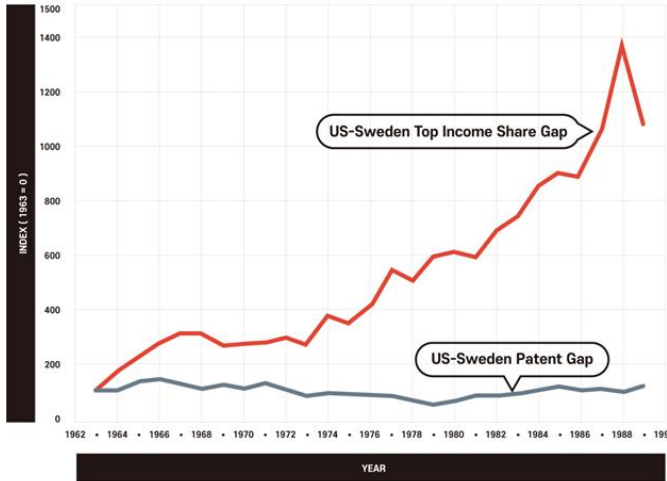
- One of the most prominent country about entrepreneurial activity for start-ups in Europe
- World Economic Forum (2017)



- With the highest innovation index among EU
-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8)

CHAPTER3

4. An example of Innovative & Inclusive State: Sweden



IS TYPE OF CAPITALISM A GOOD PREDICTOR OF INNOVATION WHEN WE INCLUDE ADDITIONAL "CUTTHROAT" NATIONS?

■ BLUE : CUTTHROAT NATIONS ■ RED : CUDDLY NATIONS

INNOVATION RANK :
average ranking on the World Economic Forum's innovation index in 2008-09 and 2012-13.
DATA SOURCE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 ness report, pillar 12.

TOP 1%'S INCOME SHARE :
share of pretax income, excluding capital gains, 1989-2007.
DATE SOURCE : world Top Incomes Database

GOVERNMENT EXPENDITURES :
government spending as a share of GDP, 1989-2007
DATE SOURCE : Vito Tanzi, Government versus Markets, OECD.

-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k/wp/2012/09/28/is-sweden-awesome-because-it-mooches-off-the-u-s/>
- <https://lanekenworthy.net/2012/09/29/will-everyone-be-worse-off-if-the-united-states-turns-social-democra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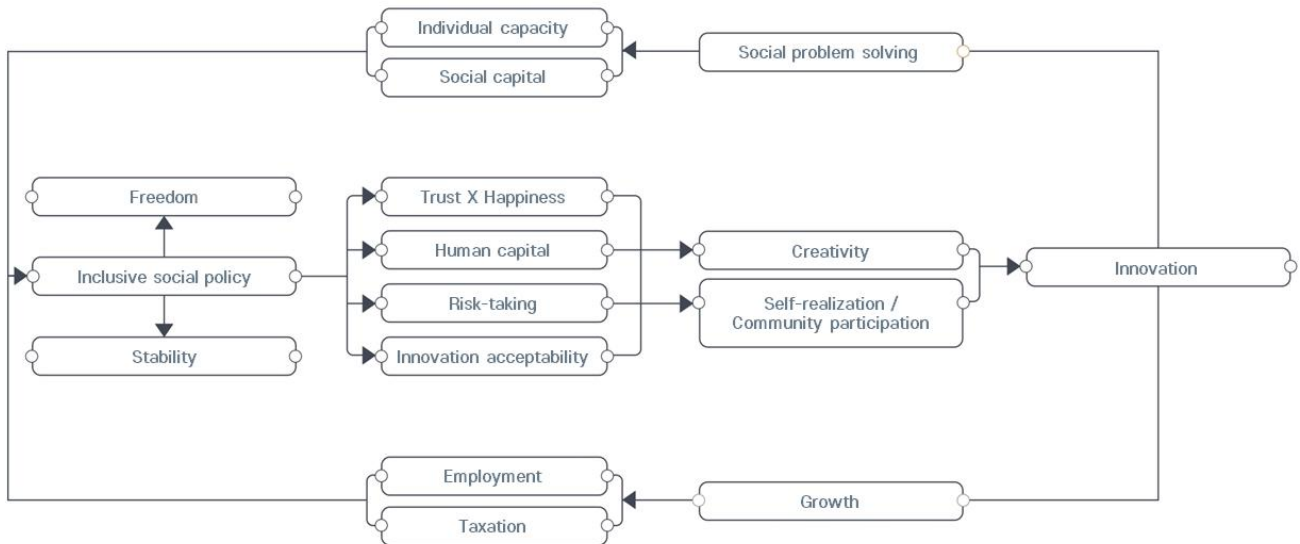
CHAPTER4

Direction of inclusive social policy

- 01 Effects of inclusive social policy
- 02 Direction of inclusive social policy
- 03 Future of innovative and inclusive state

CHAPTER4

1. Effects of inclusive social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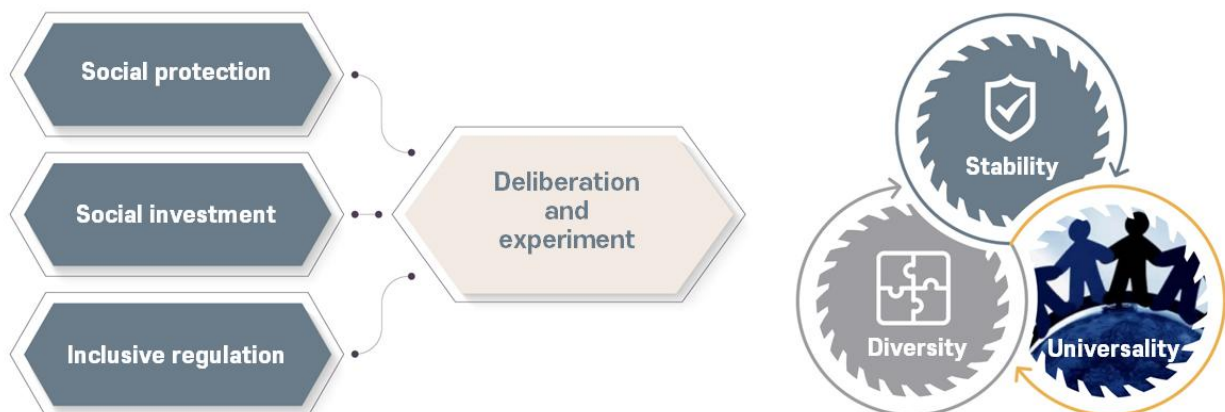


CHAPTER4

1. Effects of inclusive social policy

Inclusive social policy facilitating grass-root innovation

- ☑ **Stability:** Social policy enhancing quality of life and reducing uncertainty of life
- ☑ **Diversity:** Social policy diminishing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uniformity, and promoting various forms of work and life
- ☑ **Universality:** Social policy provided for all regardless of age an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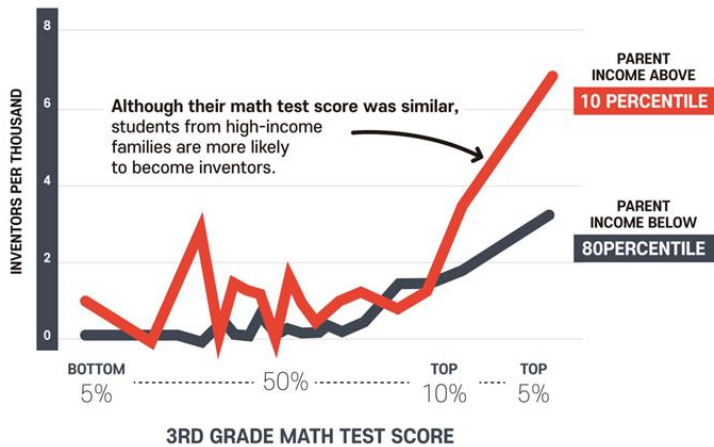


CHAPTER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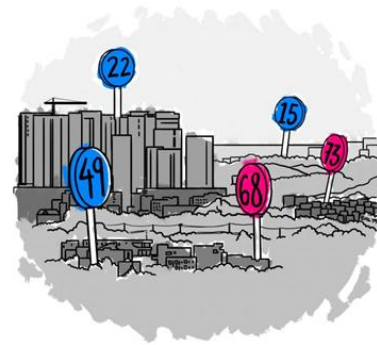
2. Direction of inclusive social policy: No more lost Einstein!

- ☑ Universal education policy and personalized education service make people contribute to innovation (Miettinen, 2013)
- ☑ Introducing equality policy helps to reduce wealth inequality and develop human capital, e.g. adversity score
- ☑ Cognitive ability is diminished by poverty (Mani et al, 2013).

Relationship between being inventor and 3rd grade math test score (Bellet al 2017)



Adversity Score (SAT)



CHAPTER4

2. Direction of inclusive social policy: Providing security → Risk-taking and accept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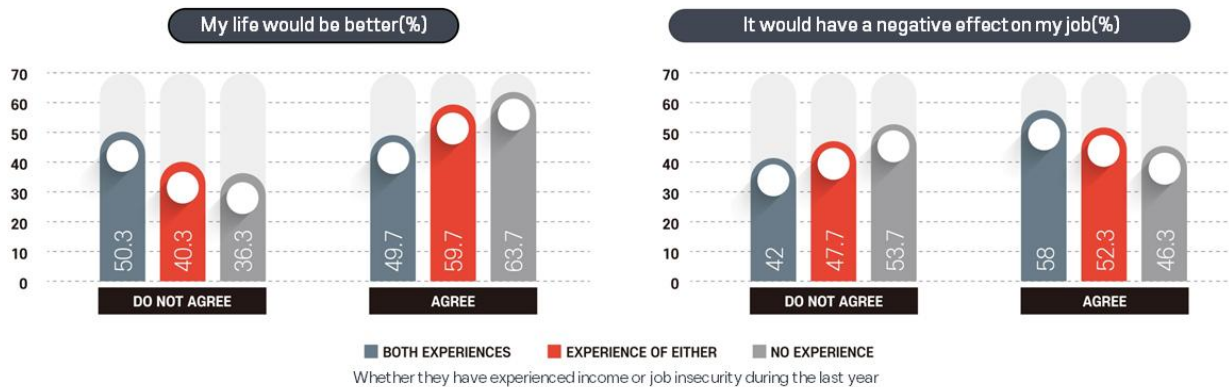
Security alleviating risk and uncertainty can facilitate creativity and innovation (Filippetti&Guy, 2015; Raffiee, J., & Feng, J., 2014)

- ☑ Creativity is the product of institutions
- ☑ Psychological safety contributes to risk-hedging and creativity (Carmeli et al, 2010)

Effect of insecurity experiences on the prediction about a technological revolutionary society

- ☑ If someone has recently experienced income or employment insecurity, there is a high proportion of negative predictions about the technological revolutionary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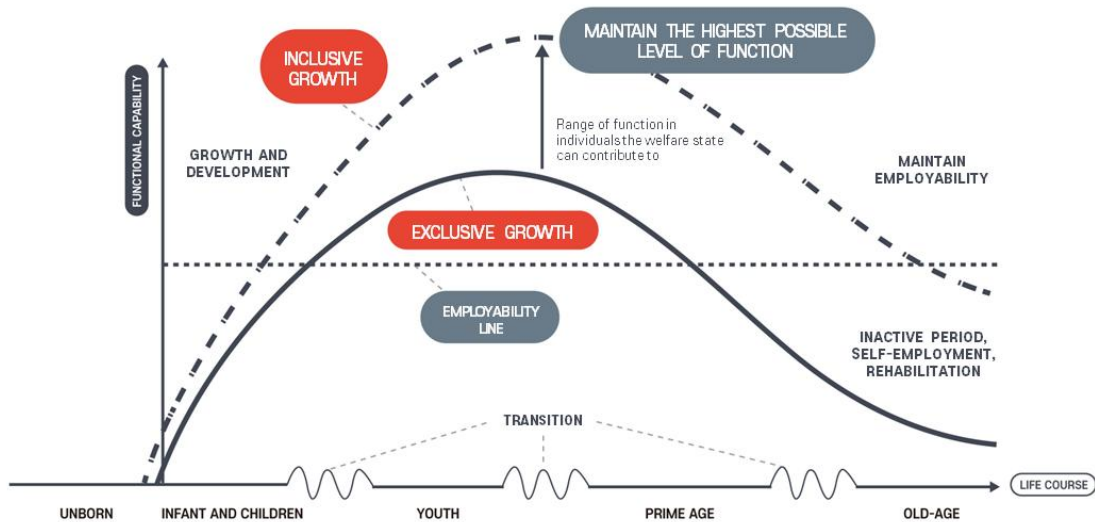
• Source: A Survey on the Public Perception of Stability and Freedom(LAB2050) • 19 to 64 years of the general public



CHAPTER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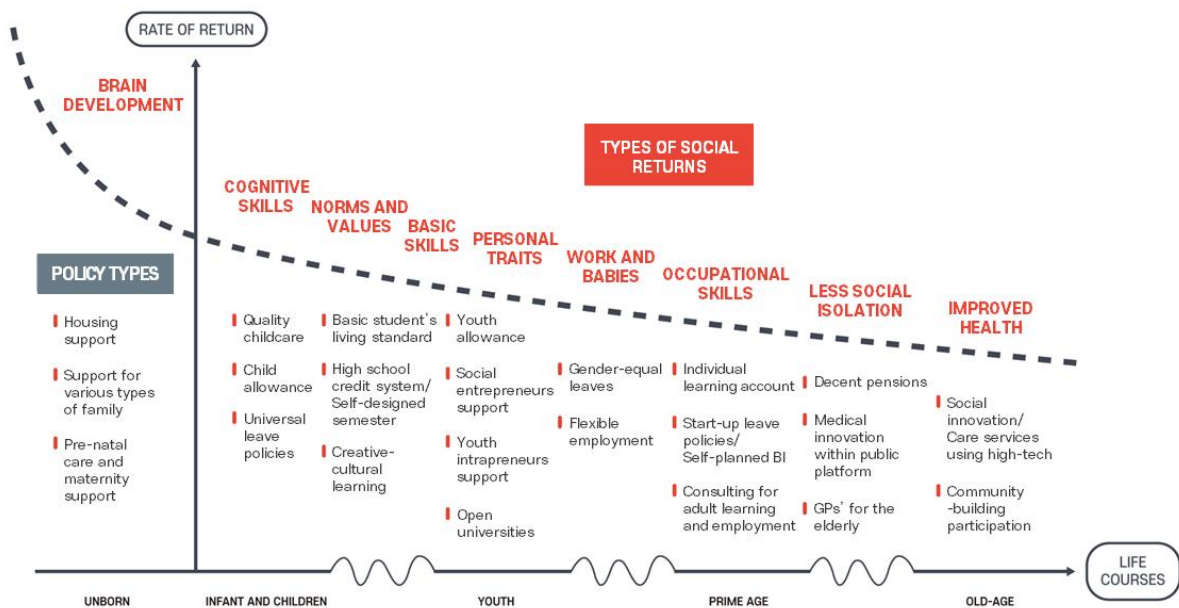
2. Direction of inclusive social policy: Life course perspective and social return

Enhancing citizen's capability and employability over their life course using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investment policies



CHAPTER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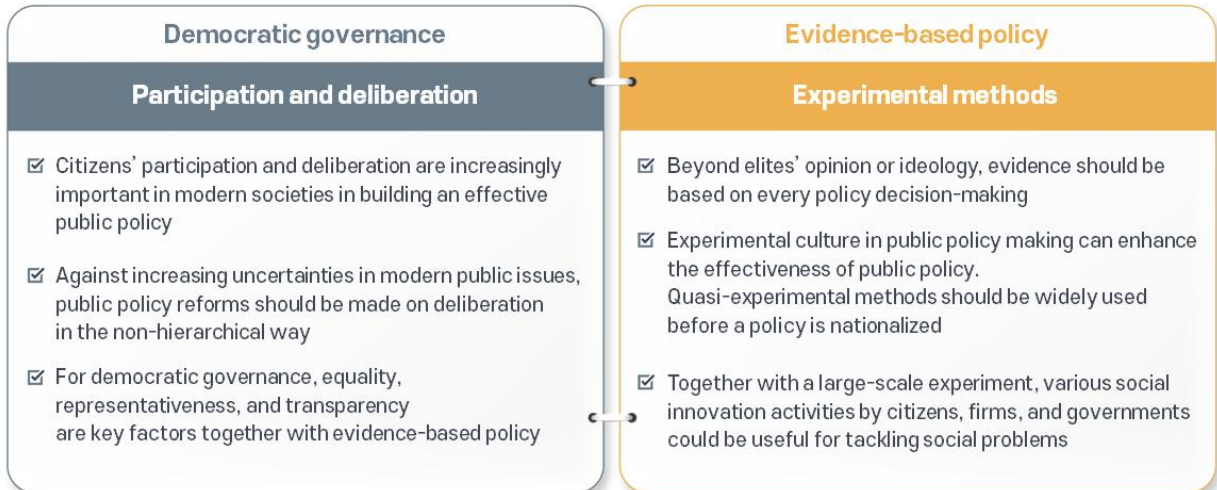
2. Direction of inclusive social policy: Life course perspective and social return



CHAPTER4

2. Direction of inclusive social policy: Through experiment and deliberation

- Policy reforms would spark various social debates and conflicts
- ☑ **Diversity facilitates innovation, but without inclusiveness, it could generate social conflicts**
- In solving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use of democratic deliberation and evidence-based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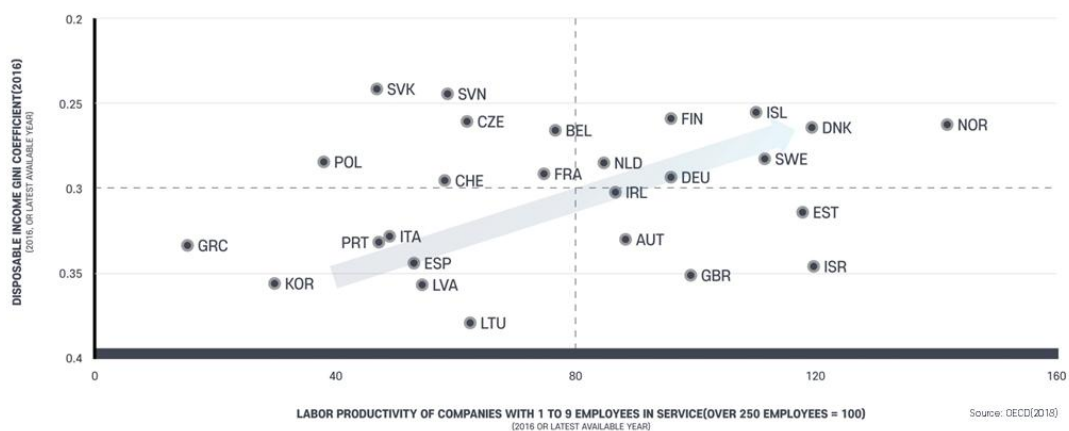


CHAPTER4

3. Future of innovative and inclusive state

Smaller productivity gaps and low inequality by generous welfare state, innovative firms, and active civil society

- ☑ **Pursuing the virtue circle between innovation and inclusive social policy**
- ☑ Increasing individuals' capacity by providing freedom and security and promoting solidarity and innovation
- ☑ Generous welfare state tackling large social risks and active social innovation dealing with various social problems





THANK YOU

감사합니다

제 3 장

포용국가는 창의성을 발현하는가?

I. 서론

지식기반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창의성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창조산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하고 있으며, 창조계급(Creative class) 등 창의성을 강조하는 직업에 대한 담론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형화된(Routinized)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은 AI, 자동화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비정형적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미래 일자리의 주를 이룰 것이라는 Goos et al(2014)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창의성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창의성 연구는 개인 혹은 조직의 창의력과 혁신행동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 혹은 조직이 연구단위였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동기부여, 창의적 사고능력과 스킬 등의 개인적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인지주의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창의성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고 있다. 창의성은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사회문화적 인지 과정의 속성이라는 것이다(Glavenue, 2010; 이정모, 2011). 특히 자기표현에 관대한 환경, 소득의 안정성, 직업의 안정성 등이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논의된다.

이처럼 안정과 창의성의 관계가 논의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Amabile, 1996).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은 다시 말하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정훈·한기순, 2018). 그리고 독창성이 크면 클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Runco, 2009). 안정은 창의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기제로 인지되어,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창의성 연구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아직 그 환경의 범위는 개인, 조직을 둘러싼 미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거시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제도(institution)와 창의성의 관계는 아직 기존에 창의성이 논의되던 교육, 문화 분야에 국한되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창의성이 내포하는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와 창의성의 관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복지국가, 사회정책과 창의성의 관계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복지국가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위험에 국민들이 집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생한 제도로,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조응하여 지속적으로 그 형태를 변화하고 있다. 특히 노르딕 복지국가 모델의 경우, 복지국가는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장치로 나타난다(Brandal et al, 2014:262-265). 즉, 지금까지 복지국가가 사회의 변화에 있어 개인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마찬가지로 AI의 발달, 창조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창의성이 중요해진 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서도 복지국가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는 창의성이 담지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복지국가가 해소하는지, 그리고 창의성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국가의 형태에 따라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안정성의 크기가 다르다. Esping-Andersen(1990)에 따르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나타내는 탈상품화 지수를 제시하여, 복지레짐별 차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탈상품화 지수를 바탕으로 복지1국가가 그 형태별로 시민의 자유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후속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Pacet & Radcliff, 2008; Anderson & Hecht, 2015). 본 연구는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형태가 창의성의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도 다를 것임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존에 창의성과 제도 간의 인과관계 탐색은 교육, 문화 분야에 국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의성 연구의 한계를 넘어 복지국가와 창의성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가 일상적 창의성의 발달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향후 미래사회의 복지국가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과정을 수행한다. 우선 2장에서는 창의성 연구의 발전과정과 그 안에서 발견된 창의성 발달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의 주된 창의성 담론인 창의계급과 창의노동의 논의를 통해 자유와 안정,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사회투자국가 및 포용적 성장과 같은 복지국가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질이 창의성과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의 내용에 따라 각 국가의 복지정책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안정성의 수준에 따라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제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OECD 9개국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각 국가의 복지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초적으로 살펴본 후,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국가와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 및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의성의 중요성 및 발생요인

1) 창의성의 중요성

지식기반 사회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은 많은 이들이 논하고 있다. 창조산업과 창조경제 등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창의교육, 일상적 창의성 등 일반 시민들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많은 담론들이 사회과학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창의성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 사회 영역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이 드러난다(Florida, 2006). 그렇다면

창의성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창의성은 새로운 것이며, 기존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한 것이다(Amabile, 1988; Florida, 2014). 창의성은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Said-Metwaly et al, 2017). 다른 말로 하면 창의성은 단순히 새로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통한 문제해결 역시 추구하는 것이다(Hennessey & Amabile, 2010).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Simonton과 Ting(2010)은 창의성을 독창성과 유용성의 결합이라 보았다.

창의성의 개념적 틀은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점차 확대되어왔다. Glavenue(2018)에 따르면 과거의 창의성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개인인 일부 천재에게서 나타나는 신비한 정신적 능력으로 여겨졌다(He-창의성).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의성인 것이다(“Big C” 창의성). 연구자들은 이러한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하였지만, 선천적으로 천재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할 수 없었다. 이후 인지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인지(everyday cognition)와 창의성이 동일 선상에 있음을 파악하였고, Smith et al(1995)의 경우 창의성 인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창의성의 일상적 속성을 강조하였다(I-창의성). 이때의 창의성은 “Little c” 창의성으로, 일상적인 문제해결 및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창의성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 역시 이 시점부터이다. 또한 최근 창의성의 개념은 개인의 인지에는 삶의 맥락이 반영되어있음을 강조하며, 그 개념이 더욱 사회 환경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Hennessey and Amabile, 2010; Glavenue, 2010; 이정모, 2011). 즉, 창의성이란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 인공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문화적 인지과정의 속성인 것이다(We-창의성). 문화별로 창의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Dreu(2010)와 Swayer(2006)의 연구결과는 창의성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또 다른 예이다. 이처럼 창의성 담론의 확장은 사회 전반부에 창의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표 1. 창의성 패러다임의 변천

패러다임	He-창의성	I-창의성	We-창의성
창의성 발현 단위	창의적인 소수의 천재	창의적인 개인	창의적 협업
유형	Big C 창의성	little c 창의성(일상적 창의성)	
관점	개인주의적, 무맥락적		사회문화적
육성방법	개인의 선천적 재능	교육	사회적 상호작용

주 : Glavenue(2018)의 논의를 통해 직접 정리함

창의성의 중요성은 크게 산업적 측면과 직업적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창의성은 지식, 잠재력과 함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앤뉴 안테르손(2017)에 따르면 지식경제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영국 노동당은 제3의 길을 주창하고, 창의성, 지식, 잠재력을 중심으로 창조산업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 사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창의성, 지식, 잠재력 중심의 성장전략이 수립되어, 자국민의 창의성 및 혁신 증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채린(2017)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논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산업과 혁신적 기술 및 아이디어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또한 기술혁신을 이끌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한 논의와 창의노동 영역의 고용성장률 수치를 높이는데 주력함으로써 창조경제, 창조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창조산업, 창조경제는 그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여 실체가 없음에 대한 비판을 받으나, 그만큼 사회 전반에서 창의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창의성, 창조성은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경제적 확장이기에, 영구적인 혁신의 기폭제로서 작동한다. 즉, 변화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갖춘 노동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직업적 측면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은 AI, 자동화 기술의 발전과 결부된다. 범용성을 갖는 AI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산업 범위가 넓어지며,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 역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Karakaya, 2017). 특히 Frey와 Osborne(2013)은 컴퓨터기술이 정형화(Routinized)된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그 수준은 무려 미국 일자리의 47%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정말 직업이 대부분 AI와 자동화기술로 대체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Nedelkoska와 Quintini(2018)의 논의처럼, 이는 각 국의 일자리 대체 위험성은 산업 구조나 자동화 진행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심지어 Arntz et al(2016)은 직업 중 오직 9%만이 자동화에 의해 소멸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준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미래에 사라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Acemoglu & Autor, 2010; Autor, 2015). 또한 정형화된 업무들을 기계가 전담함으로써 인간은 비정형적 직무 위주로 일을 수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Bessen, 2015; Autor, 2015) 특히 Bessen(2015)의 경우 ATM기의 증가가 은행 창구 직원(Bank teller)의 해고가 아니라, 금융상품 마케팅 등 비정형적 직무의 변화로 나타났음을 주장하였다.

비정형적 업무의 증가는 노동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게 한다. 이 경우 노동자들에게 신속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창의성은 필수적이다. AI의 발전이 반복적인 직무를 가진 직업들을 없애고 있어, 이들이 기술혁명에 의해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들의 실업 및 재고용을 위한 여러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비정형적 직무에 대비하여 개인의 ‘일상적 창의성’(small c)을 기를 수 있는 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창의성 연구는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연구를 통해 창의성을 유발하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해당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연구모델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2) 창의성 발생요인 분석

현재까지 창의성의 발생요인에 대해 심리학, 경영학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해당 절에서는 다양한 연구들 중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제외한 여러 미시적 개념과 창의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행복, 신뢰, 그리고 자율성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이 창의성 및 혁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진술한다(Cohn & Fredrickson, 2009). 이는 창의성이 인지다양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Page, 2007). 선행연구들은 긍정적인 심리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다양한 시각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Macleod, 1975; Jun Koo et al, 2019). 즉, 행복은 창의성의 근간이 되는 인지다양성을 촉진하여,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때의 행복은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통한 헤도닉한 행복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유다이모닉한 행복에 근접한 개념인데, Ryan과 Deci(2001)은 자기결정이론을 통해 유다이모닉한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 요인으로 자율성과 역량, 그리고 관계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자율성은 독립성 혹은 자유와 함께 창의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논의된다. Florida(2002)는 창의계급의 일을 통해 창의성을 통한 일하기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록 급여는 좋지 않지만, 업무 스케줄이 유연하고, 감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고객을 직접 응대하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된다. 즉, 창의계급은 항상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창의적인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창의적인 노동과정 내에는 다른 무엇보다 자율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Cekmecilioglu & Guensel(2011)은 자율성이 인간의 창의적 행동과 업무성장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자율성의 부족은 창의성에 사람의 내적 동기를 감소시켜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Shalley & Gilson(2004)은 단순하고 반복되는 직업은 노동자들의 동기를 유발하지 못함을 주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sikszentmihalyi(1997)는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인지할 때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몰입(Flow)하게 되며, 이러한 몰입 상태에서 창의성이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Wang과 Chen(2010)의 경우 창의적인 역할 정체성과 직업자율성이 배려적 리더십과 창의성의 관계에 조절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eorge와 Zhou(2001)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의 성실성은 창의성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Chang et al(2012)의 직무자율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직무자율성은 반드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자율성이 오히려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에도 창의성과 직무자율성의 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자율성, 혹은 자유로움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자율성이 창의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 맥락을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Ryan과 Deci(2001)의 논의에 기반하여 자율성이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조건을 찾는다면, 역량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그 조건이 될 것이다. 역량과 창의성의 관계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많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신뢰와 창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뢰는 창의성과 혁신수준을 높이는 원인변수로 나타나고 있다(Barczak et al, 2010). 이는 창의성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위험성에 대한 인내를 높이는 데 신뢰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Akçomak, I. S., & Ter Weel, 2009). 특히 창의성의 기반이 되는 인지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뢰는 나의 가족, 친구 등 가까운 관계보다는 보다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일 때 보다 유효할 것이다.

위의 논의들을 통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기 때문에, 미시적 요인들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토를 통제하고자 한다.

3) 안정성과 창의성, 혁신의 인과관계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안정성이 개인의 일상적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현재 창의성 연구가 사회환경과 창의성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는 데까지 올라왔으나, 아직 제도와 창의성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창의성이 갖는 위험성을 완화시켜주는 안정성으로서의 복지국가와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미시적 수준에서 안정성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며, 안정성은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아지면 창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Carmeli et al(2010)에 의하면 심리사회학적 안정은 창의성에 중요한 요인이며, 최근에는 직업불안정성과 경제적 불안정이 시민들의 창의성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Niesen et al(2018)에 의하면 개인이 느끼는 직업의 불안정성은 노동자의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짜증을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 몰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향력은 노동자의 혁신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Spiegelare et al(2014) 역시 직업의 불안정성이 일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혁신행동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Lorenz(1999)는 직업의 불안정성이 노동자가

암묵지(tacit knowledge)의 활용을 줄이게 해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Niesen et al(2018)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의 불안정성은 혁신행동의 약화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심리적 계약의 균열을 매개하여 혁신행동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직업불안정성과는 조금 다른 논의이나 Raffiee와 Feng(2014)의 “hybrid entrepreneurship” 연구에 따르면 전일유급노동과 자영업을 병행하는 자영업자가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사업의 전망을 파악하여 사업에 뛰어들어, 생존률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빈곤은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눈에 띈다. 이는 빈곤이 IQ와 인지적 통제 능력 등의 인지적 기능을 저해하여, 인지적 다양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다(Mani et al, 2013). 인지적 다양성은 재조합형 탐구의 가능성을 높여 창의성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Page, 2007), 빈곤이 창의성을 억제하는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심리자산은 문제해결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MacLeod, 1973; Jun Koo et al, 2019), 안정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인 복지국가는 개인의 창의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또한 전 국민의 잠재력 개발에 주목하는 사회투자정책과 포용적 성장은 일상적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복지국가가 부여하는 안정성이 개인의 창의성 발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사회투자국가와 포용적 성장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복지국가와 창의성에 대한 논의

1) 복지국가의 변화 : 사회투자국가와 포용적 성장

최근 복지국가의 논의는 과거의 전통적 복지국가 담론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지식경제로의 변화는 노동자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체제의 변화를 촉발하여, 모든 개인의 잠재력을 높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투자국가 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Hemerijck, 2017). 이러한 담론을 통해 사회투자정책은 기존의 전통적 복지국가 체제 내에서 재구조화되어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과 구사회위험(old social risk)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제로 그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투자정책은 발전과 고용, 인적자원의 보호를 통합한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Stock과 Flow, Buffer 정책이 그것이다(Hemerijck, 2017). 인적자본과 능력의 질을 높여주는 Stock 정책들은 미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부여형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Flow 정책은 노동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취약한

이행기에 있는 대상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급여들은 실업자, 여성의 생애주기적 전환을 용이하게 하며, 취약계층의 단절적인 노동커리어를 방지하고 지속적이고 긴 노동 커리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Buffer 정책의 경우 구직, 돌봄, 직업훈련 등 단기적으로 위험한 기간에 소득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통적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좋은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포용적 제도에 따라 불평등을 해소할 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포용적 성장 논의 역시 OECD에서 최근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논의이다. Acemoglu and Robinson(2012)는 포용적 제도의 유무가 번영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차이임을 주장하며, 사회정책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Putnam(2016) 역시 사회적 이동성을 생산하는 포용적 제도의 부재에 따라 미국 사회의 경제발전, American Dream과 같은 혁신이 감소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어,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회투자국가와 포용적 성장과 같은 논의들은 지식기반경제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이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창의성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투자국가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담론을 논의의 도구로 활용하여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사회정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

본 연구는 사회정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회투자정책의 구분 틀을 활용하여 사회정책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사회투자정책은 Stock과 Flow, Buffer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사회투자정책들은 창의성, 그리고 창의성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혁신 및 기업가정신과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Stock 관점의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자. 창의성과 보편적인 교육의 연관성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창조산업, 창의성에 대한 강조는 지난 9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창조산업을 미래 경쟁력으로 키우고 있으며, 영유아 때부터 자국민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다양한 사회투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엔위 안데르손, 2017). 그뿐만 아니라 Miettinen(2013)은 보편적 교육과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혁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보편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인적자본을 형성함으로써 전 국민의 지식 수준과 일상적 창의성을 향상시켜 혁신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마찬가지로 기회균등정책은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고 재능의 잘못된 할당을 줄여 더 많은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혁신을 강화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Bell et al, 2017; Celik, 2015). 특히 Bell et al(2017)의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수학성적과

특허출원율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발명가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위 1% 고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중위소득 이하의 아이들에 비해 발명가가 될 확률이 10배 높으며, 백인은 흑인에 비해 발명가가 될 확률이 3배 높게 나타났고, 남성 발명가의 비중은 총 82%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유색인종, 여성은 혁신에 있어 소수 대표되고 있어, 이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하고 혁신에 노출시킬 기회들을 제공할 때 창의성과 혁신의 수준이 높아질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행을 강조하는 Flow 관점에서 창의성과 사회정책의 관계는 보다 간접적이다. 보편적 ALMP정책, 가족정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면, 이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자아실현 혹은 ‘일이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져 자연스럽게 일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Esser, 2009; 김영미, 김은하, 2013; van der Wel, K. A., & Halvorsen, K., 2015). 이러한 근로의욕은 노동자의 재량학습(discretionary learning)의 수준을 높이며, 노동자의 혁신행동, 즉 업무창의성의 기반이 된다.

특히 van der Wel, K. A., & Halvorsen, K.(2015)의 연구는 복지국가의 관대성과 일 몰입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관대성이 높을수록 여성의 일 몰입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남성의 일 몰입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는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등이 근로연령대의 여성의 일 몰입과 창의성의 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을 제공하는 Buffer 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정책이 창의성의 결과 변수인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자영업자 혹은 실업자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특정한 복지정책이 창의적인 노동의 결과물인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Fillipetti & Guy, 2015; Humbert et al, 2014; Raffiee & Feng, 2014).

Fillipetti & Guy(2015)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영역에서 벌어진 혁신에 대한 투자행태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고용안정 혹은 실업보험의 수준이 높을 경우 노동자와 실직자들이 직업훈련에 있어 보다 잠재적 발전성이 높은 기술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술이 비록 좀 더 불확실하더라도, 본인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에 기여한 것이다. Humbert et al(2014)의 프랑스의 신규실업자영업자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실업자영업자들에게 3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권을 인정해주는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소규모 기업 간 경쟁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혁신을 이뤄내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개별 복지정책이 사람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하여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엔뉴 안데르손(2017)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책 수준을 넘어 하나의 사회체제 역시 창의성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0년대 영국의 노동당과 스웨덴의 사민당은 모두 창조산업의 발달과 국민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투자정책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그 양태는 달랐는데, 연대와 평등 등 사회민주주의의 가치가 강조된 스웨덴의 지식경제는 ‘도서관’에 비유된다면, 영국의 지식경제는 기회의 평등, 능력주의가 강조되는 ‘작업장’으로 비유되었다. 이는 거시적인 사회체제의 유산이 창의성 향상 정책과 지식경제체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의 혁신 지수가 높다는 점은 사회투자정책의 조합과 창의성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특히 Lorenz & Lundvall(2010)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일은 보편적인 교육제도, 유연안정적인 복지제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Lorenz와 Lundvall 등 현재까지 진행된 복지국가와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을 노동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복지국가는 한 국가 내의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니만큼, 작업장에서의 혁신을 넘어 수많은 일상적 창의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투자정책들이 개인의 창의성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투자정책의 3요소인 Stock, Flow, Buffer 관점에서 근로연령대에 대한 사회지출, 가족 사회지출, 정부교육지출이 개인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평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H1: 공공교육지출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더욱 창의적이 될 것이다.

H2: 가족지출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더욱 창의적이 될 것이다..

H3: 근로가능연령 정책 지출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더욱 창의적이 될 것이다.

H4: 포용적인 사회제도를 갖춘 나라일수록 창의적인 개인이 증가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제 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이다. 제 6차 세계가치관 조사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60개국의 85,000명 이상의 응답자에게 다양한 가치에 대해 질문한 데이터로, 개인 수준의 가치와 문화적 변화를 추적하는데 유용한 데이터이다(Ingleharts et al, 2014). 다양한 가치 비교 연구들이 세계가치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뤄지고 있으며(Delhry, 2010; Rothstein, 2010; Jakobsen, 2011), 창의성의 인식에 대한 질문이 있어 본 연구 역시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제6차 세계가치관 조사에 포함된 국가

중 OECD 9개 국가(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일본, 한국, 호주)를 분석에 활용할 국가로 선정하였다. OECD 국가는 국가별 경제수준이 유사하며, 사회보장정책 및 관련 사회정책 데이터 확보가 수월하여 국가비교에 적합하다. 각 국가별 만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근로연령대 총 9,391 케이스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방법은 국가변수와 개인변수를 통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세계가치관 조사 자료는 여러 국가의 개인자료들이 횡적으로 연결된 비교 국가자료이다. 이러한 경우 국가변수 및 개인변수, 그리고 상호연관성의 엄밀한 검정을 위해서는 주로 다층분석을 활용하나, 본 연구의 경우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적정한 수의 2층 변수(국가변수)의 확보가 어려웠다. 때문에 국가변수와 개인변수를 통합한 다중회귀분석을 대안으로 선택하였다. 분석 자료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개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이 분석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모델

1) 종속변수 : 창의성(creativity) 수준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 변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종속변수인 개인 수준의 일상적 창의성(small 'c')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우선적인 질문이 된다.

본 연구에서 '창의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세계가치관조사의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V70. It is important to this person to think up new ideas and be creative; to do things one's own way.의 한국 설문지 참조)'라는 질문이다. 해당 문항은 ①나와 굉장히 비슷하다 ②나와 아주 비슷하다 ③나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 ④나와 약간 비슷하다 ⑤나와 비슷하지 않다 ⑥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는 해당 문항을 역코딩하여 개인의 창의성 척도로 설정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평가하는 창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문항은 Schwartz value survey 중 하나의 문항으로,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Schwartz value survey의 약식버전을 포함하고 있다. 약식 버전이기 때문에 각 가치에 대한 척도의 타당성이 떨어지며(Rudnev, 2011), 응답자의 자기인식을 질문하기에 답변의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Sameh Said-Metwaly et al, 2017). 그러나 Rudnev(2011)의 비판은 세계가치관조사 중 Schwartz value survey에 해당하는 10개의 가치가 Schwartz value의 상위 체계를 구성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창의성에 대한 질문 자체가 창의성과 연관되어있지 않다는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Carmeli et al(2010)에 따르면, 창의성은 자기인식적인 과정이기에, 창의성의 자기 인식을 물어보는 것 역시 개인의 창의성을 측정하는데 유효할 수 있다. 또한 자기진술을 통한 창의성 측정은 활용이 용이하며,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Sameh Said-Metwaly et al, 2017).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한 질문의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창의성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국가 수준의 독립변수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독립변수를 채택함으로써,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개인변수들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부 고려한 이후에도 각 복지 국가의 제도가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Stock 정책, Flow 정책, Buffer 정책, 그리고 포용성을 어떻게 변수화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Stock 정책은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사회투자정책으로, 보편적 교육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이러한 논의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각 국가의 GDP 대비 정부 교육지출 비중(OECD 자료 참조)을 통해 Stock 정책의 규모를 대리 측정할 것이다.

Flow 정책의 경우 노동시장의 이행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으로, 대표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가족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을 통해 한 국가의 Flow 정책의 규모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관대한 복지지출이 일 몰입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이를 다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함이다(van der Wel, K. A., & Halvorsen, K, 2015). 이에 따라 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 비중(OECD 자료 참조)을 통해 Flow 정책의 규모를 측정할 것이다.

Buffer 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그 범위가 넓고 전통적 사회 복지지출과 그 경계가 모호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령지출과 유족지출, 그리고 가족지출을 제외한 사회지출 전체의 GDP 대비 비중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근로 연령대에 투입되는 사회지출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 국가의 포용적인 사회제도의 결과는 불평등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국가의 근로 연령대(만 18세 ~ 만 64세)의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WVS 6차 데이터의 응답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¹⁾

3) 통제변수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수준의 통제변수는 자율성, 업무의 독립성, 일반화된 신뢰, 행복을 투입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근로여부, 업무의 창의성, 교육수준, 계층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또한 각 국의 경제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WVS 6차 응답년도 기준의 1인당 GDP를 통제하였으며, 25-54세 여성 고용률을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 역시

1) 2010년 : 한국, 일본 / 2011년 :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스페인 / 2012년 : 호주, 네덜란드 / 2013년 : 독일

통제하였다.

해당 연구모형의 변수들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 연구모형의 변수에 대한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질문문항)	척도
종속	창의성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1(not at all like me) – 6(very much like me)
독립	정부교육지출	(OECD) 응답년도 GDP 대비 정부교육지출 비중	
	가족지출	응답년도의 GDP 대비 가족지출 SOCX 비중	
	근로연령대 사회지출	응답년도의 GDP 대비 노령, 가족, 유족을 제외한 SOCX 비중	
	지니계수	응답년도 혹은 직전의 지니계수	
통제 변수 (개인)	성별		0: 남성, 1: 여성
	연령		연속변수
	교육수준	00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0: 고졸 이하 1: 대재 이상
	근로여부	00님께서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0: 근로하지 않음 1: 근로
	계층	00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lower class) – 5(upper class)
	삶의 만족도		1–10
	신뢰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Need to be careful 1: Most people can be trusted
	자유성	00님께서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과 자유스런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거의 자유선택이 없는 운명적이라고 느끼십니까?	1(No Choice at all) – 10(A great deal of choice)
	업무 창의성	00님이 종사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종사했던 직종은 일상적인 업무를 다루는 직종입니까? 아니면 창의적인 업무를 다루는 직종입니까?	1(Mostly routine task) – 10(Mostly creative task)
	업무 독립성	00님이 종사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종사했던 직종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일했거나 일하고 있습니까?	1(No independence at all) – 10(complete independence)
통제 변수 (국가)	최근1인당 GDP	(OECD) log(응답년도 1인당 GDP)	
	여성 고용률	(OECD) 여성 25–54세 고용률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국의 창의성 수준, 안정성을 비롯한 여러 개인변수와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별로 창의성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림 1. 국가별 창의성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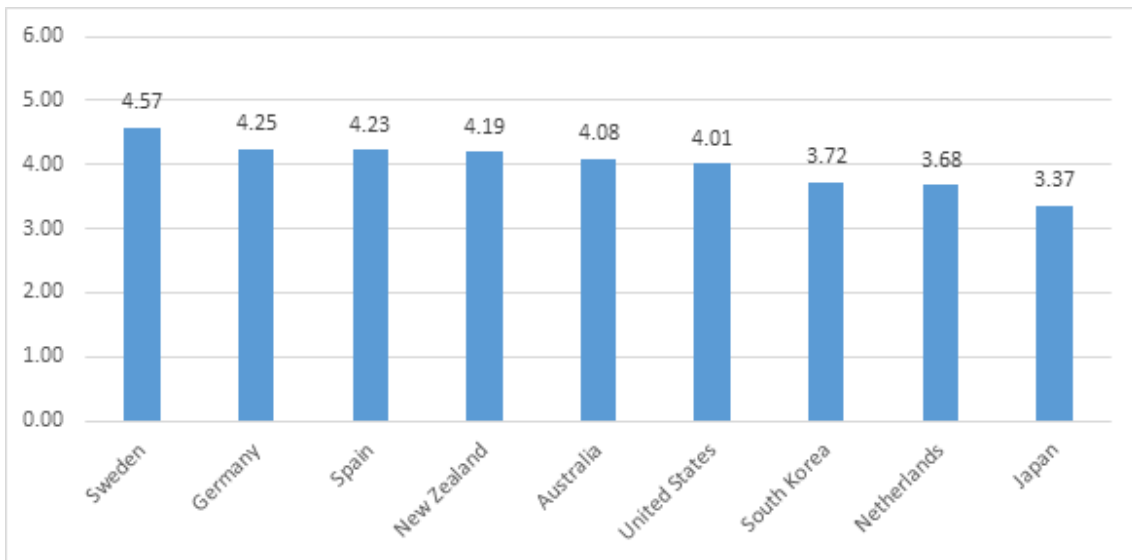


그림 1은 종속변수인 창의성 변수를 국가별로 평균 비교한 값이다. 본 결과에 따르면 창의성의 수준은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투자정책의 수준이 높고 포용적인 사회정책을 기반으로 한 국가로 평가 받는 스웨덴이 일상적 창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불평등이 높은 자유주의 레짐에 속해있는 뉴질랜드와 호주, 미국은 나란히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수주의 레짐에 속해있는 독일과 스페인, 네덜란드는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창의성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를 통해 창의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자율성은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움을 질문한 WVS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면,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의 자율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순위로는 네 번째이나, 다른 자유주의 레짐 국가들과 매우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수주의 레짐의 국가들인 스페인과 독일, 네덜란드가 그 뒤를 잇고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순위의 차이는,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율성 이외의 것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3은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창조적으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과

독립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10점 척도 중 6~10점으로 응답한 비중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별로 창조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민주의 레짐 국가와 자유주의 레짐 국가, 그리고 보수주의 레짐 중 네덜란드의 경우 창조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의 비중이 전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의 경우 창조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 모두 9개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내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개인에게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복지국가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가별 자율성 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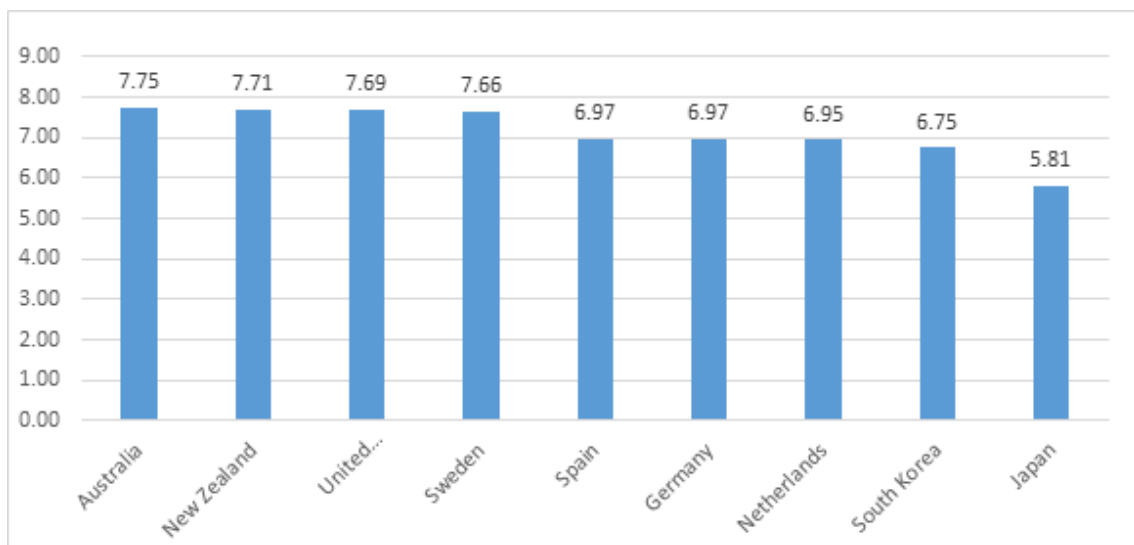


그림 3. 국가별 창조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의 관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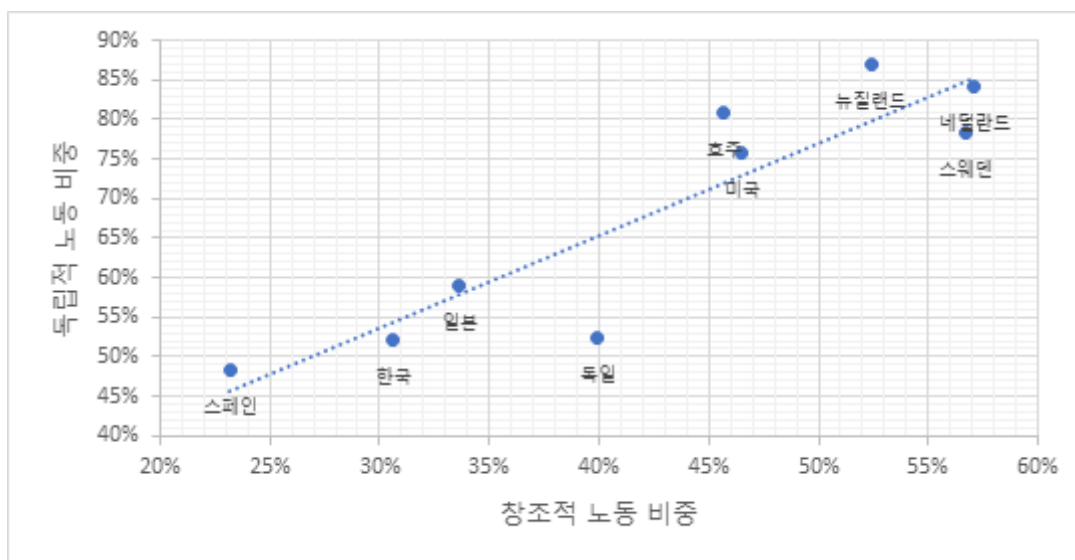


표 3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인레벨 변수들의 복지레짐별 계층별 기초 통계 표이다. 표에 따르면 사민주의 레짐의 경우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변수의 전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층별 편차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주의 레짐의 경우 일반화된 신뢰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에서 두번째로 좋은 결과값이 나타나고 있지만, 계층별 편차가 다른 레짐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보수주의 레짐의 경우 모든 변수에서 세번째로 좋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결과값이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레짐의 경우, 가장 낮은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 역시 크게 나타나 가장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창의성에는 계층변수와 복지국가의 형태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복지레짐별 계층별 개인변수 기초통계

복지레짐 ²⁾		창의성	자율성	업무창의성	업무자율성	일반화된 신뢰	행복
사민주의	Lower	4.4	7.2	4.6	6.6	0.4	3.2
	Middle	4.6	7.8	6.2	7.3	0.7	3.4
	Upper	4.9	7.8	6.0	6.4	0.7	3.4
	전체	4.5	7.7	5.8	7.2	0.6	3.4
자유주의	Lower	4.0	7.3	4.3	7.0	0.3	3.1
	Middle	4.1	7.9	5.6	7.4	0.5	3.3
	Upper	4.2	8.8	7.1	7.9	0.3	3.7
	전체	4.1	7.7	5.2	7.3	0.4	3.3
보수주의	Lower	3.8	6.7	4.0	5.6	0.3	3.0
	Middle	4.1	7.1	5.3	6.4	0.5	3.2
	Upper	4.1	7.8	7.2	7.9	0.8	3.6
	전체	4.0	7.0	4.9	6.2	0.5	3.1
동아시아	Lower	3.3	5.6	4.0	5.5	0.3	3.0
	Middle	3.6	6.5	4.8	6.0	0.4	3.2
	Upper	4.2	6.7	6.1	7.7	0.5	3.7
	전체	3.5	6.2	4.5	5.9	0.4	3.1

2.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4는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창의성은 개인

2) 스웨덴은 사민주의 레짐,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자유주의 레짐,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는 보수주의 레짐,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레짐으로 분류하였다.

수준의 변수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창의성의 수준은 사회정책 지출의 규모와는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지니계수와는 부의 관계를 보여, 보편적 복지국가와 창의성이 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지니계수와 근로연령대 복지지출의 관계이다. 지니계수는 다른 복지지출 변수와는 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근로연령대 복지지출과는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니계수가 65세 이상의 인구 역시 포함하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5와 표 6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모형의 설명력은 13.1%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성은 전부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연령대 사회지출, 가족지출, 정부교육지출은 전부 개인의 창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0$). 특히 그 기울기는 근로연령대 사회지출($b = .193$), 가족지출($= .106$), 정부교육지출($b = .054$)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Buffer 정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창의성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그 통계적 영향력의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49$, $p = .075$).

통제변수 중에서는 남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를 하지 않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성, 업무창의성, 업무독립성 역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신뢰와 행복은 창의성에 통계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1인당 GDP는 창의성에 통계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54세 여성고용률은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창의성																	
2)근로연령대 사회지출	.165***																
3)가족지출	.162***	.320***															
4)정부교육지출gdp	.129***	.028**	.288***														
5)지니계수	-.032***	.188***	-.586***	-.074***													
6)성별	-.084**	-.005	.025**	.030**	-.007												
7)연령	-.129	-.015	-.003	-.030**	.015	-.002											
8)교육수준	.095***	-.190***	-.047***	.220***	.081***	-.021*	-.086***										
9)근로 여부	.014***	-.003	.124***	-.008	-.071***	-.135***	.001	.098***									
10)계층	.103***	-.057***	.052***	.113***	-.087***	.010	.002	.294***	.107***								
11)업무창의성	.218***	-.010	.113***	.129***	-.063***	-.071***	.054***	.272***	.078***	.261***							
12)신뢰	.044***	-.007	.188***	.107***	-.163***	.008	.053***	.148***	.095***	.186***	.171***						
13)행복	.067***	.015	.084***	.074***	.000	.067***	-.043***	.050***	.073***	.212***	.122***	.155***					
14)자율성	.155***	.087***	.121***	.242***	.054***	.049***	-.031**	.113***	.043***	.183***	.135***	.143***	.300***				
15)업무독립성	.132***	-.015	.125***	.208***	.017	-.042***	.119***	.151***	.126***	.175***	.392***	.140***	.137***	.210***			
16)최근1인당GDP	.065***	.410***	.468***	.120***	.079***	.032**	.088***	-.023*	.104***	.020*	.132***	.189***	.135***	.126***	.206***		
17)여성고용률	.099***	.431***	.667***	.273***	-.466***	.027**	.059***	-.082***	.101***	.064***	.154***	.240***	.100***	.091***	.151***	.719***	

***<0.001, **<0.01, *<0.05

표 5.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1	.364 ^a	.132	.131	1.195	1.956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구모형 (R2 = .131)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베타		VIF
	(상수)		.000	
독립 (국가)	근로연령대 사회지출	.193	.000	2.862
	가족지출	.106	.000	4.302
	정부교육지출	.054	.000	1.660
	지니계수	-.049	.075	8.083
통제 (개인)	성별	-.079	.000	1.037
	연령	-.124	.000	1.049
	교육수준	.039	.000	1.318
	근로 여부	-.029	.003	1.077
	계층	.030	.005	1.228
	신뢰	-.011	.305	1.156
	행복	.007	.528	1.168
	자율성	.084	.000	1.225
	업무 창의성	.172	.000	1.318
	업무 독립성	.050	.000	1.317
통제 (국가)	최근1인당GDP	-.015	.556	7.148
	여성고용률(25-54)	-.108	.000	9.769
a. 종속변수: creativity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창의성에 미치는 사회제도의 영향력으로써 복지국가라는 변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창의성, 나아가 혁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복지국가의 안정성을 통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지식기반 경제의 흐름에 따라 복지국가 역시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식기반 경제의 가장 주요한 강조점인 창의성과 사회정책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World Value Survey 중 선진 복지국가에 해당하는 9개국의 개인 데이터와 국가데이터를 결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창의성의 수준은 국가별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는 창의성의 핵심적 변수인 자율성의 차이로도 해석되지만, 국가별 창의성의 순위와 자율성 순위 차이를 통해 다른 변수 역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또한 복지레짐별, 계층별 창의성의 차이를 통해서 계층의 안정성이 창의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안정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사회투자정책 및 포용적 성장에 관한 변수들을 투입하여 복지국가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회투자정책 관련 변수인 Stock과 Flow, Buffer는 전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불평등의 경우 창의성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통계적 유의미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편적인 사회투자정책은 시민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식기반의 기술혁명시대인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복지국가는 생산성 증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투자정책의 적극적인 조합은 시민의 창의성 증진을 통해 국가의 혁신능력 부양에 기여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로 활용한 지출 수준은 사회투자정책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보편적인 사회투자정책은 분명히 큰 규모의 지출을 가져올 수 있으나, 사회투자정책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엄밀한 독립변수가 부재하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Hemerijck(2017)의 논의와 같이, 사회투자정책은 전통적인 사회정책을 전부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각 국가의 역사적 맥락에 맞게 기존의 사회정책과 정책적으로 조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옌뉘 안데르손. (2017). 도서관과 작업장 - 스웨덴, 영국의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 책세상
- 이정모. (2011). 창의성 개념의 21세기적 재구성. 한국교육 미래 비전, 한국교육개발원 편, 서울: 학지사.
- 이정훈, & 한기순. (2018).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창의력교육연구, 18, 87-106.
- 최영준, 구교준, & 윤성열. (2018). 복지국가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34(4), 229-258.
- Acemoglu, Autor, (2010)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NBER Working paper
- Akçomak, I. S., Ter Weel, B. (2009). Social capital, innovation and growth: Evidence from Europe. European Economic Review, 53(5), 544-567.
- Amabile, T. M. (1988). A mode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0(1), 123-167.
- Amabile, T. M., Conti, R., Coon, H., Lazenby, J., & Herron, M. (1996). Assessing the work environment for creativ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5), 1154-1184.
- Anderson, C. J., & Hecht, J. D. (2015). Happiness and the Welfare State: Decommodification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Subjective Well-Being. The Politics of Advanced Capitalism, 357-380.
- Arntz, M., T. Gregory and U. Zierahn (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89, OECD Publishing, Paris,
- Autor, (2015),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9(3)
- Barczak, G., Lassk, F., & Mulki, J. (2010). Antecedents of team creativity: An examination of team emotional intelligence, team trust and collaborative culture.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19(4), 332-345.
- Bessen (2015) How computer Automation affets Occupations: Technology, Jobs and Skills, Law & Economics Working Papers No.15-49
- Brandal, N., Bratberg, Ø., & Thorsen, D. (2013). The Nordic model of social democracy. Springer.
- Carmeli, A., Reiter-Palmon, R., & Ziv, E. (2010). Inclusive leadership and employee involvement in creative tasks in the workplace: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safe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2(3), 250-260.
- Çekmecelioglu, H. G., & Günsel, A. (2011). Promoting creativity among employees of mature industries: The effects of autonomy and role stress on creative behaviors and job performanc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4, 889-895.
- Chang, J. W., Huang, D. W., & Choi, J. N. (2012). Is task autonomy beneficial for

- creativity? Prior task experience and self-control as boundary conditio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0(5), 705–724.
- Cohn, M. A., Fredrickson, B. L., Brown, S. L., Mikels, J. A., & Conway, A. M. (2009). Happiness unpacked: positive emotions increase life satisfaction by building resilience. *Emotion*, 9(3), 361.
- Csikszentmihalyi, M. (1997).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Basic Books.
- De Dreu, C. K. (2010). Human creativity: Reflections on the role of cultur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6(3), 437–446.
- De Spiegelaere, S., Van Gyes, G., De Witte, H., Niesen, W., & Van Hootegem, G. (2014). On the relation of job insecurity, job autonomy, innovative work behaviou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work engagement.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23(3), 318–330.
- Doctrinal, L., Nelson, K., and S. Sirén. (2015). Comprehensive Indicators for the Analysis of Out-of-Work Benefits: Introducing the Out-of-Work Benefits Dataset. InGRID Deliverable 22.3. Stockholm: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Esping-Andersen, G. (1999).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London: Polity.
- Filippetti, A., & Guy, F. (2015). Skills and social insurance: Evidence from the relative persistence of innovation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n Europe. *Science and Public Policy*, 43(4), 505–517.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 Florida, R. (2014). The creative class and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8(3), 196–205.
- Frey, C. B., & Osborne, M.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 George, J. M., & Zhou, J. (2001). When openness to experience and conscientiousness are related to creative behavior: an interactional approa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3), 513.
- Glăveanu, V. P. (2010). Principles for a cultural psychology of creativity. *Culture & Psychology*, 16(2), 147–163.
- Goos, M., Manning, A., & Salomons, A. (2014). Explaining job polarization: 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04(8), 2509–26.
- Hemerijck A (2017) 'Social Investment and its Critics', pp. 3-42 in A Hemerijck (ed.) *The Uses of Social Invest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nnessey, B.A. and Amabile, T.M. (2010) Creativ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1, 569–598.
- Humbert, J., Schoar, A., Sraer, D., & Thesmar, D. (2014). Can unemployment

- insurance spur entrepreneurial activity? (No. w2071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Inglehart, R., C. Haerpfer, A. Moreno, C. Welzel, K. Kizilova, J. Diez-Medrano,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t al. (eds.). (2014). World Values Survey: Round Six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Madrid: JD Systems Institute.
- Jun Koo, Young Jun Choi & Iljoo Park. (2019). Innovation and welfare: the marriage of an unlikely couple. *Policy and Society*. 1–19.
- Karakaya, E. (2017). Why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matter in innovation systems: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ning and metal producing industry of Sweden. In DRUID Society Conference.
- Lorenz, E. (1999). Trust, contract and economic cooper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3(3), 301–315.
- Lorenz, E., & Lundvall, B. Å. (2010). Accounting for Creativity in the European Union: A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 competence, labour market structure, and systems of education and training.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5(2), 269–294.
- MacLeod, G. A. (1973). Does creativity lead to happiness and more enjoyment of lif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7, pp. 227–230.
- Mani, A., Mullainathan, S., Shafir, E., & Zhao, J. (2013). Poverty impedes cognitive function. *science*, 341(6149), 976–980.
- Mehta, R., & Zhu, M. (2015). Creating when you have less: The impact of resource scarcity on product use creativ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5), 767–782.
- Nedelkoska, L., & Quintini, G. (2018). Automation, skills use and training. OECD Publishing.
- Niesen, W., Van Hootegeem, A., Vander Elst, T., Battistelli, A., & De Witte, H. (2018). Job insecurity and innovative work behaviour: A psychological contract perspective. *Psychologica Belgica*, 57(4).
- OECD (2016) New Forms of Work in the Digital Economy,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60)
- Pacek, A., & Radcliff, B. (2008). Assessing the welfare state: The politics of happiness. *Perspectives on Politics*, 6(2), 267–277.
- Page, S. E. (2007). Making the difference: Applying a logic of diversity.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1(4), pp. 6–20.
- Raffiee, J., & Feng, J. (2014). Should I quit my day job?: A hybrid path to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7(4), 936–963.
- Rudnev, M. (2011). The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of 10 Schwartz value items in World Values Survey. In 4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Survey Research Association, Lausanne.

- Runco, M. A. (2005). Motivation, Competence, and Creativity. In A. J. Elliot & C. S. Dweck (Eds.),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pp. 609–623). New York, NY, US: Guilford Publications.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Said-Metwaly, S., Noortgate, W., & Kyndt, E. (2017). Approaches to Measuring Creativit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Creativity. Theories - Research - Applications*, 4(2), 238–275. doi: <https://doi.org/10.1515/ctra-2017-0013>
- Sawyer, R. K. (2006). *Explaining creativity: The science of human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Shalley, C. E., & Gilson, L. L. (2004). What leaders need to know: A review of social and contextual factors that can foster or hinder creativity. *The leadership quarterly*, 15(1), 33–53.
- Simonton, D. K., & Ting, S. S. (2010). Creativity in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s: The lessons of historiometry.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6(3), 329–350.
- Smith, S. M, Ward J.B, & Finke, R. A. (1995). *The creative cognition approach*. Cambridge, MA.: MIT press.
- Snijders, T., & Bosker, R. (1999). *Multileve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basic and applied multilevel analysis*. London, Sage.
- Van Hootegem, A., Niesen, W., & De Witte, H.(2018) Does job insecurity hinder innovative work behaviour? A threat rigidity perspective.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https://doi.org/10.1111/caim.12271>
- Wang, A.C. and Cheng, B.S., (2010). When does benevolent leadership lead to creativity? The moderating role of creative role identity and job autonom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1(1), pp.106–121.

제 4 장

포용국가는 혁신수용성을 높이는가?

I. 서론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차 산업혁명)¹⁾’이라는 화두를 던진 이후 국내외에서 이와 연관된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겪어 온 1~3차 산업혁명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기술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한 기계적 생산, 2차는 분업과 전력을 사용한 대량 생산, 3차는 전자기술과 IT를 이용한 자동생산으로의 변화(정현학 외, 2016)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사이버(Cyber)와 물리(physics)가 융합된 CPS 시스템이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이하 기술혁명)의 영향을 예측하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이로 인하여 커다란 변화가 유발될 것이며, 그 영향이 어떠한 방향일지에 대하여 예측하거나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즉 과학기술로 인한 변화 자체는 사회에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사회는 이에 대응 혹은 적응하는 주체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제도를 수립하는지 문화 및 정치적 맥락에 따라 과학기술로 인한 변화 자체도 매우 다양한 범주를 가질 수 있다. 과학기술의 효용이 뛰어나고 파급 영향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에 수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승차공유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각 사회에서 그 변화를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에서도 면허제로 운행되고 있는 택시 업계에 승차공유서비스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시위를 하며, 몇몇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러한 저항운동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8세기 말 영국의 공장지대에서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과 임금하락에 반발하기 위하여 자행된 기계파괴운동인 러다이트 운동과 닮아있다. 당시 일부 노동자들은 자동화된 기계가 생계, 가족, 지역사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격렬하게 저항하였으나, 결국 기계화의 흐름을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흔히 러다이트 운동은 자동화가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한다(Pistono, 2014). 그러나 러다이트 운동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의 혁신 수용성에 따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기술의 통제 불능하고 비인격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비판하는 네오 러다이트 운동이 20세기 이후에 나타나

1) 4차 산업혁명 : 기존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많은 영역들이 서로 넘나들면서 유발되는 변화로서,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분야들이 경계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되고 연결되어 가는 기술혁신의 패러다임(WEF, 2016)

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기술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그 보상이 매우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에 반대하여 기술적으로 단순한 삶을 수용한다(Hunt-Bull, Nicholas, 2006). 그들은 기술 진보로 인하여 수반되는 문화적, 사회경제적 변화 때문에 기술을 반대한다(Jones, 2006). 물론 정반대로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변화될 세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적극 수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극심하다면, 러다이트 운동처럼 사회적으로 갈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기술혁명이 이루어질 것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기술혁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가? 전문가들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자동화로 대체될 확률이 다르다는 결과가 제시해왔는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불안정성 경험 여부와 직무특성이 기술혁명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정책을 통하여 삶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과학기술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기술혁명이 미치는 영향

기술혁명은 개인, 기업, 산업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 가능성을 담고 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먼저 낙관적 입장에서는 범용기술의 등장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며 다양한 사회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맞춤형 대량생산체계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분야 간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WEF, 2016). 다시 말해, 과거 물리적 노동력으로 인하여 가치를 창출하던 산업자본주의로부터 지식이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사회로 전환되는 것이며(이상은, 2018),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각종 위험과 사회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이 예측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오작동, 사생활 침해 등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혁명은 상품과 서비스 생산의 전통적 가치사슬을 해체할 것이며, 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하고 경쟁 위계를 무너뜨릴 위험성과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허재준, 2017). 장필성(2016)은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제조업 혁신, 맞춤형 니즈의 전환 등 산업구조의 획기적 변화를 예상하였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하지 못한 기업들은 상대적인 경쟁력 저하로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생기는 변화는 시장에 국한되어 생존 혹은 소멸하는 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구조, 사회 및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개인의 삶에서도 창조적 파괴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된다(최진욱, 2017). 특히 개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 즉 고용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또한 이에 대한 예측은 가장 극명하게 낙관론과 비관론이 나뉘는 분야이기도 한다. 먼저 낙관론을 살펴보면, 기술의 변화로 인하여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오히려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자리는 증가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으로 진행된 기술혁명을 살펴보았을 때, 기술로 인하여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을 확장한 보상효과(compensation effects)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Arntz et al., 2016; Graetz & Michaels, 2017; Autor & Salomons, 2017). 1960년부터 50년간 미국의 기술혁신과 고용의 상관관계 통계에 의하면, 기술혁신 시기에 생산성과 고용이 비례하여 성장했음이 알 수 있다. 유사한 상황이 4차 혁명사회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반면에 비관론은 기술의 자동화로 사람의 일이 기계에 의해 대부분 대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Frey & Osborne, 2013; Brynjolfsson & McAfee, 2012). 특히 Frey & Osborne(2013)의 연구에서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향후 10~20년 정도 사이에 급속한 기술진보로 인하여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비중을 분석하였는데 미국 내 일자리의 47%가 대체 확률 0.7 이상인 고위험군 직종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상은(2018)은 기술혁명이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미래사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론 혹은 비관론으로 편향된 입장이 아니라 중립의 입장에서 기술혁명의 시대를 주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래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다가올 기술혁명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한다면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논의들은 미래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예측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변화 자체가 각 사회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주어질 것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사회구성원들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하여 다른 수용도를 보이고 사회는 제도를 통하여 변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구성원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혁신에 대한 수용성

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혁명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특정한 혁신기술이 소개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이에 대하여 수용 혹은 저항을 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 점

근이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으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소비자에 의하여 인지된 이용의 편리성(perceived ease of use) 및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에 의하여 태도가 형성되고 이것이 실제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진형석과 남경두(2017)는 기업 차원에서 기업가정신, 기술준비도와 기술사업화 역량 수준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실증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술준비도란 사람들이 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신기술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성향을 의미(Parasuraman, 2000)한다는 점에서 기술수용모델의 논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으로 혁신저항 모델은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저항이란 현재 상태에서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소비자의 상태이며 변화에 의해서 느끼는 위협감이며(Ram, 1987), 이전 상태를 변경하도록 하는 압력에서 이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으로, 혁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Zaltman & Wallendorf, 1979). 혁신에 대한 저항은 많은 요인으로 인해 유발되며, 다양한 차원을 지닌 복잡한 현상이다(Caiden, 1969).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용성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과학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므로 엄밀하게는 다른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기술혁명 사회에 대하여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고, 제품들이 나오는 미래로 인지하게 되므로,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기술에 대한 것은 소비자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품 구매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기술혁명 사회 전체에 대한 예측에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으므로 변화 자체를 위협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다. 황상규(2016)의 연구에서는 신기술 관련 수용성을 기술 자체의 신뢰성 여부(이용자 수용성), 산업 간 갈등(산업적 수용성) 및 기존 규제와 상충(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살펴보았다. 신윤창 외(2009)에서는 사회적 수용성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인식의 공유과정을 통해 받아들일 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인식도 주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III. 이론적 논의

1.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성

개인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게 된다.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상황을 바탕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에 경험한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성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소득은 삶의 여러 차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Kawachi et al., 1997; 이현송, 2000; 이민아, 송리라 2014). 특히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경제적 자원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므로(Diener & Biswas-Diener, 2002), 많은 연구에서 소득수준을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Blanchflower & Oswald, 2004; Frey & Stutzer, 2000). 또한 직업은 소득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며, 더욱이 직업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으므로(Jahoda, 1982) 이는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얻는 통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Easterlin(2001)은 객관적인 투입 요소로서의 소득이 주관적인 요소인 삶의 질, 행복 등에 선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서 의문을 가졌고 소득과 행복이 비선형 관계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여러 후속연구들을 통하여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절대빈곤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Stevenson & Wolfers, 2013; Deaton, 2008; Veenhoven, 2005). 따라서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 고용 상태 등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그 변화의 폭에 주목한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다. 구교준 외(2014)에서는 사람들이 소득, 사회적 지위 등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절대적 삶의 조건보다는 과거보다 나은 삶이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행복 혹은 삶의 질 등을 종속변수로 하고 있지 않지만,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에 대한 예측에 따라 주관적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논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Graham & Pettinato(1999)에 의하면 소득 변화에 대한 경험이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상황에 대한 기대를 만들고, 이러한 주관적 평가 및 기대가 개인의 주관적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인회(2003)는 경제적 변화는 기존에 익숙하였던 생활방식의 중단을 초래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객관적인 빈곤을 경험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소득변동이 자주 일어나거나 그 폭이 큰 경우 미래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므로 이에 기반을 둔 소비활동에의 위험(risks) 역시 증가하게 된다(Hacker & Jacobs, 2008b; Gosselin & Zimmerman, 2008). 그러나 아직까지 미래 기대의 원인요소에 대하여 특히 소득의 불안정성과 같은 변동성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금현섭, 백승주,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상황보다 최근의 불안정성 경험이 미래에 대한 예측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간주하며, 객관적인 소득 및 고용의 상태가 아니라 불안정성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노동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은 그 범주 및 개념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 Standing(2014)는 노동에서의 불안정성이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숙련 불안정 등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는 개념이라 하였으며, 이승윤 외(2017)는 고용 측면의 불안정성, 소득 측면의 불안정성, 사회 보장 측면의 불안정성은 모두 노동시장의 불안

정성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보았다. 개인은 모든 차원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교집합에 놓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은 안정하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불안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 Greenhalgh & Rosenblatt(1984)는 노동의 불안정이란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당사자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그들의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는 위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느끼는 무력감이라 정의하였으며, Kalleberg(2009) 역시 고용이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위험한 상태로 정의함으로써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잠재적 박탈 모델(latent deprivation model)에 따르면 직업은 단순히 소득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유지,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여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개인들의 삶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Jahoda, 1982). 또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사건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영향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Cheng & Chan(2008)은 고용불안정 자체를 미래의 고용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 혹은 불안감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응답자가 지각하는 직업 상실에 대한 확률로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은 주로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고용형태 또한 소득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장효진, 2017). 즉, 경우에 따라 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고용 자체는 불안정한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고용은 안정적인 형태이지만 회사의 불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소득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고용 상실 혹은 임금 삭감 등을 경험함과 관계없이 실직 가능성을 인지할 때 느끼는 불안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먼 과거에의 경험보다는 최근의 경험, 현 상황에 대한 상태 등이 더욱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불안정성의 차원 중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고용 및 임금의 차원에 주목하였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역시 확인함으로써 직업 상실에 대한 확률로서의 불안정성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a. 최근에 고용의 불안정을 경험하였을수록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예측한다.

가설 1-b. 최근에 소득의 불안정을 경험하였을수록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 범주에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Trevor, C. O. (2001)에 의하면, 고용가능성이란 개인의 이동 자본이며, 일반적인 일자리 가능성인 동시에 개인의 실질적인 이직 용이성을 의미한다. 이는 근

로자에게 제공되는 인적 자원 개발에 의하여 촉진될 수 있으며, 근무 환경과 업무의 변화에 대응하고 예측함으로써 근로자의 기술과 역량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Eurofound, 2008).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용가능성은 고용불안정성을 대체적으로 줄여준다고 알려져있다(Kohlrausch & Rasner, 2014; Lang, 2012). 본 연구에서도 해당 요소는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해석한다.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노동 이외에도 쉽게 유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면, 노동의 불안정성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치명적이지 않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가능성을 노동의 불안정성을 보완 및 상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노동의 불안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이 쉽게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미래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c. 현재의 일자리를 대체할만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2. 업무의 특성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생기는 일자리의 변화는 그 크기와 범주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근거를 통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진 일자리들이 미래 기술로 인하여 대체되기 쉬운지에 대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예측들이 갖는 정책적 의미는 대체 위험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재교육을 통하여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기술진보에 따라 일자리에 일어나는 변화의 요체는 다양한 계층 간 소득의 균형을 바꿔놓음으로써 불안정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자동화를 통해 대체될 가능성에 대하여 알려진 측면들이다.

첫째, 숙련도에 따른 대체 가능성이다. 노동은 숙련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숙련노동(skilled labor)과 비숙련노동(unskilled labor)으로 나눌 수 있다. 숙련된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의 대체율 차이가 여러 국가의 소득분배, 1인당 소득의 평균 수준, 소득융합의 속도 등 경제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Mello, 2008). 기술진보의 숙련노동 편향성(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은 기술진보가 모든 근로자에게 균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숙련 근로자에게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이인재, 2017). 전통적으로 숙련은 학습의 차원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반복적 학습과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화된 능력(embodied capacity)으로 생각되어 왔다(장홍근 외, 2009). 1970

년대 이후 OECD국가를 중심으로 저숙련 노동과 고숙련 노동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저숙련 노동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다(허재준 외,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개인도 스스로에 대하여 유사하게 예측할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a. 자신의 업무를 통하여 숙련도 및 전문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둘째, 업무의 반복성 및 일상성에 기반한 예측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고숙련(highest skilled)과 저숙련(lowest skilled) 근로자의 고용률은 큰 변화가 없지만 단순 반복적이고 자동화되기 쉬운 중숙련(middle skilled) 직업은 감소하는 경향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업무의 반복성 측면을 주목하였다. 기계가 대체할 수 있으려면, 변수가 적고, 자동화 기술은 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은 중간일자리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간일자리 감소하지만 하위일자리나 상위일자리 증가는 ‘U자 형태’의 일자리 구조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Autor, Levy & Murnane, 2003). 이 연구에서는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작업을 일상적(routine), 비일상적(nonroutine) 작업과 육체적(manual), 인지적(cognitive) 작업의 2×2로 유형화하였는데, 자동화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일상적인 육체적’ 작업이며, 다음으로는 ‘일상적인 인지적’ 작업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였다.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두 측면이 공통점은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며 많은 변화가 필요없는 직무는 자동화시키기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Oesch(2013)의 연구에서도 중간층이 중심이 되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과업의 일자리들 위주로 감소하게 되어, 일자리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b. 자신의 업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느낄수록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IV. 분석 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변수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수행된 웹조사를 기반으로 수집되었다. 총 1,047명이 응답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모든 변수에 응답한 774명의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의 핵심은 기술혁명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는가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진술에 대하여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4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1, 별로 동의하지 않음:2, 약간 동의함:3, 매우 동의함: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나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둘째, “나의 일 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진술은 각각 긍정적 예측과 부정적 예측이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부호가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한 것은 노동의 불안정성, 업무 특성 등이다. 먼저,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고용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였다.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 고용가능성은 각 진술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4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1, 별로 동의하지 않음:2, 약간 동의함:3, 매우 동의함:4)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용 불안정은 “나는 지난 1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직업이 불안정했던 적이 있다”, 소득 불안정은 “나는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불안정했던 적이 있다”, 고용가능성은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동의여부이다. 이 중 고용 불안정과 소득불안정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집합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반해 고용 자체는 불안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직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어있음에도 임금 삭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즉, 하나가 불안정하면 다른 불안정하면 다른 요소도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을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두 변수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델을 분리하였다.

다음으로, 업무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를 통한 숙련도, 비반복성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먼저 숙련도란 하고 있는 업무를 통하여 숙련도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이다. “업무를 통해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는 증가하고 있다.”에 대하여 동의하는 여부를 4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1, 별로 동의하지 않음:2, 약간 동의함:3, 매우 동의함:4)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비반복성은 “귀하가 하시는 주된 일/업무는 어느 정도나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계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10점 척도(매우 반복적:1 반복적이지 않음:10)로 응답한 결과이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영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성향, 과학기술 인식 등을 주요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먼저 자신의 성향에는 창의성 및 영향력이 포함된다. 첫째, 창의성이란 사람의 사고와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행위(Csikszentmihalyi, 1996)를 의미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높은 에너지, 새로운 현상에 대한 끝림, 개방성, 불리한 조건에도 도전하는 끈기 등이 있다(Mintzberg et al., 1976; Feist, 1999). 더욱이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창의성의 가치가 더욱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김상운(2016)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기술, 지식, 제품과 연계 및 융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역량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스스로가 창의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도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요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편이다"의 진술에 대하여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둘째, 영향력은 그 범주와 의미가 모호하긴 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신이 하는 노력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효능감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효능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은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이나 개입 정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다. Kessel(1984)은 시민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가진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으로서 인간의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개념을 영향력으로 표현하였으며, "귀하는 귀하의 노력이 지역공동체나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전혀 영향력이 없음:1; 매우 영향력이 있음:10).

다음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요소를 통제하였다. Lam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각 개인이 준비된 정도를 계량화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낙관성과 혁신성이 높고 불편감과 불안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과학기술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기술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에서 4차 산업혁명 사회 자체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인식하는 것과 새로운 과학기술(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낙관성과 혁신성, 높은 수준의 불편감과 불안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잘 수용하는 사람은 과학기술이 발전된 미래사회도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 하에 해당 요소들을 통제하였다.

이 밖에도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 소득, 종사상지위 등을 통제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측정문항 및 척도이다.

표 1. 측정변수와 설문문항

변수		측정 문항	측정 척도
종속 변수	나의 삶	나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4점 척도 (동의 여부)
	나의 일자리	나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점 척도 (동의 여부)
독립 변수	노동 불안정	고용 불안정 나는 지난 1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직업이 불안정했던 적이 있다.	4점 척도 (동의 여부)
		소득 불안정 나는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불안정했던 적이 있다.	4점 척도 (동의 여부)
		고용 가능성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점 척도 (동의 여부)
	업무 특성	숙련도 업무를 통해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는 증가하고 있다.	4점 척도 (동의 여부)
		자율성 자신이 하고 있는 주된 일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나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동의 여부)
		비반복성 귀하가 하시는 주된 일/업무는 어느 정도나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계십니까?	10점 척도
통제 변수	성향	창의성 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편이다.	4점 척도 (동의 여부)
		영향력 귀하는 귀하의 노력이 지역공동체나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점 척도
	과학기술	난이도 과학기술은 내가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다.	4점 척도 (동의 여부)
		활용 가능성 내가 원하면 나는 새로운 과학기술(제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4점 척도 (동의 여부)
	개인배경	나이 2018년 기준 나이 (만 19~69세)	
		성별 남성=1	
		학력 고졸이하=1, 전문대 졸업 이하=2, 4년제 대졸 이하=3, 대학원 재학 이상=4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없음=1, 0~1=2, 1~2=3, 2~3=4, 3~4=5, 4~5=6, 5~6=7, 6~7=8, 7~8=9, 8~9=10, 9~10=11, 1000만원 이상=12 (n~n+1 : 'n*100만원 초과 (n+1)*100만원 이하'를 의미)	
		종사상 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상용직 임금근로자(피고용자), 임시직 임금근로자(피고용자), 일용직 임금근로자(피고용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생/재학생	

2. 순서형 로짓 분석

본 연구에서 핵심으로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모두 4점 리커트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로 구성된 설문문의 응답이다. 종속변수가 연속적인 등간 혹은 비율 변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순서가 있는 서열 범주인 경우에는 순서형 로짓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Brown & Potoski, 2003; Gujarati & Porter, 2009; 이유진·김의준, 2015). 본 연구와 같이 서베이 형태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리커트척도를 변수로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할 경우, 일반 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면 설명변수의 영향이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엄태호·윤성일, 2013). 따라서 각각의 모형에서 순서형 로짓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V. 연구 결과

1. 기초통계 분석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종속변수 중에서는 직업에 대한 예측이 나의 삶에 대한 예측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람들 사이의 인식 차이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막연하게 자신의 삶을 예측할 때보다 직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독립변수로 활용된 불안정 요소 중 소득 불안정 경험에 동의한 정도가 고용 불안정에 동의한 정도보다 크게 나타나 고용이 안정적임에도 소득에서는 불안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업무의 특성을 살펴보면, 숙련도와 자율성은 평균이 중간값을 넘는 반면 업무에서 비반복성의 평균이 3.94점으로 중간값인 5.5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가 반복적이며 일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이 2.61점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영향력의 평균은 4.81점으로 중간값(5.5)보다 작아 자신이 지역공동체나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이해도와 이용가능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약 57%이며, 평균 나이는 43세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는 4년제 대학 졸업 이하가 405명(52.3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고졸 이하 155명(20.03%), 전문대 졸업 이하 117명(15.12%), 대학원 재학 이상(12.53%)가 뒤를 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단위로 잘라보았을 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63%로 가장 높았다. 종사상 지위로 구분했을 때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442명(57.11%)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표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나의 삶	774	2.573643	0.6683593	1	4
나의 직업	774	2.431525	0.7457259	1	4
고용 불안정	774	2.191214	1.05459	1	4
소득 불안정	774	2.489664	1.059313	1	4
고용가능성	774	2.255814	0.8243927	1	4
숙련도	774	2.828165	0.7528695	1	4
비반복성	774	3.939276	2.288999	1	10
창의성	774	2.613695	0.7043524	1	4
영향력	774	4.807494	2.163533	1	10
난이도	774	2.71447	0.6631084	1	4
활용가능성	774	2.754522	0.6586662	1	4
월평균 개인소득	774	5.074935	2.431907	1	12
월평균 가구소득	774	6.74031	2.720913	1	12
총 주택가격(ln)	774	11.44965	9.642639	0	29.93361
성별(남성=1)	774	.5697674	0.4954287	0	1
나이	774	43.40052	12.07115	19	69
학력	774	2.573643	0.9470471	1	4

2.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는 두 가지로,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한 예측에 동의하는 정도로 구성되었다. 응답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주요한 독립변수인 불안정성에서는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경험이 모델1과 모델3에서 기술혁명 사회에 대한 예측을 부정적으로 하도록 하였다(가설 1-a 채택). 소득 불안정에 대한 경험 역시 모델 2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영향을 예측한 모델 4에서는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가설 1-b 부분 채택). 고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안정성을 겪은 경험은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측하도록 하지만, 소득 불안정은 다른 요인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하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불안정성에서의 집합 개념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불안정성에 대한 보완 개념으로 함께 살펴 본 고용가능성은 모든 모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람들은 현재 일자리와 유사한 수준의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느끼면,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도 자신

의 삶, 직업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가설 1-c 채택).

다음으로, 업무특성에 대한 변수들은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한 예측 모두에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숙련도는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가설2-a 채택). 즉,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통하여 숙련도가 증가하고 있을수록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비반복성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가설2-b 기각). 이는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른 것으로, 개인은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미래에 자동화로 인하여 더 쉽게 대체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았다. 업무가 반복되어도 자신이 해당 업무에서 숙련도가 증가하고 느끼고 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나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나의 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ef.	Std.Err	Coef.	Std.Err	Coef.	Std.Err	Coef.	Std.Err
고용 불안정성	-.2611***	.7703			.2428***	1.2749		
소득 불안정성			-.3252***	.7224			.1075	1.1135
고용가능성	.3608***	1.4345	.3655***	1.4412	-.2488***	.7797	-.2443***	.7832
숙련도	.3574***	1.4296	.3770***	1.4578	-.2968***	.7432	-.3281***	.7203
비반복성	.0306	1.0310	.0286	1.0290	.0088	1.0088	.0119	1.0119
영향력	.1756***	1.1920	.1740***	1.1900	-.0088	.9912	-.0078	.9922
창의성	.3740***	1.4536	.3572***	1.4293	-.0028	.9972	.0188	1.0190
난이도	.2803**	1.3236	.2894**	1.3356	.6581***	1.9312	.6559***	1.9270
활용가능성	.3127**	1.3671	.2965**	1.3451	.1315	1.1406	.1243	1.1323
성별 (남성=1)	.2848*	1.3295	.2798*	1.3228	-.2329	.7922	-.2104	.8103
연령	-.0006	.9994	.0012	1.0012	-.0020	.9980	-.0030	.9970
교육 수준	-.0113	.9888	-.0187	.9814	.0055	1.0055	.0108	1.0109
월평균 가구 소득	.0114	1.0115	.0141	1.0142	-.0325	.9680	-.0373	.9633
월평균 개인 소득	.0439	1.0448	.0369	1.0376	.0750*	1.0779	.0704	1.0730
자산 (총 주택 가격)(ln)	-.0004	.9996	-.0020	.9980	.0037	1.0037	.0033	1.0033
종사상지위	(생략)							

주 : * p<0.1, ** p<0.05, *** p<0.01

한편, 통제변수 중 개인 성향인 창의성과 영향력에 대한 변수는 모두 자신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에 대한 예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 이 변수들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측하도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혁명 사회에서의 변화로부터 자신의 고용을 보장할 것으로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중 난이도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그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였다. 과학기술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영향에서는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유의미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는 것이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과학기술의 영향 자체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자신이 받게 될 영향을 긍정이든 부정이든 크게 동의한다고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대부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예측에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독립변수인 불안정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절대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월평균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변수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종사상지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VI. 결론

사회정책에 대한 통념 중 복지가 삶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의 혁신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논의에 따르면, 사회정책을 통하여 사람들이 삶에서 소득 및 고용에서 불안정성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망을 제공하는 것은 과학기술로 인한 미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혁신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의 혁신성에 도움이 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의 불안정성 경험은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예측하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업무를 통하여 숙련도가 높아지는 직종의 경우, 기술혁명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인이 노동의 불안정성을 겪을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덜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물론 모든 업무에서 숙련도 증가만을 지향할 수는 없으나,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느끼도록 경력개발에 대한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소득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경우, 기술혁명 사회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통제변수로 사용한 소득 및 자산의 객관적인 수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소득의 절대적인 수치가 낮은 것보다, 자신이 기대하는 소득에서 유동성이 생기는 상황에서 개인은 더욱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업무 특성 중 비반복성에 대한 변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국민들의 예측에는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문가들은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대체되는 직업의 주요한 특성으로 일상적인 업무인지를 언급하였으나 국민들은 이와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만약 전문가들의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측과는 다르게 부정적 영향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 자신의 성향 및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스로에 대한 창의성 및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데 기여하는 요소이므로 개인에게 이를 높일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학기술이 이해하기에 지나치게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기술혁명의 효과를 크게 인식하며,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하여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미래에 대한 예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과학기술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줄이도록 하는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이자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모든 변수가 단일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포함된 개념들 중 불안정성, 업무특성 등을 개인의 응답에 의존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함께 측정할 수 있었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혁명은 이미 우리 사회에 다가온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의 방향은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사회적 변화 속에 대응해나가야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그 인식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분석 결과는 개인의 삶에서 불안정성을 최대한 적게 경험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일자리에서의 유연성을 강조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숙련도가 증가하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일상적인 업무에만 사람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창의적인 업무를 강조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구인회. (2003).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 7-30.
- 금현섭·백승주 (2014). 소득격차와 소득변화, 그리고 미래기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1): 141-168.
- 김동규·김중진·김한준·최영순·최재현. (2017).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상윤. (2016).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 POSRI 이슈리포트, 2016(10): 1-13.
- 이민아, 송리라 (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37(4): 89-114
- 이민화. (2016).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국제노동브리프, 14(6): 11-24.
- 이상은. (2018). 4 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사회보장연구, 34(4): 205-227.
- 이유진·김의준. (2015). 의료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농촌 및 도시 지역 거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의 적용.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1): 65-87.
- 이인재.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정책 패러다임. 선진화 정책시리즈, 224-250.
- 이현송. (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7.
- 장필성. (2016). [EU] 2016 다보스포럼: 다가오는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과학기술정책, 26(2): 12-15.
- 장홍근·정승국·오학수. (2009). 숙련 개발 체제 와 노사 관계: 한국·일본·독일의 사례. 한국노동 연구원.
- 정보람·전인수. (2017). 소득수준과 문화적 여건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1(1): 30-51.
- 정현학·최영임·이상원. (4). 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KHIDI BRIEF, 215: 1-28.
- 진형석·남경두. (2017). 기업가정신, 기술준비도, 기술사업화역량이 4 차 산업혁명 인식 및 활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무역연구, 13: 309-327.
- 최진욱. (2017). 제 4 차 산업혁명이 정부 정책분석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4): 223-246.
- 허재준·서환주·이영수. (2002). 정보통신기술 투자와 숙련노동 수요변화. 경제학연구, 50(4): 267-292.
- 허재준. (2017). 4 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노동리뷰, 62-71.
- 황상규. (2016).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용성과 불가역성 (不可逆性). 월간교통, 2-4.
- Arntz, M., Gregory, T., & Zierahn, U. (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Autor, D. H., Levy, F., & Murnane, R. J. (2003).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 economics, 118(4): 1279–1333.
- Autor, D., & Salomons, A. (2017, June). Does productivity growth threaten employment?. In ECB Forum on Central Banking, Sintra, Portugal, 26–28.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8): 1359–1386.
- Brown, T. L., & Potoski, M. (2003). Transaction costs and institutional explanations for government service production decis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3(4): 441–468.
- Brynjolfsson, E., & McAfee, A. (2012). Race against the machine: How the digital revolution is accelerating innovation, driving productivity, and irreversibly transforming employment and the economy.
- Csiks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The work and lives of 91 eminent people*. HarperCollins.
- Deaton, A. (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53–72.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Die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Soc Indic Res* 28, 195–223
- Diener, E., & Biswas-Diener, R. (2002). Will money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57(2), 119–169.
- Easterlin, R. A.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 (473), 465–484.
- Feist, G. J. (1999). 14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on Artistic and Scientific Creativity. *Handbook of creativity*, 273.
- Frey, B. S., &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 (466), 918–938.
- Frey, C. B., & Osborne, M.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The Oxford Martin Programme on Technology and Employment.
- Graham, C., & Pettinato, S. (1999). Assessing hardship and happiness: trends in mobility and expectations in the new market economies. Center on Social and Economic Dynamics.
- Graetz, G., & Michaels, G. (2017). Is modern technology responsible for jobless recove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7(5): 168–73.
- Gujarati, D. N., & Porter, D. (2009). *Basic Econometrics* Mc Graw-Hill International Edition.
- Hunt-Bull, N. (2006). *A Neo-Luddite Manifesto: or Why I Do Not Love Robots*.
- Jahoda, M.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S. E. (2013). *Against technology: From the Luddites to neo-Luddism*. Routledge.
- Kawachi, I., Kennedy, B. P., Lochner, K., & Prothrow-Stith, D.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 (9), 1491–1498.

- Kessel, D. (1984). Hematoporphyrin and HPD: photophysics, photochemistry and phototherapy. *Photochemistry and photobiology*, 39, 851–859.
- Kohlrausch, B., & Rasner, A. (2014). Workplace training in Germany and its impact on subjective job security: Short-or long-term return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4(4), 337–350.
- Lam, S. Y., Chiang, J., & Parasuraman, A. (2008). The effects of the dimensions of technology readiness on technology acceptance: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22(4), 19–39.
- Mello, M. (2008). Skilled labor, unskilled labor, and economic growth. *Economics Letters*, 100(3), 428–431.
- Mintzberg, H., Raisinghani, D., & Theoret, A. (1976). The structure of 'unstructured' decision process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1(2).
- Oesch, D. (2013). *Occupational change in Europe: how technology and education transform the job stru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Parasuraman, A. (2000). Technology Readiness Index (TRI) a multiple-item scale to measure readiness to embrace new technologies. *Journal of service research*, 2 (4), 307–320.
- Pistono, F. (2014). *Robots will steal your job but that's ok. How To Survive the Economic Collapse and be Happy*. Los Angeles.
- Ram, S. (1987). A 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 *ACR North American Advances*.
- Stevenson, B., & Wolfers, J. (2013).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Is there any evidence of sat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 103 (3), 598–604.
- Trevor, C. O. (2001). Interactions among actual ease-of-movement determinants and job satisfaction in the prediction of voluntary turnove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 44 (4), 621–638.
- Veenhoven, R. (2005). Is happiness a trait?. In *Citation Classics from Social Indicators Research* (pp. 477–536). Springer, Dordrecht.
- Zaltman, G. & Wallendorf, M. (1979). *Consumer behavior, basic findings and management implications*. Wiley.

제 5 장

포용국가는 사회혁신을 증진시키는가?

I. 서론

한국사회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령화, 양극화, 청년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성장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사회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이후,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기존의 사회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와 중첩되면서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최영준, 2011).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의 둔화, 개방화의 진전,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재정위기 문제, 사회 내 격차를 심화 시키고 불균형이 확대시키는 양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구 선진국들은 금융자본주의의 성장이 서민층과 중산층의 삶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과 결과 역시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EU를 중심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ors(2010)는 금융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무용('socially useless') 했다는 비판 제기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경제성장만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성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담론이 서구사회에서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혁신은 “사람을 위한(for), 그리고 사람과 함께(with)”하는 혁신으로 정의된다(EC 2013, 10-11). 사회혁신은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목표를 위해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과 산업혁신(industry innovation)을 활용하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장, 정부와 같은 사회주체가 가진 개별적인 노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개인,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공헌 및 사회적 책임 활동, 시민사회의 융합적 노력과 참여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한다.

EU는 이러한 사회혁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럽 전역에서 사회혁신이 새로운 동력이자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다. EU는 2010년에 'EU 2020'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은 2000년 발표된 '리스본 전략'이 불평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담지 못한 채 여전히 경제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EU 2020은 '스마트하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전략'(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이라는 기조 아래 '사회혁신유럽(SIE, Social Innovation Europe)'을 주요 기치로 내세웠으며(EC 2010), 유럽 전역의 다양한 사회혁신 모델 구축과 연구를 위해 기금을 지원하여왔다(Simon & Julie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사회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실천이 전개되어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협동조합법, 사회적 기업법과 같이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

력도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며,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지역화폐 운동, 로컬푸드 운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역량 수준이 낮아 관주도적인 성격이 강하며, 사회적 기업 등 주요행위자의 경우에도 사업 중단 비율이 높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주요행위자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성장만으로 난제화 되어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혁신은 문제의식을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현장 조직을 결성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주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같은 특정 집단이나 조직의 양에 초점을 둔 분석은 일정한 한계를 가짐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회혁신의 근본적 동력은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가진 ‘개인’이기 때문에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고양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최영준, 2018).

이에 본 연구는 ‘사회혁신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개인단위의 사회혁신활동을 추동하는 거시적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혁신은 개인과 기업, 비영리조직, 소셜벤처 등 다양한 미시적 주체들의 활동을 통해 추동되지만, 이에 기반이 되는 거시적 맥락은 사람들의 선호와 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echavarria & Reynolds, 2009). 즉, 사람들은 선호와 행태는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개인적 특성을 형성하거나 발현시켜주는 거시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적 관점에 기반 한 혁신연구는 경제부문의 혁신논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슈페터(Schumpeter, 1934)는 국가의 경제발전정도에 따라 혁신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창업활동이나 혁신이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짐을 지적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Giannetti & Simonov, 2004; Acemoglu et al, 2006; Gries & Naude, 2010).

사회혁신 영역에서도 혁신을 추동하는 행위자와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구조, 환경으로 구성된 생태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TEPSIE, 2014) 그러나 최근 사회혁신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가 대체로 사례위주로 진행되어왔으며, 혁신과정의 특성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정도로 다소 단편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어 경험적인 자료를 통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기업가 정신모니터(GEM)과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활용하여 거시적 맥락변수와 개인의 자원, 특성,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사회혁신과 관련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4장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통계결과 및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혁신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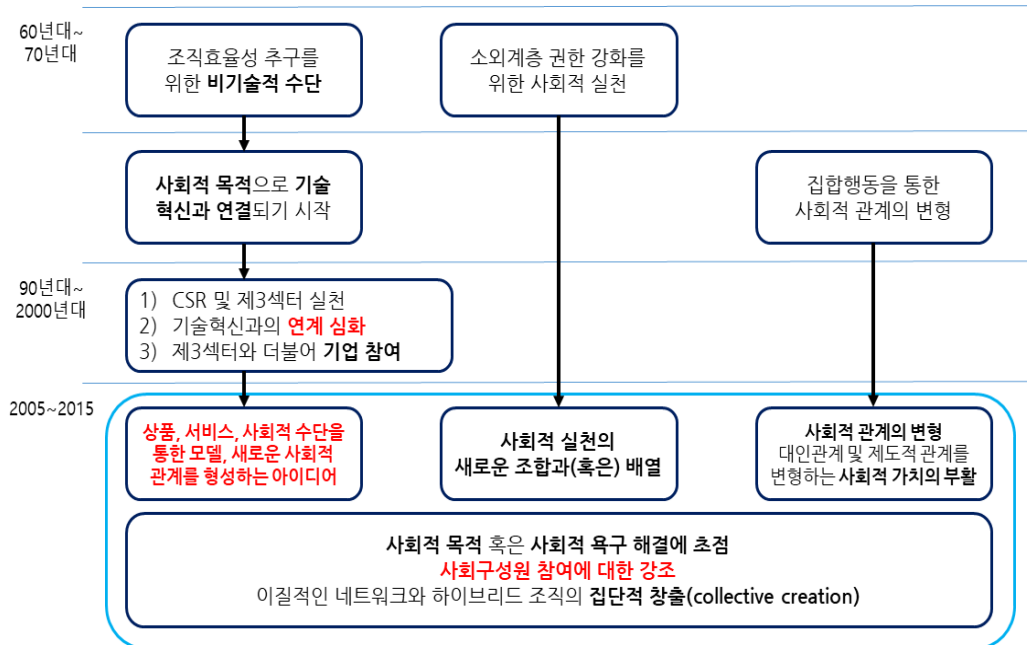
혁신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생산방법, 제품의 발명 또는 창출을 의미한다(Schumpeter, 1942; Manu 1992; Shane & Venkataraman 2000). 혁신은 경제영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혁신은 제품과 과정의 혁신 또는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Edelman et al., 2010), 기업연구(organisational studies)에서는 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되는 새로운 변화를 기술혁신과 구분되는 비기술적 혁신을 사회혁신으로 지칭하기도 한다(Damanpour, 1991). 이는 조직 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방식, 작업조직, 외부관계 등을 개선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CSR 및 제3섹터와 기업활동이 연계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추구가 2000년대 주요화두로 등장하였고,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는 점차 기업활동을 넘어 사회 전체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3). 특히 영국의 NESTA나 Young Foundation과 같은 씽크탱크에서는 기업 부문의 혁신과 구분되는 사회혁신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강조하여왔다(NESTA, 2007; Mulgan 2006, 2014; Young Foundation 2012).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은 기존의 정책수단이나 시장기제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국가나 비영리, 기업, 개인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에 도움이 되며 좋은 것’이 모두 사회혁신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송위진, 2016).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엄밀히 정의되기 보다는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개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EC 2013, 14), EU에서는 사회혁신의 개념의 개방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혁신이 다른 긍정적 사회변화와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3).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사회혁신에 대한 이론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TEPSIE(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s for Building Social Innovation in Europe)는 사회혁신을 사회적 니즈(social needs)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그 목표와 수단이 사회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니즈는 시민사회와 취약계층의 자원과의 접근성과 영향력을 향상시켜 사회관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TEPSIE, 2014: 14-15).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는 경우, 기존의 해결책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적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소외된 집단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시민사회 전체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사회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모든 변화와 변화를 위한 노력을 말한다(Young Foundation 2012, 18). 이러한 개념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은데, 기업 영역에서 사용되던 비기술적 혁신과 소외계층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적 실천과 사회

전체의 관계의 변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1. 사회혁신 개념의 도식



출처: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의 논의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사회혁신의 개념은 사회적 목적 혹은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 실천, 조합과 배열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부 보다는 ‘개인으로서 시민’ 혹은 ‘개인들의 집합으로서 시민사회’를 문제해결에 있어서 핵심 주체로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혁신의 조건

그렇다면, 사회혁신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가? 이에 대한 가장 고전적 논의 중 하나는 시민사회론이다. 토크빌(A. Tocqueville)에 따르면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와 자율성과 다원성과 같은 시민적 습속이 형성되는 장소이다. 시민사회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위치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의 중간영역이다. 토크빌의 시민사회론은 국가주의와 국가권력 확대의 위험성 경고하고, 이를 예방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해 종속되지 않는 시민사회 영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토크빌의 시민사회론은 현재에도 꾸준히 재조명되며 사회 내에 소속된 개인들의 연대감과 소속감, 공공정신의 고양함으로써 경직성과 비효율과 같은 국가실패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신광영, 1994; 김호기 2000; 안소현, 2000; 홍태영, 2001; 박희봉, 2002).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고전적 관점과 구분되어 국가와 시민사회를 대립관계로 바라

보기 보다는 호혜적인 관계로 접근하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Rothstein(2001)은 다른 유럽국가의 시민들에 비해 스웨덴의 시민이 자발적 참여와 연대감이나 공공정신이 높았으며, 자발적 결사나 지역사회 내 모임에 대한 참여율이 더 높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시민사회지수(civil society index) 연구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진다.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민주의 국가들은 시민사회지수에서 가장 상위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Economist, 2015). 국가의 활동성이 높은 사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성이 함께 높다는 것은 국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이 개인의 활동성을 저해하거나 구축하기 보다는 시민으로서 개인의 활동성을 고양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즉, 국가의 활동성이 시민사회의 활동성을 구축하는 관계 보다는 이 두 주체의 활동성이 양립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가의 활동성이 높으면 무조건 사회혁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토크빌의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적극적 활동은 시민사회와 이에 속한 개인의 활동성을 구축(crowding out)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Rothstein(2001)은 사민주의 국가들이 높은 국가역량과 신뢰와 사회적 자본으로 제시되는 높은 시민역량을 가진 사회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이들 사회가 가진 시민사회적 독특성에서 찾고 있다. Rothstein은 시민사회가 가진 독특성을 ‘조직화된 개인주의(organized individualism)’ 혹은 ‘연대적 개인주의(solidaristic individualism)’라는 속성에 주목한다. 이때 연대성은 집단주의(collectivism)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집단주의는 집단 내 속한 개인들이 같은 가치지향을 가지고, 비슷한 삶의 양식(lifestyle)을 공유하며 같은 조직에 속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반면, 연대적 개인주의는 개인들이 타인에 대해 자발적 지원(willing to give support to other individual)을 제공하면서도 타인은 자신과 다른 가치를 지향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하나의 집단이기에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삶의 양식과 조직적 노력(organizational effort)을 펼칠 수 있음에도 자신이 타인을 지지하듯 타인도 자신을 지지할 것에 대한 믿음이다(Rothstein 2001, 219).

이에 본 연구는 개인들 간의 상호지지를 통해 만들어진 안정성이 사회혁신을 추동하는 주요한 조건일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같은 논의는 완전히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서구유럽에서는 경제성장을 침체와 고용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제시한 바 있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탈규제 유연화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안정성을 결합한 모델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왔다(조돈문 2014). 즉, 노동시장 내에서는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지더라도, 해고된 사람의 생활이 국가를 통해 보장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다면 실업으로 인한 불안정(insecurity)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과 고용주에게 노동/고용과 관련해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동시에 노동시장과 국가가 분배를 통해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관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상보성(complementarities)을 기반으로

한다(Bredgaard and Madsen, 201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연안정성 모델이 안정성을 결여된 상황에서 유연성만 강조됨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전병유(2016)는 유연안전성의 실행되는 방식은 유연안정성이 고용정책을 어떤 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합의를 수반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권력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었으며, 그 결과 유연안전성은 결국 유연성으로 귀결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일한 수준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이 아닌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데 치중되어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는데, 안정성은 재정안정화를 강조하는 정책적 맥락에서 충분히 강조되기 어려웠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유연안정성 모델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주요한 조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Muffels and Wilthagen, 2013). 네덜란드 및 북유럽 국가에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관대한 소득보장은 자발적인 직업이동(job mobility)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가능성을 높임으로서 낮은 직업보호(job security)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안정성이 전제될 때, 유연성은 개인에게 안정성 부여를 통해서 자발적인 직업이동이 가능하게 하며 기업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즉,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은 영리적 및 비영리적 파트너, 기부자, 자원 봉사자, 기업들과 연계하며, 이들의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을 발생시키는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사회혁신에 대한 선행연구

서구 국가들에서는 사회혁신이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전략임을 지적하면서 사회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연구를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행위자에 초점을 두는 연구와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자에 초점을 두는 연구의 경우,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개인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사회혁신을 촉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업가 정신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로서의 개인과 조직이 사회혁신에 있어서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Phills et al., 2008; Nicholls and Murdock, 2012; Pue et al., 2015). 이러한 연구에서는 누가 사회혁신가가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여왔다. Bacq et al.(2016)는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9을 활용하여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혁신활동을 비교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향이 사회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acq et al.(2016)는 기업이 경제

적 가치 창출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비중을 두는 경우 사회혁신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음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적 관점은 특정한 구조가 사회적 변화를 불러온다는 관점보다는 구조나 맥락이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Novy and Leubolt, 2005; Cajaiba-Santana 2014).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경제/경영학 부문에서 핵심 담론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Moore, Westley, and Nicholls 2012), 국가 내 벤처캐피털 시장의 크기(Kortum & Lerner, 2001)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식은행 제도(De Bettignies & Brander, 2007) 등이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창업과 기업가의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환경변수의 영향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제시되어왔는데, 사회문화와 같은 거시적 맥락에 창업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며 혁신을 장려하고 사업 실패에도 너그러운 문화에서 창업이 활성화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왔다(Busenitz and Lau, 1996; Koo, Bae, & Kim, 2009). 보다 최근에는 혁신과 사회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Robeyns(2005)와 Harrisson et al.(2012)은 사회보장제도가 민주적 참여와 인간의 역량을 증진시키며 이는 혁신을 추동하는 주요한 기저변수라고 보았다. 사회적 지출이 높은 국가에서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일련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Lundvall 2002; Castells and Pekka 2002; Arocena and Sutz 2012), Ranis and Stewart(2005)은 선진국이 자신의 자원을 의료, 교육, 사회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혁신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혁신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로는 Salamon(2010)이 있다. Salamon(2010)은 기존의 제도가 비영리섹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국가별 차이는 국가별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Salamon, Sokolowski, and Anheier(2000) 및 Salamon and Sokolowski(2010)의 연구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Kerlin(2009)은 이를 사회혁신과 연관성에서 접근하며, 거시적 제도와 과정이 사회혁신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Griffiths et al.(2013)은 2019년 GEM을 활용하여 거시적 맥락적 요인들이 사회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거시적 수준변수로 사회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을 구분하고 사회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erlin(2013)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틀을 차용하여 제도적 맥락이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 거버넌스, 복지지출, 문화와 경제적 변수가 개인의 사회혁신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시민사회의 유형과 경제적 수준이 사회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 Cajaiba-Santana(2014) 역시 제도와 사회시스템 위에서 개인의 활동양상이 정해지고, 이는 사회혁신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보다 최근 연구에서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관계에 대해 경험적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로 GEM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인데, GEM은 개인의 기업가적 활동을 측

정하는 비교가능한 자료로서 2009년과 2015년에 각각 사회혁신활동과 관련한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면서 사회혁신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어왔다. Hoogendoorn(2016)는 34개 국가에 대해 국가수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제도적 환경, 법치수준(rule of law), 사회적 기업 비중, 정부의 공공지출이 사회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수준의 연구에 이어 맥락을 반영한 개인수준의 연구들이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Kerlin et al.(2015)은 2009년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낮은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 활동은 더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Griffiths et al.(2013)은 종교의 자유 허용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ponte et al.(2019) 역시 Kerlin et al.(2015)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2015년 GEM 자료와 UN HDI(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Index)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총생산(GNI)이 낮은 국가일수록 사회혁신 활동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발전수준을 주요한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수준이 낮을수록 사회혁신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지역사회 및 사회공동체를 위해 전개되는 사회혁신활동은 일정 부분 국가체제의 미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즉, 국가체제가 미발달한 저개발 국가의 경우, 민간에서 국가 대신 지역공동체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혁신활동과 IHDI의 부정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혁신에 있어서 소득과 같은 경제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맥락은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GEM 자료는 다양한 경제발전단계에 속한 54개국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제도변수들은 주로 OECD 가입국가들 대상으로 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의 범주를 OECD 국가로 한정하고 혁신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사회보장 수준을 주요변수로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들이 위치한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사회혁신의 양상과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으며, 주요한 제도변수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OECD국가로 분석범주를 한정하면, 보다 다양한 제도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업에 대한 가치관, 태도, 자기효능감 등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인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영향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수준의 인지를 형성한다(이채원, 2017). 이러한 거시사회적 맥락은 새로운 사회혁신을 도모하려는 개인과 집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변 환경의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행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외부요인들은 개인의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여 행동으로 나타난다(Krueger et al., 2000; 한길식, 2007).

III. 방법론

1. 자료와 변수

본 연구에서는 2015년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Adult Population Survey(APS) 데이터를 활용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GEM APS에서 사회혁신활동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최신데이터이며, 창업 관련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 자료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에 주목한 데이터로 국가수준 혹은 지역수준 통계로만 존재해 분석할 수 없었던 개인의 각종 기업가적 활동 및 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징 등에 대해 포착해내는 데 유용하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2015년 GEM APS 조사 국가 중 OECD에 가입되어 있는 28개 국가의 사회혁신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성인이다. GEM 자료는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위치해 있는 54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대상국가들은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요소주도형 경제(Factor-driven Economy), 효율주도형 경제(Efficiency-driven Economy),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로 구분한다. 요소주도형 국가는 총 8개 국가로 아프리카지역 3개국,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 5개국이다. 효율주도형 국가는 총 24개 국가로 아프리카지역 4개국,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 4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 1개국, 유럽지역 7개국이 속한다. 혁신주도형 국가는 총 20개 국가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 3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 9개국, 유럽지역 11개국이다. 본 연구는 OECD 가입국가를 분석범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혁신주도형 경제국가인 한국, 대만, 호주,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가 포함되었고,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칠레와 같은 일부 효율주도형 국가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APS는 개인의 기업가적 속성, 활동 및 열망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설문한 것으로, 매년 국가별 약 2,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한다.¹⁾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인의 사회혁신활동에 대한 시도 의사 또는 경험 여부이다. 개인이 스스로 지역사회, 사회적이거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회혁신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데이터에서 “당신은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회적, 환경적,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Are you, alone or with others, currently trying to start or currently leading any kind of activity, organization or initiative that has a particularly social, environmental or community objective?)”라는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노동활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탈규

1) 2015년 자료의 경우, 스페인, 멕시코, 스웨덴의 경우, 3000명 이상의 샘플이 추출되어 이 경우는 3000명을 무작위 확률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제하지만 안정성을 높게 가지는 거시맥락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독립 변수를 설정하였다. 사회지출 지출의 경우,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고, 유연성과 개방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표(Ease of Doing Business),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도 지표 중 노동자유도(labor freedom), 금융자유도(monetary freedom),를 활용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의 조건으로 실업률 지표를 적용하였고, 문화적 변수로 Griffiths et al.,(2013)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과 기부 수준을 활용하였다. 이외에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자연로그변환한 값을 이용하였다.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한다.

이외에 개인수준의 인구사회적 요인을 통제하였는데, 교육수준은 개인별로 국제표준교육분류(UN ISCED)에 따라 구분한 것을 그대로 이용한다. 연령 수준은 개인별로 일의 자리까지 표기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득자료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수준에 대한 자기보고(self-reporting)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개인변수에서 개인의 심리자본 혁신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가정신을 높인다고 논의되어왔다(Cohn & Fredrickson, 2009), 이는 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근되는데, 사회혁신활동이 경제부문에서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활동에 있어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ron et al.,(2016)은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이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심리자본의 강화가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낮출 때 창업가의 연령이 조절변수 역할을 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그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어 심리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설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변수 설명

구분	변수	내용	출처
종속변수	사회혁신	사회혁신활동 여부 (없음=기준)	GEM 2015
1수준 독립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자=기준)	
	연령	응답자의 연령 (연속변수)	
	학력	응답자의 학력(0=없음, 1=중등수준, 2=중등이수, 3=고등, 4=석사이상)	
	소득	응답자의 소득(하=기준, 3수준)	
	기술수준	기술 보유 유무(없음=기준)	
	심리자본	실패에 대한 두려움(없음=기준)	
	종사상지위	전일, 반일, 자영업 여부(무직=기준)	
	비즈니스 용이성 인식	이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용이하다 (아니다=기준)	
	가구원수	가구 내 구성원 수 (연속변수)	
2수준 독립변수	GDP	GDP의 로그값	세계은행
	실업률	노동인구(labour force) 대비 실업자 비중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지니계수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세후)	OECD
	사회지출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OECD SOCX
	비즈니스 용이성 지수	창업(Starting a business), 자산 취득 및 유지(Registering property), 세금(Paying taxes) 및 계약(Enforcing contracts) 등 10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규제에 대한 종합 성과지표	세계은행
	노동자유도	노동보호 법제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	Heritage Foundation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만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기부지수	국민 중 기부한 지수	Giving Index

2. 분석모형

지역의 특성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각 개인 또는 가구가 밀집되어 형성된 커뮤니티 맥락(context)에 따라서도 개인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동네효과(neighborhood effect)는 지역사회 요인을 따로 고려함에 따라

그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맥락 효과를 견지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개인과 국가적 맥락이 서로 다른 수준, 즉 위계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즉,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는 개인보다는 상위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할 경우 거시적인 분석결과가 미시적인 부분을 간과, 결여하는 경우인 생태학적 오류(Robinson, 1950)와 그 반대의 경우인 원자학적 오류(Alker, 1969)의 문제가 발생한다(이성우, 조중구, 2006).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의 적용이 요구된다.

다층모형은 두 변수간의 관계가 수준이 달라져도 계속 유지되므로 개인수준에서 연구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집단수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박원우·고수경, 2005).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수준의 사회혁신수준에 대해 연구할 경우 국가의 구성단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 또는 기업 수준에 현상이 무시되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개인 또는 기업 수준의 현상과 관계성을 국가 수준에서 일반화 하게 되는 원자적 오류(Atomistic Fallacy)에 노출된다. 다층모형은 생태학적 오류와 인지적 오류를 줄이고 수준 간 상호관련성을 반영하여 개인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이다(Daft, 2004).

본 연구모형은 자료가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 간의 분산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수준의 차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무조건모형에서 결과변수의 평균(Intercep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국가 수준의 평균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수준 분산이 전체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집단 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ICC)²⁾라고 하는데 집단내상관(ICC)값이 최소한 0.05 이상이면 다층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홍세희, 2007), 무조건모형의 집단내상관 계수는 0.13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료의 위계 구조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일반적인 다층모형(multilevel linear model)은 오차항이 모든 위계에서 정규분포함을 가정한다(이성우, 조중구, 2006).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연속변수가 아니므로 연계함수(link function)를 이항로지스틱/프로빗모형을 연계함수로서 차용한다. 다층모형은 종속변수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임의효과의 절편, 기울기 존재 여부에 따라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과 임의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로 구분된다. 즉, 지역 간 차이를 절편에만 두는 것인가, 아니면 절편과 기울기에 모두 두는 것인가의 여부가 두 모형의 구분 근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때의 임의효과란 절편 및 기울기의 추정계수

2) 다층모형에서 응답자들의 응답에 대한 일관성(Consistency)의 정도를 평가 하는 신뢰성(Reliability)을 검증하는데 집단내상관(ICC) 값이 사용된다(Bliese, 2000; Kozłowski & Klein, 2000). 급내상관(ICC) 값이 0.05보다 낮으면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사용하며, 0.05 이상이면 다층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모형 내 변수의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김은영 외, 2018, 홍세희, 2007).

가 2수준인 지역 혹은 집단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절편모형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임의효과가 절편에만 존재하고 있는 임의절편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독립변수별 영향을 고려한 종속변수의 지역 간 차이를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임의효과가 절편에만 존재하는 경우 국가별 종속변수의 기울기는 동일하나 절편만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별 종속변수의 차이를 명확하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임의효과가 절편 이외에 기울기에도 존재하면, 임의효과의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별 종속변수의 차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이산 형태의 종속변수의 자치구별 임의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도 임의효과가 절편 모형에만 존재하는 것이 분석의 용이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1단계:

$$\text{사회혁신} = \alpha_0 + \alpha_1 \text{GDP} + \alpha_2 \text{실업률}$$

2단계:

$$\text{사회혁신} = \beta_0 + \beta_1 \text{GDP} + \beta_2 \text{실업률} + \beta_3 \text{사회지출}$$

3단계:

$$\text{사회혁신} = \gamma_0 + \gamma_1 \text{GDP} + \gamma_2 \text{실업률} + \gamma_3 \text{사회지출} + \gamma_4 \text{비즈니스용이성지수} + \gamma_5 \text{노동자유도}$$

4단계:

$$\text{사회혁신} = \delta_0 + \delta_1 \text{GDP} + \delta_2 \text{실업률} + \delta_3 \text{사회지출} + \delta_4 \text{비즈니스용이성지수} + \delta_5 \text{노동자유도} + \delta_6 \text{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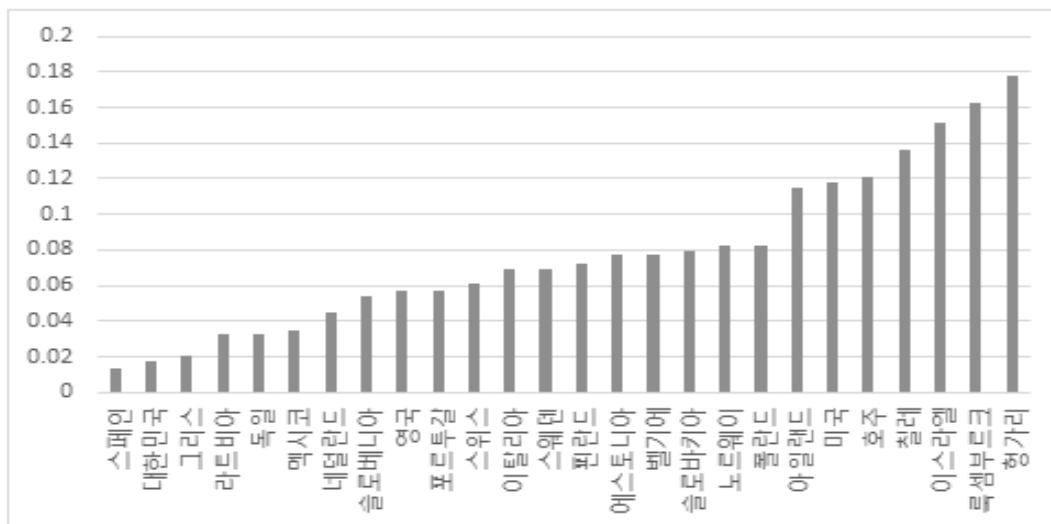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 국의 사회혁신활동 수준을 비롯한 여러 개인변수와 거시 수준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분석에 이용된 26개국 전체 표본의 사회혁신활동(social innovation activity) 경험 여부를 국가별 비율로 각각 살펴

보았다. 사회혁신활동의 수준은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투자정책의 수준이 높고 포용적인 사회정책을 기반으로 한 국가로 평가받는 스웨덴이 사회혁신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불평등이 높은 자유주의 레짐에 속해있는 뉴질랜드와 호주, 미국은 나란히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수주의 레짐에 속해있는 독일과 스페인, 네덜란드는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나타나듯 한국은 사회혁신활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들에 한해 분석하는 것이므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국가들 대비 한국의 사회혁신활동 경험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사회지출과 규제수준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안정성은 낮으나 규제는 수준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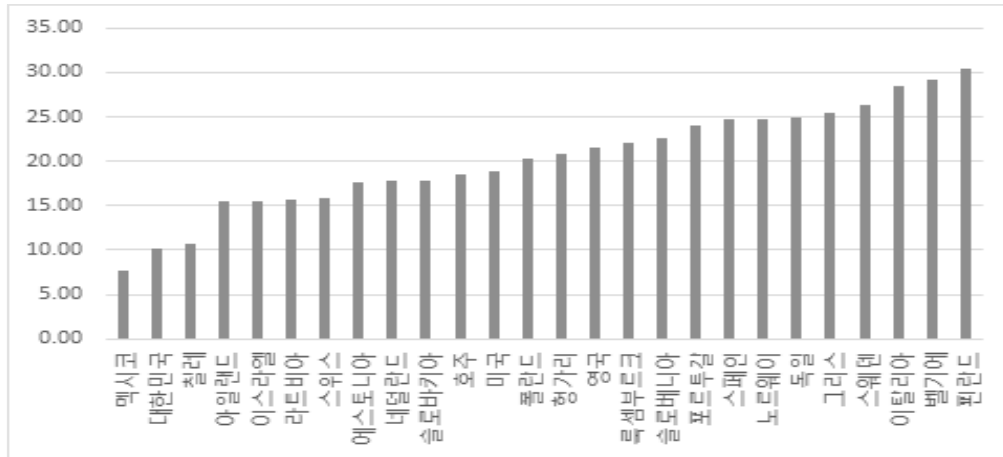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사회혁신활동 비교



출처: GE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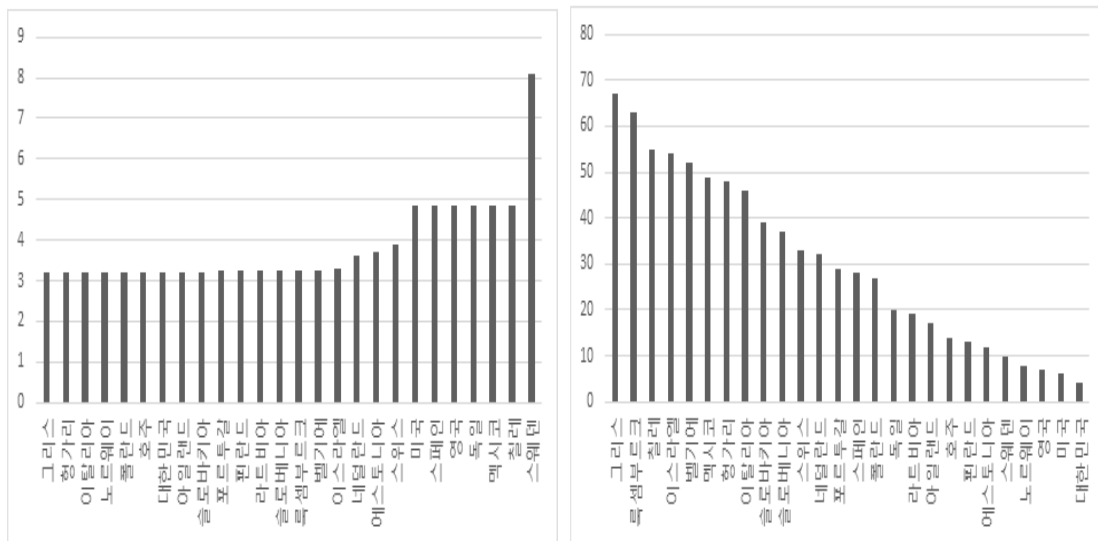
그림 2와 그림3은 독립변수인 보장성과 유연성을 국가별로 비교한 값이다. 사회지출로 제시되는 사회적 안정성의 수준은 핀란드, 벨기에,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멕시코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즈니스 용이성과 노동자 유도의 경우, 세계은행의 지수는 낮을수록 용이하며, GEM에서의 조사수치는 높을수록 용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에스토니아 등이 공통적으로 용이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GEM과 세계은행에서의 조사수치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스웨덴의 경우, 높은 보장성과 높은 포용성을 동시에 가진 국가로 평가된다.

그림 3. 국가별 사회지출 비교



출처: SOCX 2015

그림 4. 국가별 유연성 지표 비교
(좌: 노동자유도 지수, 우: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용이성 지수)



출처: SOCX 2015

표 2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인수준의 통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표이다. 사회혁신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7.6% 수준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42%의 응답자가 대학교육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34.2%는 대학교육, 그리고 7.6%가 석사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 국가가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개발국가를 포함한 샘플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다. 창업을 위한 기술보유에 있어서도 43.4%가 창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상, 중, 하로 구분되며, 자기보고식 응답을 사용하였으며 상, 중, 하가

약 33%의 비중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소득변수의 경우, 다른 변수와 달리 결측값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개인수준 변수를 활용하여 다중대체 방법³⁾을 적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노동지위의 경우,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9.4%, 파트타임은 11.6%, 그리고 자영업은 35.1%로 제시되었다. 표에서 제시되는 않았지만, 노동지위를 국가별 분포로 보면 전일제 노동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49.8%), 노르웨이(42.1%), 라트비아(40.7%), 한국(40%), 포르투갈(37%)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18.5%), 미국(20.2%), 이스라엘(22.3%), 그리고 이탈리아(23.2%)이다. 또한 본인이 현재 은퇴, 실직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노르웨이(19.1%), 독일(23.4%), 라트비아(24.1%)가 가장 낮고, 스페인(50%), 이탈리아(49%), 그리고 이스라엘(47.4%)가 높게 나타났다.

표 2. 개인수준 기술통계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혁신활동성		61,582	0.076	0.264
연령		61,673	43.161	14.886
성별		62,125	0.505	0.500
교육수준	중등	61,462	0.158	0.365
	중등이수(secondary degree)	61,462	0.367	0.482
	대학교육(post secondary)	61,462	0.342	0.475
	석사이상	61,462	0.076	0.264
창업을 위한 기술		59,004	0.434	0.496
실패에 대한 두려움		58,819	0.444	0.497
소득수준	중간계층	51,150	0.327	0.469
	상위계층	51,150	0.333	0.471
가구원수		61,470	3.155	1.665
노동지위	전일제	61,053	0.094	0.291
	파트타임	61,053	0.116	0.320
	자영업	61,053	0.351	0.477

주 1)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제외

3) 다중대체법은 가능한 대체 값의 분포에서 추출된 서로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처리한 복수의 데이터셋을 생성한 뒤(imputation phase), 이들 데이터셋에 대하여 각각 분석을 수행하고(analysis phase), 그 결과 얻은 모수의 추정량과 표본오차를 통합하여(pooling phase) 하나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이다(고길곤, 탁현우, 2016)

2. 다층모형 분석결과

사회혁신 활동 참여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다층분석을 위해 먼저, 국가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살펴보고 이 모형을 통해 얻은 기초적 정보를 토대로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먼저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무조건 모형은 모형 2~3을 해석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모형으로 다층모형의 실시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무조건모형의 검증결과,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상수항의 값이 -2.66로 나타났고 유의하게 제시되어 다층모형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상위수준에 속한 하위수준간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집단내 상관관계(Intra-class correlation)를 계산해보면 0.13으로 나타나 국가간 분산비율을 계산해보면 전체 분산 중 13.%는 국가 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모형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원규모가 크며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회혁신활동에 참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의 창업연구나 혁신연구와 유사한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혁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계수값 역시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의 시민성과 혁신경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석사이상 교육수준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사회혁신에 대한 참여와 관련한 계수값이 가장 높았다.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사회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주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짐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은 생활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창업이나 혁신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하는데,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사회혁신에 대한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사회혁신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급한 변수들은 교육에서 중등교육 이수 이하 및 중간소득층이라고 응답한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파트타임인 사람들이 현재 무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사회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개인수준에서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 혁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제시한다. 18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 5에서 개인이 지각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은 사회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 3. 다층모형 분석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beta\beta$	s.e	$\beta\beta$	s.e	β	s.e
개인수준 변수						
연령	-0.004**	(0.001)	-0.004**	(0.001)	-0.003**	(0.001)
성별(기준: 남성)	0.003	(0.035)	0.003	(0.035)	-0.011	(0.036)
교육수준(기준: 없음)						
중등수준	0.159	(0.107)	0.158	(0.107)	0.159	(0.107)
중등이수	0.338**	(0.100)	0.335**	(0.100)	0.338**	(0.100)
대학교육	0.811***	(0.099)	0.808***	(0.099)	0.807***	(0.099)
석사이상	1.244***	(0.107)	1.242***	(0.107)	1.245***	(0.107)
실패에 대한 두려움 (기준: 없음)	-0.189***	(0.036)	-0.187***	(0.036)	-0.188**	(0.036)
기술수준(기준: 없음)	0.681***	(0.037)	0.683***	(0.037)	0.687***	(0.038)
소득수준(기준: 하)						
중	0.010	(0.051)	0.010	(0.051)	0.009	(0.051)
상	0.159***	(0.048)	0.159**	(0.048)	0.156*	(0.049)
가구원수	0.041**	(0.010)	0.041*	(0.010)	0.042*	(0.010)
종사상 지위(기준:무직)						
전일제	0.048	(0.065)	0.027*	(0.044)	0.033*	(0.044)
파트타임	0.404***	(0.049)	0.075	(0.067)	0.074	(0.067)
자영업	-0.029	(0.044)	0.432***	(0.053)	0.428***	(0.054)
국가수준 변수						
GDP(로그)			0.001	(0.336)	-0.189	(0.407)
실업률			-0.077*	(0.027)	-0.087***	(0.023)
사회지출			0.031	(0.024)	0.045*	(0.021)
기업하기 좋은 환경					0.019**	(0.006)
노동 자유도					0.017**	(0.008)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926	(2.089)
사회통합					0.003	(0.008)
상수	-3.599***	(0.179)	-3.615	(3.423)	-4.752	(3.456)
Random-effects Parameters	0.647	(0.093)	0.548	(0.079)	0.443	(0.066)

선행연구와 달리 GDP 규모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분석샘플이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 국가를 대신해 민간부문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OECD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활동들은 대체로 정책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지출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해석되는데,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회보장이 잘 제공된 국가일수록 사회혁신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또한, 실업률이 낮을수록 사회혁신활동을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거시적으로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있을수록 사회혁신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규제 및 자율성에 대한 변수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의 기업활동용이성 지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노동자유도(labor freedom)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혁신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기업활동용이성지수의 경우, 낮은 점수일수록 규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노동자유도와 반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규제와 노동에 대한 규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회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거시맥락변수와 사회혁신활동의 관계를 2015년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Adult Population Survey 자료를 기반으로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시맥락적 변수가 사회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지출이 높고, 실업률이 낮으며 규제가 낮은 국가의 개인은 사회혁신활동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사회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주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다음과 같은 이론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과 거시맥락적 요인을 포괄으로 고려한 다차원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셋째,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의 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객관화할 수 있다. 사회혁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사회혁신과 영향 요인들에 대해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우선 데이터의 한 계로 산업군별, 기술 수준별, 기업의 규모별 고려를 하지 못 하였으며 횡단면 분석만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전수조사 데이터가 아님에 따라 예상되는 한계를 내포한다. 아울러 공개되어 있는 최신 데이터가 2015년 자료였던 관계로 최신 경향을 포착하지는 못했다는 점도 아쉽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면 연구의 실증적 의의가 더 커질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국내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호기. (2000). 시민사회의 구조와 변동, 1987~ 2000. 한국사회, 3, 63-87.
- 박희봉. (2002).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정부학연구, 8(1), 1-44.
- 송위진. (2016). 혁신연구와 '사회혁신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신광영. (1994).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아시아문화, (10), 145-180.
- 이성우, 조중구. (2006). 공간적, 환경적 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7(2), 57-76.
- 이채원. (2017). A Corporate Entrepreneurship Perspective for the Internet of Things. 한국창업학회지, 12, 143-169.
- 전병유. (2016). 유연안전성 담론과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연구, 22(1), 1-35.
- 정미나. (2016).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사회혁신의 특성과 사회변화, 월간 사회혁신의 시선,
- 최영준. (2011).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부학연구, 17(2), 31-57.
- 최영준. (2018).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 사회적 자유주의와 자유안정성을 향하여. 한국사회정책, 25(4), 39-67.
- 한길석. (2007). 창업교육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47, 379-405.
- 홍세희.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홍태영. (2001). 토크빌 (A. de Tocqueville) 과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한국정치학회보, 35(3), 67-83.
- Acemoglu, D., Cutler, D., Finkelstein, A., & Linn, J. (2006). Did Medicare induce pharmaceutical innov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103-107.
- Alker Jr, H. R. (1969). A typology of ecological fallacies. Quantitative ecological analysis in the spatial science, 69-86.
- Aponte, M., Álvarez, M., & Lobato, M. (2019). Social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A macro-level perspective. Social Business, 9(2), 141-156.
- Arocena, R., & Sutz, J. (2012).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ies for social inclusion: an opportunity for developing countries. Innovation and Development, 2(1), 147-158.
- Bacq, S., Hartog, C., Hoogendoorn, B., & Lepoutre, J. (2011).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Explor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cales Research Reports, EIM Business and Policy Research, 1(1), 3-49.
- Baron et al.,(2016)
- Bredgaard, T., & Madsen, PK (2018). Farewell flexicurity? Danish flexicurity and the crisis.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r and Research , 24 (4),

375–386.

- Busenitz, L. W., & Lau, C. M. (1996). A cross-cultural cognitive model of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4), 25–40.
- Cajaiba-Santana, G. (2014). Social innovation: Moving the field forward. A conceptual framework.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82, 42–51.
- Castells, M., & Pekka, H. (2002).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Welfare State: The Finnish Mod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hn, M. A., & Fredrickson, B. L. (2010). In search of durable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s: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long-term positive behavior chang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5), 355–366.
- Daft, R. L. (2004). *Organization theory and design*. South-Western Pub.
- Damanpour, F. (1991). Organizational innovation: A meta-analysis of effects of determinants and moderato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3), 555–590.
- De Bettignies, J. E., & Brander, J. A. (2007). Financing entrepreneurship: Bank finance versus venture capital.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6), 808–832.
-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Brussels, 3 March 2010.
- European Commission. 2013. *Social innovation research in the European Union: Approaches,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Brussels.
- Edelman, D. C. (2010). Branding in the digital age. *Harvard business review*, 88(12), 62–69.
- Giannetti, M., & Simonov, A. (2004). On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Social norms, economic environment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11(2), 269–313.
- Gries, T., & Naudé, W. (2010). Entrepreneurship and structural economic transform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34(1), 13–29.
- Griffiths, M. D., Gundry, L. K., & Kickul, J. R. (2013). The socio-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eterminan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activity.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 Harrisson et al.(2012)
- Hechavarria, D. M., & Reynolds, P. D. (2009). Cultural norms & business start-ups: the impact of national values on opportunity and necessity entrepreneur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5(4), 417.
- Hoogendoorn, B. (2016). The prevalence and determinants of social

- entrepreneurship at the macro level.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4(sup1), 278–296.
- Kerlin, J. A., Monroe–White, T., & Zook, S. (2015). A quantitative critique of Kerlin’s macro–institutional social enterprise framework. *Social Enterprise Journal*.
- Kerlin, J. A. (2009). Social enterprise: A global comparison. UPNE.
- Kerlin J. A. (2013) Defining Social Enterprise Across Different Context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Institutional Factor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2(1): 84–108
- Koo, J., Bae, J., & Kim, D. (2009). What does it take to become a biotech hot spot?.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27(4), 665–683.
- Kortum, S., & Lerner, J. (2001). Does Venture Capital Affect Innova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undvall, B. Å. (2002). *Innovation, growth, and social cohesion: the Danish model*. Edward Elgar Publishing.
- Manu, F. A. (1992). Innovation orientation, environment and performance: A comparison of US and European marke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3(2), 333–359.
- Moore, M. L., Westley, F. R., & Nicholls, A. (2012). The social finance and social innovation nexus.
- Muffels, R., & Wilthagen, T. (2013). Flexicurity: A New Paradigm for the Analysis of Labor Markets and Policies Challenging the Trade-Off Between Flexibility and Security. *Sociology Compass*, 7(2), 111–122.
- Mulgan, G. (2014). Design in public and social innovation: what works and what could work better. Retrieved, 23(07), 2015.
- NESTA(2007), “Innovation in Response to Social Challenges”, NESTA Policy Briefing, March 2007, NESTA.
- Nicholls, A., & Murdock, A. (2012). The nature of social innovation. In *Social innovation* (pp. 1–30). Palgrave Macmillan, London.
- Novy, A., & Leubolt, B. (2005). Participatory budgeting in Porto Alegre: social innovation and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of state and civil society. *Urban studies*, 42(11), 2023–2036.
- Phills, J. A., Deiglmeier, K., & Miller, D. T. (2008). Rediscovering social innova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6(4), 34–43.
- Pue, K., Vandergeest, C., & Breznitz, D. (2015). Toward a theory of social

- innovation. Innovation Policy Lab White Paper, (2016–01).
- Ranis, G., & Stewart, F. (2005). Dynamic links between the economy and human development. UN.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Vol. 1). sage.
- Robeyns, I.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93–117.
- Robinson, J. R. (1950). Osmoregulation in surviving slices from the kidneys of adult rat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Biological Sciences*, 137(888), 378–402.
- Salamon, L., & Sokolowski, S. (2010). The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variations in the size and structure of the global civil society sector. In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sector research, Istanbul, Turkey.
- Salamon, L. M. (2010). The changing context of nonprofit leadership and management. *The Jossey–Bass handbook of nonprofit leadership and management*, 77–100.
- Salamon, L. M., Sokolowski, S. W., & Anheier, H. K. (2000).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An overview.
- Schumpeter, J.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Schumpeter, J. (1942). Creative destruction.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825, 82–85.
- Shane, S., & Venkataraman, S.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TEPSIE (2014), Building the Social Innovation Ecosystem'. A deliverable of the project: "The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s for building social innovation in Europe" (TEPSIE), European Commission – 7th Framework Programme,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DG Research.
- Young Foundation (2012) Social Innovation Overview: A deliverable of the project: "The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s for building social innovation in Europe" (TEPSIE), European Commission – 7th Framework Programme,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DG Research (<https://youngfoundation.org/wp-content/uploads/2012/12/TEPSIE.D1.1.Report.DefiningSocialInnovation.Part-1-defining-social-innovation.pdf>)